

목 차

1. 경정 1교시	1
2. 경감 1교시	19
3. 경감 2교시	35
4. 경위 1교시	50
5. 경위 2교시	73
6. 경사 1교시	103
7. 경사 2교시	122
8. 경장 1교시	150
9. 경장 2교시	169

2025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 경 정 (1교시) >

- 행정법(01), 국제법(02) -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응시자 유의사항

- 본인의 응시계급, 교시, 과목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신속히 페이지를 넘겨 인쇄 상태 등 파본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문제지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교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교체를 요구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성 명 :

응 시 번 호 :

해 양 경 찰 청

행 정 법

1. 다음 중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 ② 헌법적 신뢰보호는 개개의 국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 미칠 수는 없지만, 입법자는 구법질서가 더 이상 그 법률관계에 적절하지 못하고 합목적적이지 않더라도 그 수혜자 집단을 위하여 이를 계속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③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 ④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방식으로 문서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은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2. 다음 중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법원은 행정행위가 당연무효라면, 선결문제로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 ②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 민사법원은 해당 행정행위가 취소되어야만 그 위법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③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발생하는 효력이다.
- ④ 민사법원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재판의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3. 다음 중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을 감독하는 자가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지는 경찰책임은 자기책임이 아니라 타인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다.
- ② 물건에 대한 권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도 상태 책임이 인정된다.
- ③ 행위능력이 없는 자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 ④ 행위책임의 행위에는 부작위를 포함한다.

4. 다음 <보기> 중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 ㉠ 과세처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조세환급 청구소송
 - ㉡ 부가가치세 환급청구소송
 - ㉢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하는 소송
 -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다투는 소송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

-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5. 다음 중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행정청에게 있다.
- ② 재량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각하할 것이 아니라 그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여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③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사유 소멸을 이유로 한 신청에 대한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다.
- ④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6. 다음 중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 ②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 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포함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공의 영조물’이라 볼 수 있다.
- ④ 광역시와 국가 모두가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 비용부담자로서의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 국가만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된다.

7. 다음 <보기>는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의 사전 통지 방법이다. ()에 해당하는 단어를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 보기 > —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 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행정조사의 (㉡)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 통지(㉣).

- | | ㉠ | ㉡ | ㉢ | ㉣ |
|---|----|----|------|---------|
| ① | 10 | 종료 | 서면으로 | 할 수 있다. |
| ② | 7 | 개시 | 구두로 | 할 수 있다. |
| ③ | 7 | 종료 | 서면으로 | 하여야 한다. |
| ④ | 10 | 개시 | 구두로 | 하여야 한다. |

8. 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② 판례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인정하고 있다.
- ③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 또는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취소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9. 다음 중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령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는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의 재산상 이익은 법령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위 법령에서 정한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 ②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면서’ 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10. 다음 중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므로 예산을 포함하지 않는다.
- ② 행정작용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라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 ③ 모든 행정권 행사는 작용법적 근거가 당연히 요구되기 때문에 법률유보원칙에서 문제되는 것은 조직법적 근거이다.
- ④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으로도 가능하다.

11. 甲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전에 행정청 乙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乙은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적합 통보를 하였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적합 통보를 받은 甲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부분적으로 폐기물처리를 적법하게 할 수 있다.
- ②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는 乙의 재량에 속하고, 사업계획 적합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乙의 재량에 속한다.
- ③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가 있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 요건만 심사한다.
- ④ 甲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경우 甲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12. 다음 <보기> 중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
-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
- ㉣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 ㉤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처분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13. A행정청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甲은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다음 중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취소청구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무효확인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다.
- ② 甲이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않았다면, 그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무효확인 소에는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甲이 과징금부과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임에도 A행정청을 상대로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였는데, 만약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면 무효확인청구는 기각된다.
- ④ 甲이 만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한 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였다면, 甲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위법상태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甲이 제기한 무효확인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14. 다음 중 제3자에게 법률상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연탄공장 건축허가에 대한 구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인근 주민의 취소청구소송
- ② 기존 목욕장영업장 부근에 신설 영업장 허가 처분을 하자 이에 따른 수입감소를 이유로 제기한 기존업자의 취소청구소송
- ③ 구 「해상운송사업법」에 근거한 신규선박운항 사업 면허허가 처분에 대해 당해 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기존업자가 제기한 취소청구소송
- ④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 사전승인처분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취소청구소송

15. 다음 <보기> 중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다음 중 「행정기본법」상 법 적용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신청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 ④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변된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17. 다음 중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업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허용된다.
- ② 부담이 전제가 된 주된 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이 무효가 되면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이다.
- ④ 행정처분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을 붙일 수 없는 부담이라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있다.

18. 다음 중 경찰조직과 경찰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 ② 해양경찰서장은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에게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 ③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④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찰위원회를 두며, 해양경찰위원회의 사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한다.

19. 甲은 공유수면에 주차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관할 시장으로부터 허가기간을 3년으로 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매립하여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였다. 이후 甲이 기간만료 전에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시장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다가 기간만료 후에 甲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다. 다음 중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처분의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② 甲이 받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그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허가는 기간만료로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다.
- ③ 관할 시장의 원상회복명령이 재송제기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이후에는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 ④ 甲이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관할 시장은 이 명령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20. 다음 <보기> 중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공익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
 - ㉡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 ㉢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확약인 우선순위결정
 - ㉣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 ㉤ 한국마사회의 조교사·기수 면허 취소처분
 -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
 - ㉦ 이전의 징계처분을 이유로 공무원시험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하는 행위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1. 다음 중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실개념의 객관화(客觀化)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② 「국가배상법」상 ‘상호보증’은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어 실제로 국가배상이 상호 인정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한다.
- ③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 ④ 어떠한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22. 다음 <보기> 중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
 - ㉡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유한회사 간 체결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 ① ㉠,㉢ ② ㉠,㉡,㉣ ③ ㉡,㉣ ④ ㉡,㉢,㉣

23. 다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 ②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정보공개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24. 다음 중 행정상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는데 행정청의 합리적 재량에 의해 이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이상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행정청이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한다는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건물의 소유자가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 하면 대집행 한다는 뜻을 고지 하였다면 제2차 계고처분은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 ③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이에 터잡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 ④ 「건축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이상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5. 다음 <보기> 중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 |
|----------------|----------|
| ㉠ 행려병자의 유류품 처분 | ㉡ 영수증 교부 |
| ㉢ 재단법인 정관 변경허가 | ㉣ 대집행 계고 |
| ㉤ 도로구역의 결정 | ㉥ 발명특허 |
| ㉦ 귀화허가 | ㉧ 어업면허 |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6. 다음 <보기> 중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고시의 형식으로 정하였더라도 규정 내용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 ㉡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인 사항을 위임한 경우, 포괄적 위임입법금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 대통령령은 행정조직 내부적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총리령·부령은 법제처 심사만 거치면되고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 ㉣ 일단 법률에 근거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법규명령은 나중에 위임법률이 개정되어 그 근거가 없어지더라도 그 효력에 지장이 없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7. 다음 중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③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허용된다.
- ④ 어떤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가 있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않지만, 처분청이 그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확정 후 그 다른 사유를 근거로 별도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28. 다음 중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심판청구에 대하여 인용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결 및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재결을 받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행정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처분사유를 행정소송 계속 중에는 추가·변경할 수 없으나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추가·변경할 수 있다.

29. 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지만 기속력은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미치는 것이지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불리한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 ②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 ④ 과세처분 이후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행하여진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30. 행정청 A는 2024. 2. 1. 甲에게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甲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 1월에 같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행정청 A는 2024. 4. 29.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 경우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기산점이 옳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2024. 2. 1.자 1월의 영업정지처분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 ② 2024. 2. 1.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 ③ 2024. 4. 29.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 ④ 2024. 4. 29.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

31. 다음 중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에서 별도의 수리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상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인·허가 의제는 관계기관의 권한행사에 제약을 가할 수 있으므로 법령상 명문의 근거규정을 필요로 한다.
- ③ 행정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하자가 없다면 취소판결을 할 수 없다.
- ④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라 할지라도 이유·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32. 다음 <보기> 중 대법원 판례에 의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보기 > —
- ㉠ 대집행 계고처분과 대집행의 비용징수
 - ㉡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 인가
 - ㉢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용 배제결정
 - ㉣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와 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 ㉤ 안경사 시험합격 무효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 처분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33. 다음 중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면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고, 별도로 행정청의 수리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 ② 「행정절차법」은 자기완결적 신고를 규정하고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③ 민원사항의 신청서류에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더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신청한 내용의 일부를 행정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내용 전체를 배척하여야 하며 일부에 대해서만 인용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다.

34. 다음 중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다면,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 ②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보호조치가 필요한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③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 ④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35. 다음 중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시정을 명하고 이에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해 준 원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 ④ 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 처분과는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며 이 경우 그 재결의 신청인은 위법한 다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36. 다음 <보기> 중 행정행위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 행정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는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는 허가 상대방에게 제한을 해제하여 공유수면이용권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 ㉢ 토지거래허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특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점에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 ㉣ 행정청의 사립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행위는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보충적 법률행위로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7. 다음 중 현행 「행정절차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지만,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 ② 「행정절차법」은 「국세기본법」과는 달리 행정청에 대해서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 ③ 군인사법령에 따라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진급선발을 취소하더라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다.
- ④ 대법원에 따르면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의결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38. 다음 중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② 행정질서벌은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도 고의나 과실을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 ③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통고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는다.
-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찰서장은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39. 다음 중 행정행위의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된 경우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부당한 수취거부가 없었더라면 상대방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 즉 수취거부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④ 처분서가 처분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40. 다음 <보기> 중 행정재량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 ㉢ 행정청의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의 일탈로 위법한 경우 법원은 전부를 취소할 수 없다.
 - ㉣ 요건 판단과 효과 선택의 문제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는 판단여지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없음

국 제 법

1. 다음 <보기> 중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 섬은 암석이라도 자신의 영해를 갖는다.
- ㉡ 접속수역은 연안국이 당연히 갖게 되는 수역이 아니라 연안국의 선포를 요한다.
- ㉢ 연안국은 명시적인 선언을 통해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
- ㉣ 공해와 독립된 법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심해저의 한계설정은 대륙붕의 바깥한계를 결정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다음 중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직선기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안선이 깊게 굴곡이 지거나 잘려 들어간 지역, 또는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직선기선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 ② 원칙적으로 간조노출지까지 또는 간조노출지로부터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없다.
- ③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게 설정할 수 없다.
- ④ 다른 국가의 영해를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직선기선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3. 다음 중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56조에 규정된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안국은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 ② 연안국은 타국의 해저전선 및 관선의 부설에 대한 허가권을 갖는다.
- ③ 연안국은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 ④ 연안국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다.

4. 다음 <보기> 중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추적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 ㉠ 국제해양법재판소는 「M/V Saiga호 사건 (1999)」에서 기니 정부의 추적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 추적은 시각이나 음향 정선신호가 외국선박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발신된 후 비로소 이를 시작할 수 있다.
- ㉢ 추적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하며, 정선명령을 한 선박은 영해 또는 접속수역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 ㉣ 추적권은 군함, 군용항공기 또는 정부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5. 다음 <보기> 중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의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 국가는 조약에 서명 또는 비준할 때에 유보를 할 수 있으나,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에는 유보를 할 수 없다.
- ㉡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또한 그 철회를 위해서는 동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 ㉢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국가가 유보의 통고를 받은 후 6개월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또는 그 조약에 대한 그 국가의 지속적 동의를 표시한 일자까지 중 나중의 시기까지 그 유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보가 그 국가에 의하여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 ㉣ 유보의 철회는 서면으로 형성되어야 하나,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서면 또는 구두로 형성될 수 있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④ 무력사용금지 원칙에는 직접적인 무력사용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무력사용도 포함된다.

12. 다음 중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인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982년 「유엔인간환경선언(스톡홀름선언)」은 제15원칙에서 사전주의 원칙의 구체적인 요소로 환경영향평가와 입증책임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 ㉡ 사전주의 개념은 독일 「임미시온방지법」 제5조에 규정된 Vorsorge-prinzip에서 유래되었다.
- ㉢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은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해도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효과적 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 ㉣ 1985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과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는 사전주의 원칙을 규정한 국제환경협약이다.

13. 다음 <보기> 중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 ㉠ 모든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강제적인 관할권을 갖는 국제사법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 ㉡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는 당사자 간의 직접교섭에 의한 해결이 시도될 수 없다.
- ㉢ 조정은 제3자의 사실조사 및 법적 구속력 있는 조정안의 제시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 ㉣ 주선 및 중개는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해결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 ㉤ 중재는 분쟁당사국이 합의하여 선정한 재판관에 의한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 ㉥ 1978년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Camp David협정)」은 성공적인 조정 사례이다.

-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14. 다음 중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절차상 소송참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소송참가를 하고자 하는 제3국은 소송참가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 ㉡ 국제공기구(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s)가 당사자인 조약의 해석이 문제되는 ICJ 소송에서 그 국제공기구는 소송참가를 할 수 없고 단지 의견제출만 가능하다.
- ㉢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성질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3국에 대하여 ICJ는 소송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 ㉣ 협약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소송에서 기존 소송 당사국이 아닌 그 협약의 당사국이 소송에 참가할 경우, 그 국가는 판결에 의하여 부여된 해석에 구속되지 않는다.

15. 다음 중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ICJ는 Request for Interpretation of Judgment in the Case concerning the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사례에서 선결적 항변에 대한 판결은 해석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 ㉡ ICJ가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UN안전보장이사회는 당해 사태의 해결을 모색할 수 없다.
- ㉢ ICJ는 LaGrand 사례에서 「UN헌장」 제94조제1항에 규정된 ICJ결정은 재판소에 의해 내려진 최종 판결만을 지칭한다고 판단하였다.
- ㉣ 미국 연방대법원은 Medellin v. Texas 사례에서 ICJ판결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였다.

16. 다음 중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범위 및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무역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한 회원국의 영토에서 다른 회원국 영토 내로의 서비스 공급
- ㉡ 한 회원국의 정부가 비회원국의 정부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공급
- ㉢ 한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다른 회원국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 ㉣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상업적 주제를 통한 서비스 공급

17. 다음 중 「마르텐스 조항(Martens claus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수이론 또는 교전조리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조항이다.
- ② 1899년 헤이그 평화회의 러시아측 대표인 마르텐스의 요청으로 「헤이그 육전협약」에 삽입된 전쟁법의 기본정신에 관한 것이다.
- ③ 조약 혹은 관습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것은 합법이라는 전통국제법의 기본사상을 전쟁법에 관한 한 부인하는 것이다.
- ④ 핵무기 사용 또는 위협의 적법성(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사건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에서 언급되었다.

18. 다음 중 세계무역기구(WTO)와 그에 속한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WTO는 국제기구로서 법인격을 보유하며, 그 기능수행을 위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다.
- ② 일반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의 고위급 대표로 구성되는 WTO 최고의 기관으로, 다자간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진다.
- ③ 각료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고 WTO의 분쟁해결기구(DSB)로서의 임무와 무역정책검토기구(TPRM)의 임무를 수행한다.
- ④ 분쟁해결기구(DSB)는 WTO의 모든 분쟁해결을 위하여 상설기구인 패널과 상소기관(Appellate Body)을 둔다.

19. 다음 중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② 제31조에 따른 해석으로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애매하게 되는 경우 또는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 ③ 조약 문언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 조약의 해석 또는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모든 당사국 간의 추후의 합의를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 ④ 여러 언어로 작성된 조약의 정본들은 달리 합의하거나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20. 다음 중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비차별원칙과 일반적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입물품 자체에 관한 국경세 조정은 GATT 제3조의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한 허용된다.
- ② 「미국-새우 수입규제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GATT 제20조 (g)호에 규정되어 있는 유한천연자원에 생물자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③ WTO 상소기구는 「미국-새우 수입규제 사건」에서 제20조의 각호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에 전문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④ WTO 상소기구는 「EC-석면 사건」에서 제20조 (b)호를 원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과학적 견해를 따를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21. 다음 중 세계무역기구(WTO)체제 하에서 자유무역지역 및 관세동맹 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3국을 협정 체결 이전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된다.
- ② 자유무역지역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역내 관세가 실질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 ③ 제3국에 대해, 자유무역지역 회원국은 단일한 관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관세동맹 회원국은 상이한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
- ④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다.

22. 다음 중 국제연합(UN)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UN헌장에 의하면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이나 사태에 대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총회는 이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어떤 권고도 할 수 없다.
- ② UN총회는 회부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문제를 토의할 수 있다.
- ③ 최근에 안전보장이사회는 표적제재 조치보다는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포괄적 제재’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 ④ 국제연합 회원국의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

23. 다음 중 2006년 ILC 「법적 의무를 창출하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에 관한 적용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두로 발표된 일방적 선언은 이를 명백히 수락한 제3국에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교장관은 법적 구속력 있는 일방적 선언을 발표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로 인정된다.
- ③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방적 선언은 특정 국가가 아닌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해 발표되어야 한다.
- ④ 법적 구속력 있는 일방적 선언에 포함된 의무의 범위에 의심이 발생하는 경우, 그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4. 다음 중 국제법상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의 가입은 기존 회원국들의 집단적 국가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② 승인을 받지 않은 국가적 실체는 국제법상 권리를 향유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③ 1992년 대한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것은 대한민국에 의한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본다.
- ④ 국제연합 회원국은 무력사용으로 수립된 국가를 승인할 수 있다.

25. 다음 중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UN안전보장이사회가 침략국에 대해 경제제재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면, 침략국의 영토점령이 지속되고 있더라도 개별국가의 자위권 행사는 계속될 수 없다.
- ② 「UN헌장」 제51조의 집단적 자위권은 국가 고유의 권리인 바, 피침국의 명시적 요청이나 상호방위 조약과 같은 사전합의가 없어도 제3국은 독자적 판단만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자위권 행사에 요구되는 비례성 원칙은 최초 공격의 방식과 대응방식 간 대칭을 의미한다.
- ④ ICJ는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사례에서 자위권에 관해 「UN헌장」 제51조가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국제관습법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26. 다음 중 교전단체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전단체 승인이 있는 경우 교전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무력충돌은 국제적 무력충돌로 간주된다.
- ② 제3국은 반란지역에서의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전단체 승인을 할 필요가 있다.
- ③ 중앙정부에 의한 교전단체 승인의 효력은 교전단체와 제3국에도 미친다.
- ④ 제3국이 반란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무력충돌에 대해 중립선언을 하는 경우 교전단체 승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7. 다음 중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규정된 공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느 한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영해·내수 또는 군도국가의 군도수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바다의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
- ②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를 가진다.
- ③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 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
- ④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의 충돌 또는 선박에 관련된 그 밖의 항행사고로 인하여 선장 또는 그 선박에서 근무하는 그 밖의 사람의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 또는 징계 절차는 피해 선박의 기국이 형사재판 관할권을 행사한다.

28. 다음 중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영사가 외교행위를 수행할 경우 해당 영사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면제와 특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② 영사는 특별한 사정하에서 접수국이 동의를 할 경우 영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영사는 접수국의 사법절차에서 증인으로 출두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 ④ 접수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영사공관을 수용할 수는 없다.

29. 다음 중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부적법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국가 대표의 부정을 사유로 조약의 부적법을 주장할 수 있는 국가가 사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조약의 유효성에 동의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 ㉡ 기만을 조약의 부적법 사유로 원용할 권리가 있는 국가는 조약 전체에 대해서는 부적법화를 주장할 수 없고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부적법화를 주장할 수 있다.
- ㉢ 조약체결 당시에 존재한 법의 착오가 조약에 대한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형성하는 경우, 착오는 조약의 부적법 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 ㉣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제 원칙을 위반하여 힘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며, 분쟁당사국은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에 관한 분쟁의 결정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

30. 다음 중 비호와 난민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비호를 구하는 난민은 비호를 구하려는 국가의 국내법에 따른 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난민에게 국제법에 따라 입국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 콜롬비아-페루 비호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영토적 비호와 외교적 비호 모두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원칙임을 확인하고 외교적 비호가 중남미 지역에서 국제법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은 난민의 국제적 보호와 난민협약체제의 이행감시 권한을 가지며 이에 근거해 체약국들의 난민 지위 결정 과정에 여러 형태로 관여한다.
-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체약국은 난민에게 동산 및 부동산의 소유권과 기타 관련 권리의 취득 및 부동산의 임대차 등에서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며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일반적인 대우보다 불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31. 다음 <보기> 중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상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보기 > —

- ㉠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 ㉢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경우
- ㉣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 ㉤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 ㉥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된 경우

① ㉠, ㉢, ㉤

② ㉠, ㉣, ㉥

③ ㉡, ㉢, ㉥

④ ㉢, ㉣, ㉤

32. 다음 중 2001년 ILC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행위의 국가 귀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가의 법에 의하여 정부 권한을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이나 단체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 ㉡ 국가기관 또는 정부권한의 행사를 위임받은 개인이나 단체의 행위가 자신의 권한을 초과하였거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 ㉢ 공공당국의 부재 또는 마비 상태로 정부권한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개인 또는 집단이 사실상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그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 ㉣ 국가로 귀속될 수 없는 행위도 국가가 문제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승인하고 채택하는 경우, 이 같은 범위내에서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33. 다음 중 국제법상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는 주권면제에 관한 국내법의 제정 없이 국제관습법의 형태로 주권면제론을 수용하고 있다.
- ② 제한적 주권면제론에서는 주권면제 대상이 국가의 주권적 행위로 한정되고 상업적 행위는 배제된다.
- ③ 미국 연방대법원의 스쿠너 익스체인지(The Schooner Exchange v. McFaddon) 사건 판결은 절대적 주권면제를 지지하는 판례이다.
- ④ 국제사법재판소는 2012년 페리니(Ferrini) 사건에서 국제법상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국가행위에 대해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34. 다음 중 국가책임과 관련된 국제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호르쵸 공장(Chorzów Factory) 사건에서는 조약위반 등 국제법 위반행위가 배상의무를 야기한다고 판결하였다.
- ② 코르푸 해협(Corfu Channel) 사건에서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작위, 부작위 모두를 통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
- ③ 라그랑(LaGrand) 사건에서는 주정부 행위가 연방정부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 ④ 1974년 핵실험(Nuclear Tests) 사건에서는 국가의 일방적 행위를 통해서도 국제의무가 창설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35. 다음 <보기> 중 국제연합(UN)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UN의 예산은 총회가 심의하고 승인한다.
- ㉡ UN인권이사회는 UN의 주요기관이다.
- ㉢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UN 사무총장 선출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총회는 임무 수행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 이사국 이외의 회원국도 자국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토의에 참석하여 투표할 수 있다.
- ㉥ 안전보장이사회는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를 위한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6. 다음 중 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회원국의 UN 가입의 승인은 중요문제로서 그 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한다.
- ② 사무국은 UN의 주요기관으로서 1인의 사무총장과 UN이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하고,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총회가 임명한다.
- ③ 총회에 의하여 그러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UN의 전문기구는 그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회원국은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37. 다음 중 국가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승계는 사법상 상속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상속인의 사망을 전제로 하는 사법상 상속과는 달리 선행국의 소멸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는다.
- ② 국가승계 시 자연인의 국적 처리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 등이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 ③ 「국가재산·문서 및 부채에 관한 국가승계 협약」에 따르면, 국가승계로 인한 국유재산의 이전에는 선행국과 승계국 간 보상이 요구되며, 승계지역 내 제3국 재산은 승계로 영향받지 않는다.
- ④ 「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국가승계의 유형에 따라 기존 조약의 효력을 달리 규정하였다.

38. 다음 중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국 대법원은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 조약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② 영국에서 조약은 의회 제정법을 통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 ③ 미국에서 대부분의 인권조약은 이행법을 제정 없이도 재판규범으로 인정받고 있다.
- ④ 한국 법원은 특별한 입법조치 없이 관습국제법을 적용할 수 있다.

39. 다음 중 2001년 ILC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 초안」상 대응조치(countermeasure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응조치는 가능한 한 문제가 된 의무의 이행을 재개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취해져야 한다.
- ②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외교관과 영사, 공관 및 문서의 불가침성을 존중할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 ③ 대응조치는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취해질 수 없다.
- ④ 국가는 자국의 권리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의무위반국에게 통지하거나 교섭을 제의하기 전에는 긴급 대응조치를 취할 수 없다.

40. 다음 중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형사재판소는 상설적 기구이며, 이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국제적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② 동 규정상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개정은 당사국, 절대과반수의 재판관, 소추관에 의하여 제안될 수 있다.
- ③ 재판소는 이 규정의 발효 후에 범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만 관할권을 가진다.
- ④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연합헌장 제7장에 따라 채택하는 결의로 재판소에 수사 또는 기소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6개월의 기간 동안은 이 규정에 따른 어떠한 수사나 기소도 개시되거나 진행되지 아니한다.

2025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 경 감 (1교시) >

- 행정학(03), 해양법(04) -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응시자 유의사항

- 본인의 응시계급, 교시, 과목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신속히 페이지를 넘겨 인쇄 상태 등 파본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문제지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교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교체를 요구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성 명 :

응 시 번 호 :

해 양 경 찰 청

행 정 학

1. 다음 중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네거티브리스트는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 ② 규제의 역설 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다보면 사회 전체의 위험수준은 증가한다.
- ③ 규제일몰제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것이다.
- ④ 규제샌드박스 중 임시허가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허가 근거 법령이 모호하거나 금지하고 있을 때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해당 규제를 면제·유예시키는 것이다.

2. 다음 중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실패를 초래한다.
- ②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공공재의 존재는 정부실패를 초래한다.
- ③ 정부활동을 위한 비용은 조세를 통해 확보되기에 비용과 수입이 분리되어 정부실패를 초래한다.
- ④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규제 등이다.

3. 다음 중 정책수단의 한 형태인 바우처(voucher)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위한 방식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 ②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결탁 또는 바우처 전매 등으로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살라몬의 행정수단 유형 분류에 있어서 민간위탁과 같이 직접성이 매우 높은 행정수단이다.
- ④ 저소득층에게 식품, 교육 등의 복지제공을 위해 종종 사용된다.

4. 다음 중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과학적 관리론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자기만의 최선의 방식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 ② 과학적 관리론이 바라보는 인간은 맥그리거(D.McGregor)의 Y이론이 제시하는 인간형과 일맥상통한다.
- ③ 호손실험은 과학적 관리방법의 실증적 근거가 되었다.
- ④ 인간관계론은 조직의 성과제고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며 조직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5. 다음 중 <보기>의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보기 > —

- 1960년대 미국 사회의 사회혼란을 해결하지 못하는 학문적 무력감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났다.
- 1968년 미국 미노브룩회의에서 왈도의 주도하에 새로운 행정학의 방향모색으로 나타났다.
- 적실성, 참여, 변화, 가치, 사회적 형평성 등에 기초한 행정학의 독자적 주체성을 강조했다.

- ① 고객중심의 행정, 시민의 참여, 가치문제 등을 중시했다.
- ②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지향적 행정학을 요구하였다.
- ③ 행정의 능률성을 강조했으며, 논리실증주의 및 행태주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 ④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사회적 형평을 실현해야 한다는 행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6. 다음 중 신제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 때문에 새로운 제도적 관행이 채택된다고 주장한다.
- ②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경로의존적인 사회적 인과 관계를 강조하므로 특정 제도가 급격한 변화에 의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한다.
- ③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공통점은 제도의 개념을 동태적인 것으로 파악하면서, 국가 간 차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다.
- ④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사례 중심의 귀납적 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7. 다음 중 탈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과보다는 공공책임성을 중시하는 인사관리를 강조한다.
- ②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를 축소하고, 조정을 증대한다.
- ③ 탈관료제 모형에 기반하여 경쟁과 분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④ 부분보다는 전체의 시각에서 정부 조직을 개혁 하자는 ‘한 정부(whole of government)’를 강조 한다.

8. 다음 중 정책유형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로위(Lowy)는 정책을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대상에 따라 분배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하였다.
- ② 분배정책은 참여자들 간의 정면대결보다는 갈라먹기(log-rolling)에 의해 이뤄지며, 이해관계보다는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
- ③ 구성정책은 헌정수행에 필요한 운영규칙과 관련된 정책으로 선거구의 조정, 정부의 새로운 조직이나 기구의 설립, 공직자의 보수 등에 관한 정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
- ④ 규제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강제력이 특징이다.

9. 다음 중 정책문제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주체와 객체의 행태는 주관적이지만 정책 문제는 객관적이다.
- ② 정책문제는 당위론적 가치관의 입장에서 정의 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특정 문제의 발생 원인이나 해결방안 등은 다른 문제들과 상호 연관성을 갖는다.
- ④ 정책수혜집단과 정책비용집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차별적 이해성을 갖는다.

10. 다음 중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의사결정의 행태는 정책과정 중 정책문제 채택 단계 이외에서도 발생한다.
- ②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이 논의되고 불리한 이슈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된다고 한다.
- ③ 위협과 같은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특정한 이슈의 등장이 방해받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 ④ 조직의 주의집중력과 가용자원은 한계가 있어 일부 사회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선택된다고 주장한다.

11. 다음 중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와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참여자 수와 관련하여 정책공동체는 극히 제한적이며 의식적으로 일부 집단의 참여를 배제하기도 하나,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다.
- ② 합의와 관련하여 정책공동체는 어느정도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이 있고, 이슈네트워크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한다.
- ③ 이익의 종류와 관련하여 정책공동체는 경제적 또는 전문직업적 이익이 지배적이나, 이슈네트워크는 관련된 모든 이익이 망라된다.
- ④ 네트워크 내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정책공동체는 근본적인 관계가 교환관계이고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슈네트워크는 근본적인 관계가 제한적 합의이고 어떤 참여자는 자원보유가 한정적이다.

12. 다음 중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한 후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국무총리는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④ 국무총리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3. 다음 <보기> 중 팀제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 보기 > —

- ㉠ 결정과 기획의 핵심 기능만 남기고 사업집행 기능은 전문업체에 위탁한다.
- ㉡ 역동적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 ㉢ 기술구조 부문이 중심이 되고 작업 과정의 표준화가 주요 조정수단이다.
- ㉣ 관료제의 병리를 타파하고 업무수행에 새로운 의식과 행태의 변화 필요성으로 등장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14. 다음 중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관장에게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관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 ②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강하고 성과관리가 어려운 분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 ③ 일반행정기관과 비교할 때 예산과 인사관리의 재량권이 있다.
- ④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민영화하기 어려운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15. 다음 <보기> 중 업관제와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업관제의 확립은 행정의 전문화에 도움이 된다.
- ㉡ 업관제는 집권정치인들이 공무원을 통솔하는데 도움이 된다.
- ㉢ 업관제의 발전은 정당정치의 발달과 관련이 깊다.
- ㉣ 직업공무원제의 신분보장은 젊은 사람이 공직을 본업으로 삼아 일생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려는 적극적 의미를 지닌다.
- ㉤ 직업공무원제는 채용시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중시한다.
- ㉥ 직업공무원제는 직위분류제와 폐쇄형 임용체계를 중요시 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6. 다음 중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엄정한 능력에 따른 채용을 통해 관료를 선발한다.
- ② 관료들이 출신집단의 이익과 무관하게 전체적 이익에 봉사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 ③ 대표관료제의 한계로 국민주권의 원리 위반, 역할론적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 내부통제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 ④ 관료제의 인적 구성측면을 강조하며 관료제의 대표성과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17. 다음 중 재정준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채무준칙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채무 규모에 상한선을 설정한다.
- ② 재정수입준칙은 조세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 ③ 재정지출준칙은 경제성장률이나 재정적자 규모의 예측에 의존하지 않는다.
- ④ 재정수지준칙은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설정되므로 경제 안정화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18. 다음 중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입과 세출은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② 통합재정의 범위에는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가 포함된다.
- ③ 정부의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의 분류체계이다.
- ④ 통합재정 산출 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세입·세출을 순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19. 다음 중 조세지출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제 지원을 통해 제공한 혜택을 예산지출로 인정하는 것이다.
- ② 예산지출이 직접적 예산 집행이라면 조세지출은 세제상의 혜택을 통한 간접지출의 성격을 띤다.
- ③ 직접 보조금과 대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④ 조세지출은 예산과 달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으므로 유연하게 설정 가능하다.

20. 다음 중 바스(Bass) 등이 제시한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리더는 구성원 개개인의 니즈에 관심을 가지며 잠재력 개발을 돕는다.
- ② 조직참여의 기대가 적은 경우 적합하며 예외관리에 초점을 둔다.
- ③ 리더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구하도록 구성원을 자극하고 변화를 유도한다.
- ④ 리더는 조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21. 다음 중 롬젝(Romzeck)과 두브닉(Dubnick)의 행정책임성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료적 책임 - 조직 내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통제된다.
- ② 법적 책임 - 표준운영절차나 내부 규칙(규정)에 따라 통제된다.
- ③ 전문가적 책임 - 전문직업적 규범과 전문가집단의 관행을 중시한다.
- ④ 정치적 책임 - 민간 고객, 이익집단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가를 중시한다.

22. 다음 중 사바스(Savas)가 구분한 네 가지 공공서비스 유형과 내용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요금재(toll goods): X-비효율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정부가 공급한다.
- ② 집합재(collective goods): '무임승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③ 시장재(private goods): 경합성과 배제성을 동시에 갖는 서비스이다.
- ④ 공유재(common pool goods): 과잉소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3. 다음 중 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 ②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구체적일수록 정책집행이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 있다.
- ③ 불특정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특정한 집단이 배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에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 ④ 배분정책은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에 비하여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24. 다음 중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 ②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 ③ 실체설은 사익과 차별화되는 공익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익이 행정의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④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25. 다음 중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업의 표준화나 공식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구성원 간 업무상 갈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 ② 구조적으로 수평적 분화는 높은 반면 수직적 분화는 낮고, 공식화 및 집권화의 수준이 낮다.
- ③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최근에는 전통적 관료제 조직모형을 전면 대체할 정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 ④ 대표적인 예로는 네트워크, 매트릭스 조직 등을 들 수 있다.

26. 다음 중 정책평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니터링은 과정평가에 속하지만 집행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이다.
- ② 형성평가는 정책집행 도중에 과정의 적절성과 수단·목표 간 인과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 ③ 형성평가는 집행이 종료된 후 정책이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했는지 초점을 맞춘다.
- ④ 형성평가는 주로 내부 평가자 및 외부 평가자의 자문에 의해 평가를 진행하며, 정책집행 단계에선 정책 담당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27. 다음 중 공직윤리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등 법적제재 대상이 된다.
- ② 지방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경기도의 교육장은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 의무가 있다.
- ④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 등록의무자 모두가 등록재산 공개대상은 아니다.

28. 다음 중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② 과거 중앙예산기관과 결산관리기관을 분리하기도 했다.
- ③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용, 총괄예산, 계속비, 배정과 재배정 제도가 있다.
- ④ 예산 불성립 시 조치로서 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9. 다음 <보기> 중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전략 및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경제적 손실보상, 임용상 불이익 방지는 규범적·사회적 전략이다.
 - ㉡ 개혁지도자의 신망 개선, 의사전달과 참여의 원활화, 사명감 고취는 공리적·기술적 전략이다.
 - ㉢ 교육훈련과 자기계발 기회 제공은 규범적·사회적 전략이다.
 - ㉣ 개혁시기의 조정은 강제적 전략이다.
 - ㉤ 저항을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공리적·기술적 전략이다.
 - ㉥ 개혁지도자의 카리스마나 신망의 활용은 강제적 전략이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0. 다음 중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따른 경우 조직 구성원의 직무수행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 ① 내가 노력하면 높은 등급의 실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치(expectancy)가 충족되어야 한다.
- ② 내가 높은 등급의 실적평가를 받으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수단치(instrumentality)가 충족되어야 한다.
- ③ 내가 받을 보상은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는 유인가(valence)가 충족되어야 한다.
- ④ 내가 투입한 노력과 그로 인하여 받은 보상의 비율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공평해야 한다는 균형성(balance)이 충족되어야 한다.

31. 다음 중 「국가재정법」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예산의 원칙 중 하나이다.
-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해야 한다.
- ③ 정부의 기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2. 다음 <보기> 중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 공무원이 반응해야 하는 대상을 고객과 유권자 집단으로 본다.
- ㉡ 책임성 확보방법으로 개인이익의 총합을 통해 시민 또는 고객집단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창출하는 방법을 추구한다.
- ㉢ 행정재량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제약과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 ㉣ 공익의 개념은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이다.
- ㉤ 공무원의 동기를 유발하는 수단은 정부규모를 축소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욕구와 사회봉사이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3. 다음 중 정책의제설정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공고화형은 대중의 지지가 낮은 정책 문제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해결을 설명한다.
- ② 동원형 의제설정은 정부 외부의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특정사회 문제가 정부개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 ③ 내부접근형 의제설정은 일당제 국가에서 최고 통치자나 고위정책결정자가 주도적으로 정책 의제를 형성하는 것이다.
- ④ 동원형의 경우 정부의제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중의제화하지만, 내부접근형에서는 정부가 공중의제화하는 것을 꺼린다.

34. 다음 중 근무성적평정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내최고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일을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평정자에게 높은 근무성적평정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상동적 오차이다.
- ② 초두효과(primary effect)는 근무성적평정기간에 가장 근접한 기간의 업무수행 실적일수록 평정에 더 크게 반영하는 오류를 말한다.
- ③ 평정자가 피평정자를 잘 모르는 경우 집중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 ④ 총계적 오류는 평정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규칙적 오류이다.

35. 다음 중 공공지출관리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세가지 규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량적 재정규율이란 예산총액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시적 예산결정을 토대로 자원배분을 이루려는 개념이다.
- ② 배분적 효율성은 각 재정부문 간 자원배분을 통한 재정지출의 총체적 효율성을 도모하는 개념으로, 예산지출의 편익이 큰 분야에 예산액을 집중할 때 배분적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 ③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 ④ 배분적 효율성이 부문 내의 배분을 중시하는 효율성이라면, 운영상 효율성은 부문 간의 효율성을 말한다.

36. 다음 <보기> 중 공무원 임용시험의 효용성을 측정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구성타당성이란 결과 측정을 위한 도구가 반복적인 측정에서 얼마나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이다.
- ㉡ 수렴적 타당성은 다른 개념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그 측정값 사이의 상관성 정도를 의미한다.
- ㉢ 재시험법, 반분법은 시험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이 중 재시험법은 시험의 종적 일관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 ㉣ 동시적 타당성검증과 예측적 타당성검증은 구성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수단이다.
- ㉤ 내용타당성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에 관한 요소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이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7. 다음 중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할인율이 높을 때는 장기투자 사업보다 단기간에 실현되는 단기투자 사업이 유리하다.
- ② NPV가 0보다 크고 B/C가 1보다 큰 경우 일단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 ③ 내부수익률은 할인율을 알지 못해도 사업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분석기법이다.
- ④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38. 다음 중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품목별예산제도는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 ② 영기준예산제도는 점증주의적 예산편성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개발되었다.
- ③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사업성고가 좋은지 나쁜지의 결과에 초점을 두며 예산을 들여 사업과 활동별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기 어렵다.
- ④ 목표관리예산제도(MBO)의 정책결정 방식은 분권적·참여적이다.

39.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분석기법은?

— < 보기 > —

관련사건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에 기초하여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식견 있는 판단(informed judgements)을 끌어내는 방법이다.

- ① 브레인스토밍 ② 교차영향분석
③ 델파이 기법 ④ 선형경향추정

40. 다음 중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 ②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 ③ 사전에 결정된 예산의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한다.
- ④ 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해 양 법

1.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수면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지 않아도 선박 위치를 통보해야 하는 선박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석유류 액체화학물질 등 위험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선박
- ②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예인선
- ③ 「해상교통안전법」 규정에 따른 조종불능선·조종 제한선 및 흘수제약선
- ④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중 항행시간이 12시간 이상인 선박

2. 다음 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안전검사증에 해당 동력수상 레저기구의 정원·운항구역 등을 지정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 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 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검사필증의 발급은 정기검사와 임시검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 ③ 안전검사증·안전검사필증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④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등에게 신고하고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다.

3. 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만재흘수선을 표시하여야 하는 선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박길이가 10미터인 여객선
- ② 선박길이가 12미터인 일반화물선
- ③ 선박길이가 10미터인 유람 범선
- ④ 선박길이가 10미터인 위험물 산적 운송선

4. 다음 <보기>는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게 연결된 것은?

— < 보기 > —

- ㉠ 다른 선박을 끌고 있거나 밀고 있는 선박은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연속하여 ()의 기적 ()을 울려야 한다.
- ㉡ 끌려가고 있는 선박은 승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연속하여 ()의 기적 ()을 울려야 한다.

- ① ㉠ 3회, 장음 1회에 이어 단음 2회
㉡ 4회, 장음 1회에 이어 단음 3회
- ② ㉠ 3회, 장음 2회에 이어 단음 1회
㉡ 4회, 장음 2회에 이어 단음 2회
- ③ ㉠ 4회, 장음 1회에 이어 단음 3회
㉡ 3회, 장음 1회에 이어 단음 2회
- ④ ㉠ 4회, 장음 2회에 이어 단음 2회
㉡ 4회, 장음 1회에 이어 단음 3회

5. 다음 중 「유선 및 도선 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관할관청이 유·도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유·도선 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개선 명령 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 정지
- ② 선원의 증원 또는 교체
- ③ 유·도선장시설의 개선·변경 및 원상복구
- ④ 운항 약관의 변경

6.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우선피항선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선(예인선이 부선을 끌거나 밀고 있는 경우의 예인선 및 부선, 예인선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은 제외)
- ②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 ③ 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
- ④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7. 다음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특별심판부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해양사고시 구성할 수 있다.
- ② 선박이나 그 밖의 시설의 피해가 현저히 큰 해양 사고시 구성할 수 있다.
- ③ 특별심판부는 심판관 3명과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장으로 구성하되, 지방심판원장이 심판장이 된다.
- ④ 10명 이상이 부상당한 해양사고시 구성할 수 있다.

8. 다음 중 「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장의 공법상의 의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난 선박 등의 구조
- ② 선박의 직접 지휘
- ③ 재외국민의 송환
- ④ 행정기관에 대한 원조 요청

9. 다음 중 「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조치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시신 인도 방법을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 ②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경우, 국내항으로의 시신 인도방법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 ③ 구조된 대한민국 국민이 선박에서 사망한 경우, 시신 인도방법을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 ④ 구조된 외국인이 선박에서 사망한 경우, 시신 인도방법을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10. 다음 중 「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을 항행하는 총톤수 500톤의 여객선 선장은 최저 몇 등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가?

- ① 2급 항해사
- ② 3급 항해사
- ③ 4급 항해사
- ④ 5급 항해사

11. 다음 <보기>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임시승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 선원과 동승하여 생활하는 선원의 가족
- ㉡ 선박채권자
- ㉢ 선박임차인
- ㉣ 선박관리인
- ㉤ 선박의 수리작업 등을 위한 작업원
- ㉥ 국가선박을 이용하여 항만을 견학하는 자
- ㉦ 낚시어선의 승객
- ㉧ 가축을 운송하는 차량의 화물관리인

-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12. 다음 <보기>는 「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서 규정하는 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인가의 취소·정지 사유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게 연결된 것은?

< 보 기 >

- ㉠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 사업계획상 운항개시일부터 () 이내에 운항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은 후 인가 실시일부터 () 이내에 인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① | 1개월 | 2개월 | 15일 |
| ② | 2개월 | 1개월 | 15일 |
| ③ | 1개월 | 2개월 | 10일 |
| ④ | 2개월 | 1개월 | 10일 |

13. 다음 중 「수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과징금의 용도 및 사용비율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업지도사업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② 어장정리사업에 필요한 경우라도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지도·단속·수사 담당공무원의 지도·단속근무수당 및 수사비는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 ④ 불법어업지도·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다른 행정기관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단속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사용하여야 한다.

14. 다음 중 「선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한국선박이 선박의 뒷부분에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항을 출입하는 경우
- ② 대한민국의 해안망루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 ③ 해양경찰청 소속의 항공기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 ④ 관할 시·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15. 다음 <보기>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상 대한민국의 권리 행사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게 연결된 것은?

< 보 기 >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 수역에서는 행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간선”이란 그 선상의 각 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기선상의 가장 (㉡) 점까지의 직선거리와 관계국의 기선상의 가장 (㉢) 점까지의 직선거리가 같게 되는 선을 말한다.

- | | ㉠ | ㉡ | ㉢ |
|---|-----|-------|-------|
| ① | 바깥쪽 | 가까운 | 가까운 |
| ② | 바깥쪽 | 멀리 있는 | 가까운 |
| ③ | 안쪽 | 멀리 있는 | 가까운 |
| ④ | 바깥쪽 | 멀리 있는 | 멀리 있는 |

16. 다음 중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만용역업’에 속하는 행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
- ② 선박의 청소(유창 청소를 포함), 오물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운반, 화물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 ③ 본선을 경비하는 행위
- ④ 본선의 이안 및 접안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17. 다음 <보기> 중 「항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만시설에서 ‘기능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 ㉡ 대기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 ㉢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 ㉣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 ㉤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 ㉥ 항만시설용 부지
- ㉦ 보관창고,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 ㉧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8.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방사성물질과 관련한 해양환경관리 및 해양 오염방지에 대하여는 「해양환경관리법」 규정을 따른다.
- ② 환경관리해역(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에 적용한다.
- ③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한다.
- ④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에 적용한다.

19. 다음 <보기>는 「도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관련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게 연결된 것은?

— < 보 기 > —

- ㉠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으나, 국가필수 도선사로 지정된 경우 (가)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 ㉡ 도선사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나)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도선사가 될 수 없다.
- ㉢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그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다)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 ㉣ 정년이 연장된 국가필수도선사는 65세가 된 날부터 (라)이 지날 때마다 그 (라)이 되는 날의 전후 (다)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나)	(다)	(라)
①	3년	2년	6개월	1년
②	2년	1년	1개월	2년
③	3년	1년	3개월	1년
④	3년	2년	3개월	1년

20. 다음 중 「수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장”이란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 ② “수산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③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④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21. 다음 중 「어촌·어항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이란 어항기본사업, 어항정비사업, 어항환경개선사업,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 ②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에 대한 관리청은 광역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 ③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어항시설의 등급은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5단계로 구분된다.
- ④ 계선부표, 항로표지, 신호·조명 시설 등의 항행보조시설 및 어항정화시설은 기능시설에 해당한다.

22. 다음 <보기> 중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 어선의 조업해역은 특정해역, 조업자제해역 및 일반해역으로 구분한다.
- ㉡ “일반해역”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을 제외한 수역 중 특정해역을 제외한 모든 해역을 말한다.
- ㉢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지정을 받은 어선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기관에 출입항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해양수산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 경찰청장은 어선이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선조사 등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은 출어등록을 한 자에게 어획물운반선과 그 외의 어선을 포함한 출어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출어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3.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유조선이 아닌 선박의 경우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해야 하는 선박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총톤수 150톤 이상 ② 총톤수 200톤 이상
③ 총톤수 300톤 이상 ④ 총톤수 400톤 이상

24.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및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총톤수 500톤 미만의 측량선은 관제대상선박에 포함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③ 국내항해에 취항하는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의 선장은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60일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④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5. 다음 <보기>는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 ㉠ 배의 길이 ()미터 미만의 목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건조검사 면제의 대상이다.
-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일 이내에 어선번호판 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발급할 수 없거나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에는 ()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만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341 ② 343 ③ 344 ④ 359

26. 다음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낚시터업자는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 ③ 낚시어선 안전요원은 선장이 아닌 선원으로서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의 안전 확보,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그 임무로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어선업자에게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에 대한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7. 다음 <보기>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상 대륙붕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대한민국의 대륙붕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그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다만, 대륙변계가 기선으로부터 (㉢)해리 밖까지 확장되는 곳에서는 협약에 따라 정한다.

① 600 ② 650 ③ 700 ④ 750

28.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 안으로 들어오거나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선박마다 마스트 상단부에 표지 깃발을 게양하여야 한다.
- ② 인도네시아 국적 어선의 어업활동 허가번호 국호의 약자는 E로 표기한다.
- ③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에 관련된 탐색·집어 행위를 하려는 외국인은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검사는 위반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관한 사항을 해당 위반선박의 선적국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9. 다음 중 공해상에서 국적을 달리하는 선박이 충돌한 경우에 관련 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레인보우 워리어호 사건(Rainbow Warrior case)
- ② 아임 얼론호 사건(the I'm Alone case)
- ③ 인터한델 사건(Interhandel case)
- ④ 로터스호 사건(the S.S Lotus case)

30. 다음 <보기>는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게 연결된 것은?

— < 보기 > —

- ㉠ 대한민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는 이 법에 따른 (가) 또는 (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해역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에게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다)는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마)전까지 그 외국해역 조사계획서가 해당 국가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 (나) (다) (라) (마)

- ① 동의 승인 외교부장관 6개월 4개월
- ② 동의 승인 해양수산부장관 7개월 6개월
- ③ 허가 동의 해양수산부장관 7개월 6개월
- ④ 허가 동의 해양수산부장관 6개월 4개월

31. 다음 중 「해양경찰법(동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포함)」상 수사의 지휘·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거나 광역화된 범죄에 대하여 경찰력의 집중적인 배치, 국가기관 등과의 공조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으로 사건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은 수사부서의 장으로 임용될 수 있다.
- ④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수사부서의 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32. 다음 중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해상에서 국제법상 금지된 배출행위를 한 외국선박이 입항한 경우, 항만국은 자국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라도 이를 조사하고 자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연안국은 내수에 있는 외국상선에 대해 자국의 관할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연안국의 재판소는 A국가 선박회사의 제소에 따라 내수에 있는 B국가의 선박을 억류할 수 있다.
- ③ C국가에서 죄를 저지른 범인이 D국가의 상선을 타고 E국가의 내수에 들어온 경우, E국가는 C국가의 범죄인인도 요청이 있다면 D국가의 상선에 진입하여 범죄인을 체포할 수 있다.
- ④ 연안국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과 중인 외국 선박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연안국은 형사 관할권의 행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33. 다음 중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 사건(South China Sea Arbitration)에서 인간에 의한 변형을 통해 해저가 간출지로 바뀌거나 간출지가 섬으로 바뀔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② 국제재판소는 섬이라 하더라도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제한적 효과만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 ③ 리기탄과 시파단 사건(Ligitan and Sipadan) 판결에서는 영유권 확인의 결정적 요소인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 정부의 공무 행위와 함께 사인의 행위가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 ④ 멩끼에와 에크레오 사건(Minquiers and Ecrehos) 판결에서는 영유권 문제를 지리적 근접성이 아니라 각종 증거로부터 뒷받침되는 실효적 지배를 기준으로 다루었다.

34. 다음 중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상 군도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군도기선의 길이는 100해리를 초과할 수 없으나, 군도를 둘러싼 총 기선 수의 3퍼센트까지는 100해리를 넘어 최대 125해리까지 확장될 수 있다.
- ② 군도국가가 항로대를 지정하더라도 그러한 항로대안의 좁은 수로에서 선박의 안전통항을 위한 통항분리방식을 설정할 수는 없다.
- ③ 군도국가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폭은 군도기선으로부터 측정되며, 군도국가의 주권은 군도수역의 상공·해저 및 하층토에 포함된 자원에까지 미친다.
- ④ 군도국가가 정지조치를 적절히 공표하지 않은 경우, 군도수역의 특정수역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없다.

35. 다음 <보기> 중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 연안국은 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조선, 핵추진선박에 대해 지정된 항로대만을 통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 해양과학조사선과 수로측량선을 포함한 외국선박은 통과통항 중 해협연안국의 사전허가 없이 어떠한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도 수행할 수 없다.
- ㉢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s)도 그 자체의 영해와 접속수역을 가질 수 있다.
- ㉣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코르푸(Corfu)해협 사건에서 영국군함의 통과통항권을 인정하였다.
- ㉤ Chung Chi Cheung v. The King 사건에서 영국의 추밀원은 정부선박의 치외법권을 부정하였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6. 다음 중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상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M/V Virginia G 사건에서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로 활동을 하는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제3국의 선박을 규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② 연안국은 자국 영해의 외측한계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 ③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간 흑해 해양경계획정 사건에서 뱀섬의 존재를 반영하지 않고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획정하였다.
- ④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37. 다음 중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상 분쟁해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당사국은 가입 시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라도 해양분쟁의 해결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와 행사에 관련된 분쟁을 협약상의 강제절차에 회부할 것을 수락할 의무가 없다.
- ③ 2012년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뱅골만 사건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판결한 첫 번째 해양경계획정 사례이다.
- ④ 해양분쟁과 도서 영토에 관한 분쟁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 조정절차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38. 다음 중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과학조사활동은 해양환경이나 그 자원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권리 주장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 ② 공해와 독립된 법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심해저의 한계설정은 대륙붕의 바깥 한계를 결정한다.
- ③ 특수한 지리적 위치를 이유로 내륙국의 권리와 편의를 설정하고 있는 이 협약의 규정과 해양출입권 행사에 관한 특별협정은 최혜국대우조항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된다.
- ④ 내륙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은 해항에서 다른 외국선박에 부여된 것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39. 다음 중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상 기선과 내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영국-노르웨이 어업분쟁 사건에서 직선기선이 원칙이지만, 노르웨이 해안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통상기선의 방법을 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② 항만체계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장 바깥의 영구적인 항만시설은 해안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기선이 될 수 있으나, 육지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근해시설과 인공섬은 영구적인 항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영해를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직선기선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 ④ 연안국이 새로이 직선기선을 적용하여 영해가 내수로 변경된 수역에서는 계속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

40. 다음 중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상 대륙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안국의 대륙붕이 200해리 밖으로 확장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대륙붕이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이라는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② 연안국은 측지자료를 비롯하여 항구적으로 자국 대륙붕의 바깥 한계를 표시하는 해도와 관련정보를 국제해사기구(IMO)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야 한다.
- ③ 대륙붕에 관한 국제법적 법리가 발달된 계기는 1945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대륙붕 선언에서 비롯된다.
- ④ 대륙붕에 관한 최초의 일반적 다자조약은 1958년 「대륙붕 협약」으로 본다.

2025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 경 감 (2교시) >

- 해경실무(09), 항공법규(05) -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응시자 유의사항

- 본인의 응시계급, 교시, 과목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신속히 페이지를 넘겨 인쇄 상태 등 파본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문제지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교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교체를 요구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성 명 :

응 시 번 호 :

해 양 경 찰 청

해 경 실 무

1.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와 관련한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5일 내에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성폭력 범죄, 성매매알선 등의 사유에서 징계 시효는 5년이다.

2. 다음 <보기>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상 전수검사·견본검사·중간검사 사유를 나열한 것이다. 각 해당사유에 들어갈 숫자를 (가) (나) (다) 순으로 가장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보기 >

- ㉠ 손쉽게 검사할 수 있을 경우
- ㉡ 물품의 단위가 작거나 소량일 경우
- ㉢ 파괴시험을 해야 할 경우
- ㉣ 고가품일 경우
- ㉤ 동일규격 생산품이거나 다량품일 경우
- ㉥ 시설공사에 대한 부분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
- ㉦ 품질확보를 위해 중요 제조과정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불량품의 혼입이 전혀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경우

(가) 전수검사-()개
(나) 견본검사-()개
(다) 중간검사-()개

(가) 전수검사 (나) 견본검사 (다) 중간검사

- | | | | |
|---|---|---|---|
| ① | 5 | 1 | 2 |
| ② | 5 | 2 | 1 |
| ③ | 4 | 2 | 2 |
| ④ | 4 | 1 | 2 |

3. 다음 중 20 mm 발칸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격 전원 접촉뭉치는 각 노리쇠뭉치가 발사할 수 있는 위치에 왔을 때 DC 330 V를 노리쇠뭉치의 공이에 보내준다.
- ② 노리쇠뭉치는 약실에 탄약을 나르고 발사를 하며, 탄피를 제거한다.
- ③ 탄환 장전기(송탄기) 뭉치는 탄띠로 연결된 탄환을 끌어당겨 노리쇠뭉치에 공급하며, 링크는 자동적으로 배출하도록 설계된 장치이다.
- ④ 슬리브는 포신을 회전뭉치에 연결한 후 포신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장치한다.

4. 다음 중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상 해양경찰 무선통신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성통신망(KOSNET)은 무궁화위성을 이용하여 음성 및 데이터 등 다기능 통신을 할 수 있다.
- ② 위성통신망 운용부서의 장은 육상에 설치된 위성통신망과 출동 중인 함정의 위성통신망을 24시간 운용해야 한다.
- ③ 예비통신망으로 무선전화(SSB)를 설치·운용할 수 있으며, 평소 비상주파수(2182 KHz 또는 2183.4 KHz) 및 지역 어선용 주파수를 청취한다.
- ④ 해양경찰 전용통신망은 각 해경서별로 채널이 부여되어 있으며, 속초·목포·울진해양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채널은 6번이다.

5. 다음 <보기>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상 제12조(보좌기관의 설치) 및 제14조(보조기관의 설치)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 ㉠ 과장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 ㉡ 보조기관을 두는 경우 실 밑에는 국 또는 과, 국 밑에는 과를 둘 수 있으며, 실 밑에 두는 국에는 국장을 보좌하는 최소한의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 ㉢ 과의 상한 및 설치기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계급별 정원,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한다.
- ㉣ 보좌기관의 명칭은 정책관·기획관·담당관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부조직을 둘 수 없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6. 다음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상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은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 ②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 ③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한다.
- ④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 즉시 처리한다.

7. 다음 <보기> 중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의무인 ‘영리 업무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 ㉠ 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영리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속기관장의 직무 겸직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본인 및 직계친족을 통해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경우 금지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한다.
- ㉢ 공무원 본인이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금지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한다.
- ㉣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 책임사원·지배인·받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경우 금지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ㄷ

8. 다음 중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한다.
- ②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없다.
- ③ 문서에 쓰는 시·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한다.
- ④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는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9. 다음 중 「해양경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간 의결을 통해 위원장을 선출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의 경우 법무계장, 지방청의 경우 기획운영계장으로 한다.
- ④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이어야 한다.

10. 다음 <보기> 중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상 등록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자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보기 >

- ㉠ 중장 이상 장성급 장교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
 ㉣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1. 다음 중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상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는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문서는 수신자에게 발송된 때 효력을 발생한다.
- ④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12. 다음 중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상 조난·긴급통신 송·수신, 전파 및 해사안전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해안국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MCC(Mission Control Center)
- ② LUT(Local User Terminal)
- ③ 국제안전통신센터(KCG GMDSS)
- ④ 해양안전통신국

13. 다음 <보기> 중 「국고금 관리법(시행령 포함)」에 따라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불용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는 경비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 국가기관등에 지급하는 경비
- ㉡ 공무원 보수
- ㉢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
- ㉣ 보험료 및 반환금
- ㉤ 국제연합기구에 지급하는 경비
- ㉥ 배상금 및 보상금
- ㉦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 ㉧ 국제조약 및 협정에 의한 비용
- ㉨ 환자 수용비
- ㉩ 보조금·부담금 및 교부금

-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14. 다음 중 「보안업무규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에 따르거나 생산자의 직권으로 한다.
- ②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고문의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과 관계없이 비밀을 파기할 수 있다.
- ③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의 원본은 ‘이관’, 사본은 ‘파기’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한다.
- ④ 예고문은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통보서에 기록한다.

15. 다음 중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칙」 상 상황전파 기준 및 상황보고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상황보고서는 상황전파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고, 팩스 송부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 ② 대북상황 등 보안유지가 필요한 상황발생 시 필요 최소한으로 전파하고, 전파 시 ‘보안관리’를 표시한다.
- ③ 상황을 접수받은 기관은 즉시 전화로 소속기관에 전달하고, 지체 없이 상황보고서로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④ 상황발생 시 법적·행정적으로 직접 관련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한 기관 및 부서에 전파한다.

16. 다음 중 「해상교통안전법」 상 각종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거대선 - 길이 150미터 이상의 선박
- ② 고속여객선 - 시속 20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
- ③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기관을 설치한 선박이 주로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동력선으로 본다.
- ④ 흘수제약선 - 가항(可航)수역의 수심 및 폭과 선박의 흘수와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동력선

17.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상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다음 중 출입통제 설정 가능 장소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
- ② 안전장비는 있지만 관리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
- ③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 지역
- ④ 사고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섬 또는 갯바위

18. 다음 중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공역인 비행금지구역·비행제한구역이나 「무인항공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관제권에서 비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해당 공역 비행승인 담당 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비행장애요인 등 필요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 ③ 해양에서의 항공촬영은 지상이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허가 없이 촬영할 수 있다.
 - ④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해안선 등 지상이 포함된 항공촬영을 할 경우에는 「국방부 항공촬영지침서」에 따라 촬영 4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 다음 보기 중 「해양경비규칙」상 함정의 경비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보기 >

- ㉠ ‘순항경비’란 경비해역 중 선박밀도가 높은 해역 등을 고속으로 항해하면서 감시
- ㉡ ‘표류경비’란 해양 이동물체를 감시하기 위해 함·정장의 건전한 판단에 따라 우범해역 등 임의의 해역을 선정하여 기관을 정지시키고 표류하면서 실시
- ㉢ ‘거점경비’란 야간 또는 치안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함·정장의 건전한 판단에 따라 긴급출동이 가능하고, 사주경계가 용이한 곳에서 대기과 순찰을 반복적으로 실시
- ㉣ ‘경계경비’란 밀입국 첩보 등 경계 강화가 요구되는 경우 경비해역의 모든 이동물체에 대하여 정선 및 승선 검색을 실시

20.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 ②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 ③ 피성년후견인은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 ④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거나 판매하는 사업은 수상레저사업에 해당된다.
21. 다음 중 「계선부표 관리규칙」상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항로표지관리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여 함정 직원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
 - ② 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는 계선부표의 국유재산 등재·멸실·폐기 등 재산권 변동에 관한 업무와 정기교체, 사고복구 등 해양수산부 지원사항을 제외한 통상적인 계선부표 보수·수리 등 자체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③ 해양경찰청 경비작전과는 계선부표의 설치·위치조정·정기교체·사고복구·관계기관의 통보 등 부표 설치·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반기별로 계선부표의 관리상태를 감독하고,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2. 다음 중 「유선 및 도선 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정하고 있는 유선사업자 등의 금지 의무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
- ② 무리하게 승선을 권유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선 또는 선박 대여를 거부하는 행위
- ③ 영업시간 외에 항행하거나 영업구역 외 또는 항행구역(배를 매어두는 장소와 영업구역이 격리되어 있는 경우의 그 구간을 말한다.)내에서 항행하는 행위
- ④ 화약·폭약·탄약 등 폭발물, 고압가스 및 인화성 고체류로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위험물 및 산적고체위험물 등 위험물을 일반 승객과 함께 반입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23. 다음 보기 중 잠수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 표면공급식 잠수(SSDS)는 함정이나 바지(BARGE)에 탑재된 호흡기체 공급장치를 통해 표면에서 구조대원에게 호흡기체를 공급하는 잠수 방식이다.
- ㉡ 폐쇄식 잠수는 100% 산소를 호흡하며, 사용된 산소는 정화제를 통해 질소를 제거한 후 장비 내에서 재순환하므로 개방식과 달리 수중에 기포가 발생하지 않아 수중침투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 ㉢ 스쿠버(SCUBA)잠수는 구조대원이 직접 호흡용 장비를 휴대하고 실시하는 잠수로서 보통 자유식 공기 스쿠버 잠수를 의미한다.
- ㉣ 반폐쇄식 잠수는 개방식 잠수방식과 폐쇄식 잠수방식을 결합한 잠수방식으로 산소·질소 또는 산소·헬륨 혼합기체를 호흡기체로 사용하며, 이산화탄소 정화통을 통해서 기체를 재순환시켜 이산화탄소를 걸러내고, 다량의 혼합기체에 다량의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체의 흐름은 신체의 산소 요구량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정량으로 재순환하는 혼합기체 중 초과 공급된 혼합기체를 장비 밖으로 배출하면서 조절되는 방식으로 다량의 기포가 발생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4. 다음 중 「선박구명설비기준」 상 구명조끼의 요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착용 시범 후에는 모든 사람이 도움 없이 2분 이내에 정확히 착용할 수 있을 것
- ② 아동용 구명조끼는 전혀 익숙하지 못한 사람의 75퍼센트 이상이 도움, 지침 또는 사전 시범 없이 1분 이내에 정확히 입을 수 있을 것
- ③ 한쪽 방향으로만 또는 밖에서 안쪽으로 명백히 착용할 수 있으며, 잘못 착용되어지더라도 착용자에게 상해를 주지 아니할 것
- ④ 착용자에게 구명조끼를 고정하는 방법은 매듭을 묶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폐위 수단(means of close)을 가질 것

25. 다음 보기 중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묶어진 것은?

< 보 기 >

- ㉠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의 근무방법(교대시간, 근무주기 등을 포함한다)을 정할 때에는 안전·치안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취약시간에 인력을 집중할 수 있다.
- ㉡ 해양경찰서장은 관내 안전·치안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대근무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파출소의 교대근무제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서지역 파출소등의 교대근무제는 지역별 실정에 맞게 파출소장이 정할 수 있다.
- ㉢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의 전반적 안전관리와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파출소장에게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황대기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 ㉣ 순찰구조팀 및 출장소 근무 경찰관은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 혹서기 순찰 등 야외활동은 폭염 단계별 근무지침에 따른다.

- ① ㉠, ㉡ ② ㉡, ㉢
③ ㉢, ㉣ ④ ㉣, ㉤

26. 다음 중 「해양 상황처리 기본절차(SOP)」 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위치확인: 사고신고 접수자는 사고 위치확인 전에 사고의 규모,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우선적으로 대응한다.
- ② 출동지시: 사고위치 확인 즉시 시간적으로 가장 인근에 위치한 경비·구조 세력 등을 First Responder(F/R: 초동대응팀)로 특정하고 이동지시를 한다. 인근 항공대 긴급 출동지시 또는 긴급출동 대기·준비지시를 하며 F/R과(2척 이상 지정도 가능하다) 별도로 사고위치 최 인근 주변선박을 확인하고 구조요청을 한다.
- ③ 상황판단: 상황파악 및 보고 등을 최우선으로 실시 후 이동지시를 하며, 항공기 이륙여부를 가능한 빨리 판단하여 조치한다. 현장 출동세력의 적정규모를 판단하여 추가 또는 복귀조치를 하고 중특단 등 특수임무세력 출동 필요성을 신속히 판단한다.
- ④ 결과분석: 상황종료 전 최종 상황보고서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비·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하여 대응한 상황에 한하여 작성한다.

27. 다음 중 ‘해상경호’의 기본방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호관련 정·첩보 및 행사장 안전판단 등을 통해 실질적인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 또는 제거하기 위한 예방경호에 총력을 집중한다.
- ② 해상경호계획 수립 시에는 발생가능한 모든 예상 상황 및 우발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효율적인 경호목표 달성을 위하여 경호인력 및 장비에 대한 동원체제를 확립하고, 경호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④ 해상경호경비 활동은 지휘체계를 이원화하여 전 경호역량을 집결하고, 경호실 및 경호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28. 다음 중 로웬탈(M.M. Lowenthal)이 주장한 정보의 순환과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요구 → 수집 → 처리·이용 → 분석·생산 → 배포·소비 → 환류
- ② 요구 → 임무의 발생 → 수집 → 분석 → 배포 → 요청
- ③ 기획·지시 → 수집 → 가공 → 분석·생산 → 배포
- ④ 요구 → 수집 → 생산 → 배포

29. 다음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발생·입국단계, 보호·관리 단계, 배출·정착단계로 구분된다.
- ②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장 등에게 보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보호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일반적인 경우 통일부장관이 통보를 받으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회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 ④ 해외 보호대상자의 입국을 위한 당해 주재국과의 교섭, 신병이송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한다.

30. 다음 중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생체정보 제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생체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생체정보의 제공에서 17세 미만인 사람,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과 그 동반 가족 등은 제외된다.
-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외교부장관은 제공 또는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31. 다음 중 수사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가진다.
- ② 수사의 경과·결과 등 수사 관련 사항을 검사에게 보고하는 서면이다.
- ③ 수사와 관계있는 사항을 보고할 때 작성하는 서류로 일정한 규정 서식이 없다.
- ④ 2인 이상 수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성명을 연명 기재한다.

32. 다음 <보기> 중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상 수사본부 설치대상 중요사건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선박의 충돌·침몰·도주사건
 - ㉡ 3인이상 상해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 ㉢ 기름 또는 유해물질 30 kl 이상 해양오염사고
 - ㉣ 집단 특수공무집행 방해사건
 - ㉤ 국가중요시설물 파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테러사건(그러한 테러가 예상되는 사건은 제외)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3. 다음 <보기> 중 수사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유류품 수사에서는 유류품과 범행과의 관계, 유류품과 피해자와의 관계, 유류품과 현장과의 관계, 유류품과 범행시와의 관계에 착안점을 둔다.
 - ㉡ 장물수사 중 특정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특정범인에 관한 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를 특별수사라 한다.
 - ㉢ 알리바이 수사에는 기억의 문제, 가능성의 문제, 시간과 장소의 문제 등의 착안사항이 있다.
 - ㉣ 연고감 수사는 평소 관내 우범자 동향 등 기초자료 수집이 중요하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4. 다음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투약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포함되지만 동물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는 제외된다.
- ④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5. 다음 중 ‘아포스티유(Apostille)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간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위해 공문서 발행국가가 인증하는 복잡한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외국공관의 영사가 확인하는 제도이다.
- ② 아포스티유가 발급·부착된 우리나라 공문서는 협약가입국에서도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③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뿐만 아니라 공증문서와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도 포함된다.
- ④ 협약가입국에서 발급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문서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6. 다음 <보기> 중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상 외국인 등 관련범죄 수사에서 경찰관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외국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우

㉡ 외국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에 대한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 외국인을 임의동행하고 작성한 진술서 및 수사 과정확인서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

㉣ 외국인에게 구속영장 그 밖의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37. 다음 <보기> 중 「법화학감정규정」 상 감정물 채취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유해화학물질류 생체시료(소변) - 30밀리리터 이상

㉡ 대마, 양귀비 등 식물자체 - 2포기 이상

㉢ 폐수류 2리터 이상

㉣ 유해식품류 중량 500그램 이상

㉤ 의약품류 정제 100개 이상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8. 다음 중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문금지와 불이익진술거부권

② 영장주의(영장에 의한 체포·구속)

③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④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고지

39. 다음 <보기>의 ‘수사수단의 방향’에 따른 분류 중 횡적 수사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현장관찰 ㉡ 탐문수사 ㉢ 수범수사 ㉣ 인상특징수사

㉤ 감별수사 ㉥ 수배수사 ㉦ 미행·잠복 ㉧ 행적수사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40. 다음 <보기> 중 루미놀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육안으로 발견이 어려운 혈흔은 루미놀 시험을 한다.

㉡ 루미놀 시약은 인혈에만 반응한다.

㉢ 기재로는 LMG, 빙초산, 증류수, 3%의 과산화수소가 필요하다.

㉣ 빛이 차단된 장소에서 루미놀 시약을 분무하면 형광빛을 발한다.

㉤ 증류수에 무수탄산나트륨을 조금씩 붓는 순서로 교반하여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항공법규

1.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주의공역’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 ② 항공사격·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 ③ 항공기의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 ④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 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2. 다음 <보기>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비행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 보기 >
- ㉠ 항공기의 식별부호
- ㉡ 무게로 표시한 연료 탑재량
- ㉢ 출발비행장 및 출발 예정시간
- ㉣ 항공기의 대수·형식 및 최대이륙중량 등급
- ㉤ 탑승 총 인원(조종사에 해당하는 인원은 제외)

- ① ㉠, ㉢, ㉣
- ② ㉡, ㉢, ㉣, ㉤
- ③ ㉢, ㉣, ㉤
- ④ ㉠, ㉡, ㉢, ㉣

3. 다음 <보기> 중 「공항시설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항행안전무선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 < 보기 >
- ㉠ DME
- ㉡ 레이더시설
- ㉢ GPWS
- ㉣ ILS
- ㉤ ACAS
- ㉥ GNSS Monitoring System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4.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항공기 등록원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공기의 제작자
- ② 항공기의 형식
- ③ 항공기의 제작 연월일
- ④ 항공기의 정치장

5. 다음 <보기>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을 하는 항공운송 사업용 비행기에서 갖추어야 하는 항공계기를 모두 고르시오.

- < 보기 >
- ㉠ 나침반(MAGNETIC COMPASS)
- ㉡ 시계(시, 분, 초의 표시)
- ㉢ 정밀기압고도계(SENSITIVE PRESSURE ALTIMETER)
- ㉣ 기압고도계(PRESSURE ALTIMETER)
- ㉤ 경사지시계(SLIP INDICATOR)
- ㉥ 인공수평자세지시계(ATTITUDE INDICATOR)

- ① ㉠, ㉡, ㉢, ㉤
- ② ㉠, ㉡, ㉣, ㉤, ㉥
- ③ ㉠, ㉡, ㉢, ㉥
- ④ ㉠, ㉡, ㉢, ㉣, ㉥

6. 다음 중 「공항시설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항행안전무선시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 ② 자동종속감시시설(ADS)
- ③ 무지향표지시설(NDB)
- ④ 위성항법시설(GNSS)

7.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감항증명을 할 때 지정하여야 할 ‘항공기의 운용 한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속도에 관한 사항
- ② 발동기 운용성능에 관한 사항
- ③ 중량 및 무게중심에 관한 사항
- ④ 비상절차에 관한 사항

8.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야간비행 중인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는 항공기의 등화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착륙등, 우현등, 좌현등
- ② 착륙등, 우현등, 좌현등, 미등
- ③ 충돌방지등, 우현등, 좌현등, 미등
- ④ 충돌방지등, 착륙등, 우현등, 좌현등

9. 다음 중 「공항시설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항행 중인 항공기에 비행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비행장 또는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비행장식별등대
- ② 비행장유도등
- ③ 목표지점등
- ④ 비행장등대

10. 「공항시설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TACAN은 (㉠)을 기준으로 하는 방위각 정보와 지상의 기준점으로부터 항공기까지의 (㉡)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 중 괄호 안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 - 진북, ㉡ - 경사거리
- ② ㉠ - 자북, ㉡ - 경사거리
- ③ ㉠ - 자북, ㉡ - 수평거리
- ④ ㉠ - 진북, ㉡ - 수평거리

11.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감항증명 신청 시 비행교범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공기의 종류에 관한 사항
- ② 항공기의 제원에 관한 사항
- ③ 항공기 조작방법에 관한 사항
- ④ 항공기의 필수장비목록에 관한 사항

12.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비행장 또는 주변에서의 비행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이륙항공기는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450미터의 고도까지 가능한 한 신속히 상승할 것
- ② 이륙하려는 항공기는 안전고도 미만의 고도 또는 안전속도 미만의 속도에서 선회하지 말 것
- ③ 해당 비행장을 관할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과 무선통신을 유지할 것
- ④ 착륙하는 다른 항공기 다음에 이륙하려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가 착륙하여 계류장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륙하기 위한 활주를 시작하지 말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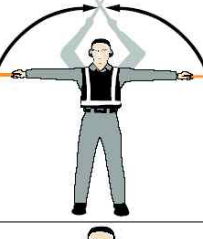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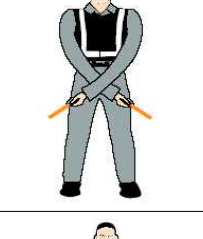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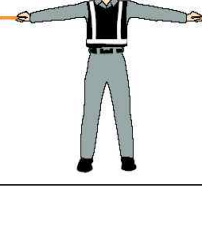
13.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항공기가 착륙허가를 받고도 착륙 예정시간으로부터 (㉠)분 이내에 착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항공기와의 무선교신이 되지 아니할 경우를 (㉡)상황이라고 한다. 다음 중 괄호 안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 - 3분, ㉡ - 경보
- ② ㉠ - 5분, ㉡ - 경보
- ③ ㉠ - 5분, ㉡ - 조난
- ④ ㉠ - 3분, ㉡ - 조난

14.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기장이 항공기 출발 전 “해당 항공기와 그 장비품의 정비 및 정비 결과”와 관련하여 점검하여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공일지에 관한 기록의 점검
- ② 정비에 관한 기록의 점검
- ③ 항공기의 외부 점검
- ④ 계류장 안전 점검

15.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엔진 정지’를 의미하는 신호로 가장 옳은 것은?

구분	신호	설명
①		유도봉을 쥔 팔을 어깨 높이로 들어 올려 왼쪽 어깨 위로 위치시킨 뒤 유도봉을 오른쪽·왼쪽 어깨로 목을 가로질러 움직인다.
②		유도봉을 쥔 양쪽 팔을 몸 쪽 측면에서 직각으로 뻗은 뒤 천천히 두 유도봉이 교차할 때 까지 머리위로 움직인다.
③		몸의 앞쪽에서 유도봉을 쥔 양팔을 아래쪽으로 교차시킨다.
④		유도봉을 든 팔을 90° 측면으로 편다.

22. 다음 <보기>는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관제탑에서 통신두절된 항공기에 보내는 빛충신호의 종류에 대한 의미를 연결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 보기 >
- ㉠ 비행 중인 항공기에 보내는 연속되는 붉은색 -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고 계속 선회할 것
 - ㉡ 비행 중인 항공기에 보내는 깜박이는 녹색 - 착륙하여 계류장으로 갈 것
 - ㉢ 지상에 있는 항공기에 보내는 깜박이는 녹색 - 이륙을 허가함
 - ㉣ 지상에 있는 항공기에 보내는 깜박이는 흰색 - 비행장 안의 출발지점으로 돌아갈 것

- ① ㉠, ㉢ ② ㉠, ㉣ ③ ㉡, ㉢ ④ ㉡, ㉣

23. 다음 <보기>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7조 상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는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 ㉡ 화재의 진화
 - ㉢ 화재의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
 - ㉣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臟器) 이송
 - ㉤ 자연재해 발생 시의 긴급복구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4. 다음 중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보기 >
- 「항공안전법」 제3조(군용항공기등의 적용 특례) 제2항 세관업무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와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 충돌 등 항공기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을(를) 적용한다.
- ① 제51조(무선설비의 설치·운용 의무)
 - ② 제69조(긴급항공기의 지정 등)
 - ③ 제79조(항공기의 비행제한 등)
 - ④ 제84조(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 제1항

25. 다음 중 <보기>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항공안전법」 제61조(항공안전 자율보고) 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사람이 그 발생일로부터 (㉠)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 법 및 (㉡)에 따른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 ㉡ |
|---|-----|---------|
| ① | 10일 | 「공항시설법」 |
| ② | 20일 | 「공항시설법」 |
| ③ | 10일 | 「항공사업법」 |
| ④ | 20일 | 「항공사업법」 |

26. 다음 <보기> 중 「항공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공기취급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항공기급여업
 - ㉡ 항공기하역업
 - ㉢ 지상조업사업
 - ㉣ 항공기대여업
 -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7. 다음 <보기>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9조(비행속도의 유지 등) 제2항 C 또는 D등급 구역에서는 공항으로부터 반지름 7.4 km (4해리) 내의 지표면으로부터 750미터 (2,500피트)의 고도 이하에서는 ()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① 진대기속도 200노트
- ② 지시대기속도 200노트
- ③ 진대기속도 230노트
- ④ 지시대기속도 230노트

28. 다음 중 <보기>의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조종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법 제55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조종사는 해당 항공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 까지의 사이에 조종하려는 항공기와 같은 (㉡)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륙 및 착륙을 각각 (㉢) 이상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

㉡

㉢

① 60일 형식 6회

② 90일 종류 6회

③ 90일 형식 3회

④ 90일 종류 3회

29. 다음 <보기>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상 감항 증명 시 검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형식증명에 관한 사항

㉡ 항공기의 설계에 대한 사항

㉢ 항공기의 제작과정에 대한 사항

㉣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0. 다음 중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항공안전법」 제152조(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계기비행 자격없이 계기비행을 한 자는 ()의 벌금에 처한다.

① 500만원 이하 ② 1,000만원 이하

③ 2,000만원 이하 ④ 3,000만원 이하

31.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항공기에 설치·운용하여야 하는 무선설비 중 비상 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신호는 121.5 MHz 및 406 MHz로 송신되어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 중 승객의 좌석 수가 19석을 초과하는 비행기는 2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2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2대 중 1대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여야 한다.

④ 1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구명보트에 설치하여야 한다.

32.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응급구조 및 환자 이송을 하는 헬리콥터 제외)에 종사하는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승무시간과 최대비행근무시간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운항승무원 편성	최대 승무시간	최대비행 근무시간
①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8시간	12시간
②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12시간	16시간
③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12시간	17시간
④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13시간	20시간

33. 다음 중 「공항시설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장애물 제한표면’에서 ‘전이표면’의 경사도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2분의 1 ② 4분의 1

③ 6분의 1 ④ 7분의 1

2025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 정 위 (1교시) >

- 형법(06), 형사소송법(07) -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응시자 유의사항

- 본인의 응시계급, 교시, 과목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신속히 페이지를 넘겨 인쇄 상태 등 파본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문제지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교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교체를 요구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성 명 :

응 시 번 호 :

해 양 경 찰 청

형 법

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②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척추장애로 지체장애 3급 장애인)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 ③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로서,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 ④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문구를 적시한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의뢰인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를 하고 구매 후 인증되는 문화상품권의 핀(PIN) 번호를 자신에게 알려주게 하여 의뢰인들이 구매한 문화상품권 액면가 22% 금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77.8% 금액을 대부해 준 것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위조죄는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
- ② 「형법」 제2조(국내범)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모 공동정범의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한다.
- ③ 「형법」 제7조의 문언상 외국에서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위 법조를 직접 적용할 수 없지만, 유추적용을 통하여 그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 ④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국기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3.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 사문서위조죄는 행위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목적은 일반적 주관적 불법요소에 해당한다.
 - ㉡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과 아울러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하여야 한다.
 - ㉢ 목적범에서 ‘목적’은 범죄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다.
 - ㉣ 고의는 일반적 주관적 불법요소로서 인적 행위불법의 핵심적 요소에 해당한다.
 - ㉤ 불법영득의사는 과실범에는 있을 수 없고 고의범에서만 있을 수 있는 특수한 주관적 불법요소(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한다.
 - ㉥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과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구하나,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4. 다음 중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 ③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볼 때 양벌규정은 법인이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 ④ 양벌규정에 의해 자연인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형량을 작량 감경하더라도 법인을 처벌함에 있어서는 작량 감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5. 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 ② 선박의 이동에도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있어야 하고 휴지선을 이동하는 데는 예인선이 따로 필요한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해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결과 인근 양식장에 피해를 준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 ③ 甲이 乙의 개(룻트와일러)가 다가오자 자신의 진돗개를 보호하기 위하여 타인의 개를 기계톱으로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하여 죽인 경우 이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 ④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은 경우 인장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6. 다음 중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음란물이 문학적·예술적·사상적·의학적·교육적 표현 등과 결합되어 음란 표현의 해악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되거나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결합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 ② 문언송신금지를 명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하였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③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 ④ 의료인이 아닌 자가 찜질방 내에서 부항과 부항침을 놓고 일정한 금원을 받은 행위는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7. 다음 중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별하지 아니하므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도 할 수 없다.
 - ② 우울증 기타 정신병이 있는 피고인이 특히 생리도벽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의심이 들 경우에 법원은 전문가의 감정을 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 ③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 ④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정도의 강약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8. 다음 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으로 이해하여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파악하여 원인설정행위시의 책임능력을 기초로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는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중시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을 관철하는데 부합하는 이론이다.
 - ②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후에 대마초를 흡연하고, 위 각 범행에 이른 것이라면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 ④ 우리 「형법」상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는 심신상실, 심신미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책임조각 내지 책임감경이 되지 아니하고 책임능력자로 취급하여 처벌하고 있다.

9. 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오상방위, 오상피난, 오상자구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 ② 甲이 야간에 악수를 청하는 이웃집 사람을 강도로 오인하고 방어할 생각으로 그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할 때 상해죄가 성립한다.
 - ③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 인식이 없으므로 고의가 조각된다.
 - ④ 정당방위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 엄격책임설은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본다.

10. 다음 중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②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자기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에도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결과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는 없다.
 - ④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11. 다음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 ②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지만, 반드시 같은 형으로 처벌할 필요는 없다.
 - ③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물을 수 있으려면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 범죄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야 한다.
 - ④ 의료인이 무면허의료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의료인 아닌 자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고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12. 다음 중 실행의 착수시기 또는 기수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②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 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 ③ 피해자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여권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그의 여권을 강제회수 당하였다면 강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 ④ 허위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3. 다음 중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에서 자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A가 “다음에 만나서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취지로 간곡하게 부탁을 하자 실행을 중지한 경우
 - ② 甲은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A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올 것이고 자신이 현재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실행을 중지한 경우
 - ③ 甲은 A를 살해하려고 A의 목과 왼쪽 가슴을 수회 찔렀으나 A의 가슴에서 피가 많이 흘러 나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실행을 중지한 경우
 - ④ 甲은 A의 주택을 불태우려고 주택 안의 장롱에 있던 의류에 불을 놓았으나 불길의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14. 다음 중 예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범의 범죄를 방조하려는 자가 예비단계에서의 방조에 그친 경우,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였더라도 방조자를 처벌할 수 없다.
 - ② 정범이 예비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예비죄의 방조가 성립될 수 있다.
 - ③ 자신을 죽여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독약을 준비하였다가 이를 버린 경우 촉탁살인죄의 예비죄로 처벌할 수 있다.
 - ④ 절도를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게 절도 범행이 발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강도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5. 다음 <보기> 중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 ㉡ 심신상실을 이유로 처벌받지 아니하거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벌이 감경될 수 있는 자라 할지라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감호의 대상이 된다.
 - ㉢ 「소년법」 제60조 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범죄행위시가 아니라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 ㉣ 심한 만성형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의 지배로 말미암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생면부지의 행인들의 머리를 이유 없이 도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경우,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 ㉤ 판례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도 포함된다.

16. 다음 중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③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이용자의 이용 행위시로 보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의사가 외부로 표현되기만 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범의 처벌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 甲이 乙을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乙을 구금 하였다면 甲에게는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17. 다음 <보기> 중 교사범과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순서로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편면적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편면적 방조범은 성립할 수 있다.
 - ㉡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은 성립할 수 있다.
 - ㉢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과실범에 대한 방조범은 성립할 수 없다.
 - ㉣ 효과 없는 교사는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되지만, 효과 없는 방조는 처벌되지 않는다.
 - ㉤ 과실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과실에 의한 방조범은 성립할 수 있다.

	㉠	㉡	㉢	㉣	㉤
①	0	0	X	0	X
②	0	0	X	X	X
③	X	0	X	X	0
④	0	X	0	0	X

18. 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②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별할 수 없다.
- ③ 과실에 의하여 동일한 결과가 야기된 경우보다도 결과적 가중범을 가중하는 이유는, 고의의 기본 범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전형적인 잠재적 위험이 실현되어 과실범보다 결과반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 ④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관에 투숙하여 별다른 저항이나 마찰 없이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이 잠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고 구조요청을 한 후라면 피고인의 방문 흔드는 소리에 겁을 먹고 탈출하다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다.

19. 다음 중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②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③ 상습성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된다.
- ④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 별로 수 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20. 다음 중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乙주식회사의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범한 경우, 수수료에 대한 권리는 甲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수수료로 받은 금품을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 ②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추징가액의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액이 기준이 된다.
- ③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 해당하는 공범자는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되므로, 유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공범자의 물건은 몰수할 수 없다.
- ④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를 실시하여 압수해 온 물건을 몰수하였다면, 해당 몰수는 위법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21. 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집합적 명칭을 사용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 그 명칭의 사용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집합구성원 각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② 甲이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한 언급 없이 제3자에게 “乙이 丙을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말만 하였다면 乙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③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공지의 사실은 명예훼손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언론매체가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보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것이다.

22. 다음 중 체포와 감금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신체에 대한 심한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있는 상태 하에서 피고인이 그를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유숙한 후 그와 함께 항공기로 국외로 나간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한다.
- ②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③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 ④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그 감금행위는 강도상해죄에 흡수되어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23. 다음 중 협박죄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약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약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제3자’에서 범인은 제외된다.
- ② 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약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약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 ③ 피고인이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에는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장모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한 경우, 협박죄에 해당한다.

24. 다음 중 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모두 해당하고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② 강도죄의 성질상 그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상 변동의 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법률이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③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행위는 특수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

④ 여관에 들어가 안내실에 있던 여관의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강취한 후, 각 객실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행위가 시간적으로 접촉된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포괄하여 1개의 강도상해죄만을 구성한다.

25. 다음 중 위증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이 선서 후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함이 없이 단지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 그것이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 중 특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에 일부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위증죄에 있어서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은 증인 자격이 없고, 이는 소송절차가 분리되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③ 증인이 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였더라도 최초에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하였다면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④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당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6. 다음 <보기> 중 甲에게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결정되자 법인의 대표자 甲이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사에게 그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로 지급한 경우

㉡ 골프회원권 매매중개업체를 운영하는 甲이 매수의뢰와 함께 입금받아 다른 회사자금과 함께 보관하던 금원을 일시적으로 다른 회원권의 매입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경우

㉢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 甲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 채무자 甲이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 甲이 이것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7. 다음 중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방화한 경우 일반건조물 등방화죄가 성립한다.

②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불을 놓아 무주물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자기 소유일반물건방화죄)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저지를 사람이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8. 다음 중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자동차등록원부상 A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B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 ②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 ③ 甲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 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 ④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란 반드시 제한물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도 이에 포함된다.

29. 다음 중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유가증권위조·변조죄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과 같이 수표위조·변조에 의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위반죄의 성립에는 ‘행사할 목적’이 요구된다.
 - ②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더라도, 그들 사이에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하였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 ③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 ④ 유가증권의 내용 중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도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30. 다음 중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
 - ②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법률뿐 아니라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③ 등기공무원이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와 함께 등본의 교부신청이 있었음에도 고의로 일부를 누락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만 기입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기입하지 않은 채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 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1. 다음 중 직권남용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 ②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 ④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그 직무집행이 위법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32. 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를 위하여 허위의 신청사유를 주장하면서 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양도·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②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 ③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 기일 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하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3. 다음 중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위증으로 고소, 고발한 사실 중 위증한 당해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지만 신고된 범죄 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 ④ 피고인이 최초로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이상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34. 다음 중 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271조 제1항의 죄(단순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유기죄로서 가중처벌된다.
 - ② 4년여 동안 동거하기도 하면서 내연관계를 맺어온 내연녀가 치사량의 필로폰을 복용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돌보지 않아 사망한 경우 동거남에게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 ③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강간치상죄와 유기죄가 성립한다.
 - ④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 의무 가운데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되며, 나아가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를 긍정하여야 한다.
35. 다음 <보기> 중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보기 >

- ㉠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퇴사시에 회사에 반환 의무가 있는 영업비밀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 ㉡ 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이를 타에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배임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배임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제3자로부터 특허권을 이전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대금을 지급 받고는 그 타인의 승낙도 받지 않은 채 제3자 앞으로 특허권을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6. 다음 중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대인 甲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 하던 피고인이 건물을 인도한 이후에도 자신명의로 된 학원설립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휴원신고를 연장함으로써 새로운 임차인 乙이 그 건물에서 학원설립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하더라도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 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37. 다음 중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만으로도 범인 도피죄를 구성한다.

②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妻)가 범인인 남편을 위하여 범인은닉을 범한 경우에는 처벌된다.

③ 참고인이 범인 아닌 사람을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가 범인이라고 지목 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구속기소되게 하였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38. 다음 중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이혼을 요구하는 처(妻)로부터 재산분할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③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 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형법」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다.

39. 다음 중 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를 개시 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더라도, 매몰의 결과 발생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면 선박 매몰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② 「형법」에는 업무상 과실, 중과실에 의한 일반 교통방해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③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신고를 마쳤는데도, 신고의 범위와 법률상의 제한을 현저히 일탈하여 주요 도로 전 차선을 점거하여 행진 등을 함으로써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애를 일으켰다면 일반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40. 다음 중 손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홍보를 위해 설치한 광고판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겨 놓았다면 비록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옮겨졌더라도 그 광고판은 본래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②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바짝 붙여 놓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하였더라도 피해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적 효용의 멸실 내지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재물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자동문 설치공사를 한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자동문의 자동 작동 중지 예약기능을 이용하여 자동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도록 설정하여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도록 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④ 자기 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이미 타인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문서 손괴죄가 성립한다.

형사소송법

1. 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란 내용과 명칭이 모두 「형사소송법」인 법률을 말하며 가장 중요한 법원이 된다.
 - ②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9조의 재기수사의 명령 관련 규정은 검찰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일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 ③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다.
 -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2. 다음 중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물관할을 달리 하는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다.
 - ②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고, 단독판사의 관할 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 ③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 ④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3. 다음 중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따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그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
 - ②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기회를 보장할 필요는 없다.
 - ③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압수·수색영장에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의 복사 또는 출력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적물인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관서로 반출할 수 있다.
4.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제1심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②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③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가 제2심에서 무죄로 되었음에도 제2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④ 제1심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법원이 제1심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재판을 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 다음 중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 ② 서면으로 진행되는 공판준비절차를 위해서도 법원은 변호인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③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 ④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공판기일에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6. 다음 중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류, 물건 및 그 목록에 대하여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7일 이내에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7. 다음 중 공판정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庭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庭해 버린 경우 수소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는 심리판결 할 수 없다.
 - ②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을 요한다.
 - ③ 검사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이므로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도 검사의 출석 없이는 개정할 수 없다.
 - ④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 안에 들어갈 숫자를 합산하면 얼마인가?

- ㉠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년이다.

㉡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년이다.

㉢ 장기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년이다.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년이다.

- ① 21

② 23

③ 25

④ 28

9. 다음 중 공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공소취소로 공소기각이 확정된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다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공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③ 공소취소는 사실심인 항소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 ④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10. 다음 중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항소심에서 파기되어버린 제1심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11. 다음 <보기> 중 항소심 절차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 ㉡ 항소를 함에 있어 항소장은 항소법원에 제출한다.
- ㉢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 항소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없다.
- ㉤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는 즉시 항소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나 상대방에게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분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항소이유서 부분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2. 다음 중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삼은 변호인 제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증인서 사본이 비록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 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되었다라도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 ㉡ 원심이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어 전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에만 편철되어 있는 서류를 탄핵증거로 사용하였다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탄핵증거의 조사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사본이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라면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사본을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 ㉣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은 없지만,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3. 다음 중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절차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된다.

14. 다음 <보기> 중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 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
- ㉡ 고소조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으므로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소권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참고인진술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도 고소는 유효하나, 다만 그러한 의사표시가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유효하지 않다.
- ㉢ 친고죄 피해자 A의 법정대리인 甲의 고소기간은 甲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하고, A가 변호사 乙을 선임하여 乙이 고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乙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고소기간이 기산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5. 다음 중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해 법원이 그 진술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원본으로서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것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에 관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④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16. 다음 중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 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 ② 상고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은 당해 사건의 하급심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며, 이 경우에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의 직접 이유가 된 원심판결에 대한 소극적인 부정 판단에 한하여 생긴다.
- ③ 파기환송 전의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지만,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은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17. 다음 중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②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이상 무죄의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
- ③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면 징계혐의사실은 인정될 수 없으며,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 저촉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법률조항은 유죄판결이나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바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18. 다음 중 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된다면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②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한 증거능력이 없다.
- ③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으로 청구할 수 있다.
- ④ 피고인과 다른 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이 선서없이 한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19. 다음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심원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만 70세 이상인 사람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20. 다음 중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미치지 아니한다.
- ②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다.
- ③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④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사회일반의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21.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과 검사 사이에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항의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하여 이견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협의를 요청 받은 검사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지방해양경찰관서를 제외한다)의 장의 협의에 따른다.

22. 다음 중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법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하여진 사실상의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이후에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은 경우, 그 피의자는 「형법」 제145조 제1항의 도주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 ㉡ 수사기관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사술 또는 계락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해서 검거하면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이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 구속된 피의자의 가족·동거인·고용주는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야 한다.
-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3. 다음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 ㉡ 구속 전 피의자심문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 ㉣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4. 다음 <보기> 중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
- ㉡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으나 증인신문 당시 대부분의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행한 진술이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 ㉢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인 때
- ㉣ 진술을 요할 자가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
- ㉤ 증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으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진술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보지 아니하는 등 증인의 법정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

- ㉠ 2개 ㉡ 3개 ㉢ 4개 ㉣ 5개

25. 다음 <보기> 중 고소권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 ‘처’가 모욕당한 경우 ‘그 남편’은 적법한 고소권자가 될 수 없다.
- ㉡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고소할 수 있다.
- ㉢ 생모라고 하더라도 고소 당시 배우자 甲과 이혼하였다면 甲의 아들(피해자)을 위하여 독립하여 고소할 수 없다.
- ㉣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고소 후에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상실하면 그 고소는 무효이다.

- ㉠ 1개 ㉡ 2개 ㉢ 3개 ㉣ 4개

26. 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신문은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소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 ④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27. 다음 <보기> 중 자수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 세관 검색시 금속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 자수에 해당한다.
- ㉡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 ㉢ 사법경찰관이 자수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 신문지상에 혐의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하였는데도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식소환이 없으므로 자진 출석하여 사실을 밝히고 처벌을 받고자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출석시간을 지정받은 다음 자진출석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8. 다음 중 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이 검찰송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의 절차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후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검사는 송부받은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그 서류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29.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면서 검사에게 거증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존재 입증
- ②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정액의 인정 등 ‘몰수·추정의 사유’ 입증
- ③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형법」 제310조 규정 중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
- ④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30. 다음 <보기>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①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 ② 공소기각 또는 면소판결의 재판이 확정된
- ③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 ④ 판결이나 결정이 선고된

31. 다음 <보기> 중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 사인의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이 적정한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 ㉡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때 인도시점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
-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2. 다음 <보기> 중 참고인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 참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3. 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해당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지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체포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였다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할 수 있다.
- ④ 기소 전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34. 다음 <보기> 중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 ㉡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의 범위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뿐 아니라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 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도 포함된다.
 - ㉢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 ㉣ 검사는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의 사본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5. 다음 중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② 재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게 되면 공소제기가 의제된다.
- ③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다.

36. 다음 <보기> 중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전기통신의 감청은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도 포함한다.
 - ㉡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
 - ㉢ 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7. 다음 <보기> 중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피고인 甲이 주거침입의 범행을 자백하는 때에, 주거침입행위의 동기에 관한 참고인의 전문 진술이 제출된 경우
 - ㉡ 피고인 乙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하였다고 자백하는 때에, 그 위조신분증이 제출된 경우
 - ㉢ 피고인 丙이 반지를 편취하였다고 자백하는 때에, 피고인으로부터 반지를 매입하였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제출된 경우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8. 다음 <보기> 중 변호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해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공판심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뒤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 필요적 변호사건과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경우에 변호인의 관여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위법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 절차에서의 소송행위 외에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

	㉠	㉡	㉢	㉣	㉤	㉥
①	X	O	O	X	O	O
②	O	X	O	X	O	X
③	O	O	X	O	X	X
④	O	X	X	O	X	O

39. 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자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도 보장되지만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 절차에 있어서는 보장되지 아니한다.

㉢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40. 다음 중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으나,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②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공소장부분을 첨부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나, 법원이 약식명령청구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하고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한 때에는 5일 이내에 피고인 수에 상응한 공소장부분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의 정식 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정식재판청구사건을 통상절차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다른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들과 병합한 후 각 죄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는 것은 형중상향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2025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 정 위 (2교시) >

- 실무A형[관리운영, 경비안전] (10)
- 실무B형[관리운영, 정보수사] (11)
- 실무C형[경비안전, 정보수사] (12)
- 항공법규 (05)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응시자 유의사항

- 본인의 응시계급, 교시, 과목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신속히 페이지를 넘겨 인쇄 상태 등 파본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문제지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교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교체를 요구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성 명 :

응 시 번 호 :

해 양 경 찰 청

실 무 A 형
[관리운영, 경비안전]

1. 다음 중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해양경찰교육원과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을 두며,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에 해양경찰서를 둔다.
 - ③ 직제는 본청과 소속기관의 정원을, 직제시행규칙은 본청과 지방해양경찰관서, 교육원, 정비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정원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 ④ 지방해양경찰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둔다.
2.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취소로 한다.
 - ② 소청심사위원회가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합의에 따른다.
 - ④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에 차례로 불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3. 다음 중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을 위반하여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사람의 벌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다음 중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신규채용 경위 경찰공무원의 순환근무 기간은 경비합정 1년, 육상부서 1년으로 한다.
 - ②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은 서장으로 보직할 수 없다.
 - ④ 경정 이하 공무원 중 만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현재 관서의 전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다른 지방청으로 전보할 수 없다.
5. 다음 중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6. 다음 중 「전파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파수할당’이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 ② ‘주파수지정’이란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주파수 사용승인’이란 안보·외교적 목적 또는 국제적·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특정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주파수 공동사용’이란 둘 이상의 주파수 이용자가 동일한 범위의 주파수를 상호 배제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다음 <보기>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상 ‘별도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보기 > —

- ㉠ ‘별도정원’이란 파견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한다.
- ㉡ 중앙행정기관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1년 이상 파견을 하는 경우 별도의 협의 없이 별도정원 운영이 가능하다.
- ㉢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6월 이상 교육훈련을 받게 하는 경우 별도정원 운영이 가능하다.
- ㉣ 연도별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에 의한 6월 이상의 교육훈련은 별도정원이 가능하다.

- ① ㉠, ㉡ ② ㉡, ㉢ ③ ㉢, ㉣ ④ ㉠, ㉣

14. 다음 중 「해양경찰 소송사무 처리규칙」상 ‘고문 변호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문변호사는 15명 이내로 한다.
- ②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재위촉하는 경우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한다.
- ④ 고문변호사의 자문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5.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 ‘직권 면직’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 ②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③ 전직시험에서 두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 ④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16. 다음 중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상 관서운영 경비출납 회계관서의 검사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함정 : 근무시간 중에는 담당 부서장(부장, 기관장, 통신장 등)이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일 당직관 또는 당직원
- ② 사무실 : 계장급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일 경우에는 계원 중 선임공무원
- ③ 사무실 : 사업부서 담당계장급
- ④ 파출소 : 파출소장

17. 다음 <보기> 중 「정비편람」상 함정정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보기 > —

- ㉠ ‘경찰서정비’란 고장발생 시 함정정비반 또는 해군정비창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비이다.
- ㉡ ‘계획된 정비’란 함정에서 실시하는 정비로 장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장비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정비이다.
- ㉢ ‘응급정비’는 함정을 정상적으로 운용하면서 함정승조원이 직접 부속품의 교환 등 고장방지를 위한 정비이다.
- ㉣ ‘예방정비’는 긴급한 수리 또는 계획된 정비를 위해 해경정비창 및 해군정비창(수리창) 등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비이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

18. 다음 중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상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적극행정으로 인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지원 받게 된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의견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된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해야 한다.
- ④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1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19. 다음 <보기> 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공가를 승인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 되었을 때
 - ㉡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 천재지변, 교통 혼잡 등으로 출근의 지연이 예상될 때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 ㉤ 풍수·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재해지역 자원봉사에 참여할 때
 -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동호회에 관련한 활동에 참여할 때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0. 다음 <보기>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가족수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보기 >
- ㉠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부양가족의 수는 3명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3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 형제·자매가 함께 공무원인 경우 그 부모에 대하여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만 지급한다.
 -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30,000원을 지급한다.
 - ㉣ 자녀의 경우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월 110,000원을 지급한다.

- ① ㉠ ② ㉡
③ ㉠, ㉢ ④ ㉠, ㉢, ㉣

21. 「해양과학조사법」상 허가 또는 동의를 받으려는 외국인 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기간은?

- ① 2개월 ② 4개월
③ 6개월 ④ 7개월

22. 다음 중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칙」상 중요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집되어 상황담당부서의 장을 보좌하여 상황처리를 지원하는 팀을 무엇이라 하는가?

- ① 초동조치 대응반 ② 상황지원팀
③ 상황대책팀 ④ 상황관리팀

23.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해상구조조정본부와 해상구조조정지부를 지정·운영하는 근거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1982년 UN 해양법협약」과 「1989년 SALVAGE 협약」
② 「1974년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④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과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

24. 다음 중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상 장비의 휴대, 비치 및 순찰근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은 근무 중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와 가스발사총을 항상 휴대해야 한다.
② 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은 근무 중 음주 측정기와 수갑을 순찰차에 비치해야 한다.
③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은 관내 사건사고 현황 분석, 조치사항 및 사건사고 유형별 처리요령과 관내 지리적·인문적 참고자료 등을 담은 순찰자료집을 파출소 내 비밀보관함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순찰구조팀장은 치안상황 및 임무수행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치 또는 휴대해야 할 장비를 조정할 수 있다.

25. 다음 보기 중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민(지정조사 참여자)이 실시하는 결과보고 종류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예비보고

㉡ 일일보고

㉢ 특별보고

㉣ 최종보고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6.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의 결격사유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독자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14세 미만(제2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사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사람은 제외한다.

④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7. 다음 보기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구조본부의 장이 선박의 이동 및 대피를 명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선박구난현장에서 구난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선박

㉡ 선박구난현장에서 구난작업에 방해가 되는 선박

㉢ 영해에서 풍랑 등 기상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외국선박

㉣ 태풍 등 해상기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선박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8. 다음 보기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조난된 선박 등의 예인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수난구호민간단체에 소속된 선박이 구조본부의 장의 요청을 받고 예인하는 경우

㉡ 수난구호민간단체에 소속된 선박이 소방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고 예인하는 경우

㉢ 민간에 소속된 선박이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예인하는 경우

㉣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피 예인선의 선장이나 소유자에게 조난선박 예인에 따른 책임에 대해 사전 고지 없이 예인하는 경우

㉤ 국가기관에 소속된 선박이 조난된 선박 등을 긴급히 구난하기 위하여 예인하는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9. 다음 중 ‘VHF-DS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설치된 모든 선박은 조난신호 수신시 VHF에 위치 표시가 없을 경우 VHF에 표시된 AIS번호를 통해 V-PASS 또는 C-VMS시스템에서 위치를 조회할 수 있다.

② 조난신호 접수처는 KT 서울무선센터, 수협중앙회 수협안전조업 상황실, 동·서해 어업관리단 상황실, 국제조난안전통신센터, 경비함정, 상선 등에서 수신이 가능하다.

③ 조난신호 수신시 VHF-DSC에는 Relay 기능이 있어 조난신호를 수신한 선박들이 Relay 버튼을 누를 경우 때로는 VHF-DSC 통달거리(약 100해리) 밖의 조난신호 수신이 가능하다.

④ 어선안전조업국은 VHF-DSC를 이용해 출항 선박의 위치를 추출하므로 어선의 경우, 선박 관할 어선안전조업국에 위치 확인 요청이 가능하다.

30. 다음 중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상 자연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해양경찰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합동으로 실시하는 연안해역 안전점검을 무엇이라 하는가?

- ① 특별점검

② 합동점검

③ 긴급점검

④ 수시점검

31. 다음 중 「통합방위법」 상 용어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 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 ②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 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 ③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합대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없는 사태를 말한다.
- ④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이, 공항·항만·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32. 다음 중 「선박구명설비 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상 발염식자기점화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물 위에 투하하는 경우 2분 이내 자동적으로 발광되고 풍랑 중에서도 똑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
- ② 180도 일정한 방향으로 2칸델라 이상의 흰색의 빛을 2시간 이상 연속하여 발할 수 있을 것
- ③ 18미터(제1종선 또는 제3종선에 비치하는 자기점화등에 있어서는 30미터)의 높이(최소항해흘수선으로부터의 높이가 18미터를 넘는 장소에 적재되어 있는 자기점화등에 대하여는 그 적재장소의 높이)에서 물위에 투하하는 경우 그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할 것
- ④ 점화시 위험이 없고, 구명부환에 연결할 수 없으며, 폭발성이 없어 불시에 발화하지 아니할 것

33. 다음 보기 중 「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선내비상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선장은 구명정훈련시에 구명정을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2월에 한번씩 구명정을 바다에 띄어 놓고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여객선의 선장은 안내방송 또는 동영상 방영 등의 방법으로 선박의 출항 후 1시간(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경우에는 4시간) 이내에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 안내방송 또는 동영상의 내용은 승·하선 질서의 유지 등 여객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여객선의 구명설비·소화기 등의 사용법, 비상시 여객 행동요령, 항해시간·기상정보 및 입출항 예정 시간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선장은 당해선박의 해원 4분의 1 이상이 교체된 때에는 출항 후 24시간 이내에 선내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 비상 신호의 방법은 기적 또는 사이렌에 의한 연속 7회의 단음과 계속 1회의 장음으로 한다.
 - ㉥ 소방훈련·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은 매월 1회 선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실시하되, 여객선의 경우에는 10일(국내항과 외국항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7일)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4. 다음 중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상 가장 옳은 것은?

- ① 사전감사 질의서를 접수한 해당 부서(기관)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② 감사 연기가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감사 예정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IMO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세부 수감 일정에 따라 소속 직원이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감사에 참석하고 대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④ 담당 부서(기관)장은 효율적인 수감을 위하여 정부기관 및 대행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35. 다음 중 침몰 시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침몰 시신이 떠오르는 시기는 물과 침몰한 시신의 비중에 의하여 결정되며, 부패 가스 형성(해수는 담수에 비해 부패 진행이 빠르다)이 중요하다.
- ② 인체 비중은 0.967~1.057정도, 옷이나 부착물 등에 의하여 비중이 크게 달라지며 사고 후 바로 부상하는 경우는 20~30 %이며 대개 부패로 체내에 가스가 발생하면서 부상한다.
- ③ 해수 온도가 여름철 25℃인 경우에 침몰 시신의 부상 시기로 근접한 것은 발생일로부터 약 2~5일 사이이다.
- ④ 30~40 m 수심은 수온이 4~5℃로 낮아지므로 부패의 진행이 없거나 부패 가스가 발생해도 수압으로 압축되어 체적이 증대되지 않아 부상하지 않는다.

36. 다음 보기 중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상,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소재지는 네덜란드 헤이그(Hague)이며 재판관의 임기는 9년, 정원은 21인이다.
- ㉡ 재판관은 동일 국적자가 2인 이상 될 수 없으며 전자투표에 의해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된다.
- ㉢ 관할권은 모든 당사국에 개방되며 제11부(심해저)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건의 경우이거나, 모든 당사자가 수락한 관할권을 재판소에 부여하는 다른 협정에 따라서 회부된 사건의 경우 당사국 이외의 주체에게도 개방된다.
- ㉣ 관할권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된 모든 분쟁과 신청 및 재판소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다른 모든 협정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미친다.
- ㉤ 의사정족수는 11인, 의결정족수는 출석 과반수이며 재판장의 결정투표권이 인정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7. 다음 중 「낙시관리 및 육성법」 상 낙시통제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낙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낙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낙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③ 낙시통제구역의 지정 시 안내판의 규격·내용 및 설치 장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해제·변경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④ 해양경찰서장은 낙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낙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낙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38.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수상레저기구 안에서 술을 판매·제공하거나 수상레저기구 사업자가 수상레저기구 안으로 이를 반입하도록 하는 행위
- ②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행위
- ③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는 행위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을 이용자가 타고 있는 수상레저기구로 반입·운송하는 행위

39. 다음 중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상 낙시어선 영업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낙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낙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내측한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연접한 시·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한다.
 - ② 영해의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는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 장관에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동의하에 영해 바깥쪽 해역을 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낙시어선업자가 낙시인을 낙시어선에 승선시켜 낙시터로 안내할 뿐 그 어선에서 낙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낙시인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1개 지점이 그 낙시어선의 출항지가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있을 때에는 해당 낙시어선업의 영업은 낙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40. 「해상교통안전법」 상 선박 소유자는 선박의 안전 운항 등을 위해 적용대상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음 중 적용대상 선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 ②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기선(機船)과 밀착된 상태로 결합된 부선(桴船)을 포함한다]
 - ③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획물 운반선과 이동식 해상구조물
 - ④ 수면비행선박

실 무 B 형
[관리운영, 정보수사]

1. 다음 중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해양경찰교육원과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을 두며,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에 해양경찰서를 둔다.
 - ③ 직제는 본청과 소속기관의 정원을, 직제시행규칙은 본청과 지방해양경찰관서, 교육원, 정비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정원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 ④ 지방해양경찰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둔다.
2.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취소로 한다.
 - ② 소청심사위원회가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합의에 따른다.
 - ④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에 차례로 불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3. 다음 중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을 위반하여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사람의 벌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다음 중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신규채용 경위 경찰공무원의 순환근무 기간은 경비합정 1년, 육상부서 1년으로 한다.
 - ②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은 서장으로 보직할 수 없다.
 - ④ 경정 이하 공무원 중 만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현재 관서의 전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다른 지방청으로 전보할 수 없다.
5. 다음 중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6. 다음 중 「전파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파수할당’이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 ② ‘주파수지정’이란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주파수 사용승인’이란 안보·외교적 목적 또는 국제적·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특정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주파수 공동사용’이란 둘 이상의 주파수 이용자가 동일한 범위의 주파수를 상호 배제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7. 다음 <보기> 중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 ㉠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하게 한다.
- ㉡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 ㉢ 국정감사의 절차는 국정감사계획서 작성 -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안 - 본회의 승인 - 국정감사 실시 - 보고·자료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 - 결과보고 제출 순으로 실시한다.
- ㉣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고, 국정조사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실시한다.

- ① ㄱ, ㄴ ② ㄱ, ㅋ
- ③ ㄴ, ㄷ ④ ㅈ, ㅊ

8. 다음 <보기>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 ㉠ 선령 ()년 이상 함정은 매 상가수리시 선저외판 검사를 시행한다.
- ㉡ 함정에서 사용하는 와이어로프는 ()년에 1회씩 점검한다.
- ㉢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를 초과한 와이어로프는 교체하여야 한다.
- ㉣ 팽창식 구멍뚫목의 개방 가스팽창시험은 ()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① 22 ② 23 ③ 28 ④ 39

9. 다음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 시민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③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자가 1년 이내에 5명 이상 발생
- ④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10. 다음 중 「국고금 관리법(시행령 포함)」상 수입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려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② 납부기한이 정해진 수입금의 납입 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7일 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세의무자등에게 보내야 한다.
- ③ 납부기간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 ④ 출납공무원에게 즉시 납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말로 고지할 수 있다.

11. 다음 중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정예산은 본예산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본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이다.
- ③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예산집행 과정에서 다시 제출되는 예산이다.
- ④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정부가 일정한 범위에서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을 의미한다.

12. 다음 <보기> 중 네트워크 관련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 게이트웨이(Gateway) :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 연결시 최적의 IP 경로를 설정하여 전송한다.
- ㉡ 브릿지(Bridge) : 주로 LAN에서 다른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보내거나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출입구 역할을 한다.
- ㉢ 리피터(Repeater) : 디지털 회선 중간에서 출력 전압을 감소하여 네트워크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 ㉣ 허브(Hub) :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한꺼번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로 각 회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다음 <보기>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상 ‘별도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 ㉠ ‘별도정원’이란 파견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한다.
- ㉡ 중앙행정기관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1년 이상 파견을 하는 경우 별도의 협의 없이 별도정원 운영이 가능하다.
- ㉢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6월 이상 교육훈련을 받게 하는 경우 별도정원 운영이 가능하다.
- ㉣ 연도별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에 의한 6월 이상의 교육훈련은 별도정원이 가능하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14. 다음 중 「해양경찰 소송사무 처리규칙」 상 ‘고문 변호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문변호사는 15명 이내로 한다.
- ②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재위촉하는 경우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한다.
- ④ 고문변호사의 자문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5.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 ‘직권 면직’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 ②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③ 전직시험에서 두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 ④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16. 다음 중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상 관서운영 경비출납 회계관서의 검사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함정 : 근무시간 중에는 담당 부서장(부장, 기관장, 통신장 등)이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일 당직관 또는 당직원
- ② 사무실 : 계장급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일 경우에는 계원 중 선임공무원
- ③ 사무실 : 사업부서 담당계장급
- ④ 파출소 : 파출소장

17. 다음 <보기> 중 「정비편람」상 함정정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 ㉠ ‘경찰서정비’란 고장발생 시 함정정비반 또는 해군정비창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비이다.
- ㉡ ‘계획된 정비’란 함정에서 실시하는 정비로 장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장비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정비이다.
- ㉢ ‘응급정비’는 함정을 정상적으로 운용하면서 함정승조원이 직접 부속품의 교환 등 고장방지를 위한 정비이다.
- ㉣ ‘예방정비’는 긴급한 수리 또는 계획된 정비를 위해 해경정비창 및 해군정비창(수리창) 등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비이다.

- ① ㄱ, ㄴ ② ㅈ, ㅊ
- ③ ㄱ, ㄴ, ㅊ ④ ㄱ, ㄴ, ㅈ, ㅊ

18. 다음 중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상 적극 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적극행정으로 인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지원 받게 된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의견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된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해야 한다.
- ④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1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19. 다음 <보기> 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공가를 승인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 되었을 때
 - ㉡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 천재지변, 교통 혼잡 등으로 출근의 지연이 예상될 때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 ㉤ 풍수·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재해지역 자원봉사에 참여할 때
 -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동호회에 관련한 활동에 참여할 때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0. 다음 <보기>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가족수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보기 >
- ㉠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부양가족의 수는 3명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3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 형제·자매가 함께 공무원인 경우 그 부모에 대하여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만 지급한다.
 -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30,000원을 지급한다.
 - ㉣ 자녀의 경우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월 110,000원을 지급한다.

- ① ㉠ ② ㉡
③ ㉠, ㉢ ④ ㉠, ㉢, ㉣

21. 다음 중 공조수사의 자료유형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계자료 : 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장물수사자료
- ② 수사교훈참고자료 : 중요사건발생검거카드, 우범자관찰카드
- ③ 개인식별자료 : 수범자료, 지문자료, 수배자료
- ④ 구증자료 : 현장사진기록

22. 다음 <보기>의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외사계 경찰관의 사건처리 요령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

주한 S대사관 참사관인 A는 목포-제주 간 여객선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내국인 B와 시비 끝에 술병으로 B의 이마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 ① A의 의사에 반하여 체포·구금할 수 없다.
- ② A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출석하도록 하였다.
- ③ A가 외교 특권을 가진 사람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속히 수사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 ④ A가 외교관으로 확인된 경우 수사권이 면제되기 때문에 입건 전 조사 종결처리 한다.

23. 다음 중 우리나라의 ‘조약과 국내법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② 조약은 국가 간에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로, 구속력은 없다
- ③ 국내법과 조약의 내용이 충돌할 때에는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 ④ 국내법과 조약의 내용이 충돌할 때에는 “후에 발효한 법률이 효력면에서 우선한다.”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24. 다음 중 「법화학감정규정」상 감정물 채취요령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마약류 감정물은 깨끗한 용기에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채취하고 운송 중 파손, 오손,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 ② 마약류 감정을 위한 모발감정에 필요한 모발은 정수리 부위의 모발을 손으로 당겨 뽑거나 두피에 가장 가까운 부분을 가위로 잘라야 한다.
- ③ 마약류 감정을 위한 생체감정물은 부패 방지를 위해 저온상태(냉장보관 4℃ 이하)로 보관하고 가능한 한 신속한 방법으로 송부한다.
- ④ 화학물질 및 독극물 감정시에는 위장 내용물, 혈액, 뇨 등 각 장기 조직 등을 각각 세척된 용기에 50g 이상 채취, 밀봉하여 4℃ 이하 냉장 상태로 신속히 송부한다.

25. 다음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내용이다. 아래 () 안의 숫자의 합은 얼마인가?

- < 보기 >
- ㉠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2항에 따라 긴급체포 후 ()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제외)
 - ㉡ 사법경찰관은 「해양경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비수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 긴급체포 후 ()시간 이내에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시간마다 ()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 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① 48 ② 50 ③ 58 ④ 60

26. 다음 중 정보요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SRI: 정세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책상 수정이 요구되거나 이를 위한 자료가 절실히 요구되는 경우
- ② OIR: 어떤 수시적 돌발상황의 해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임시적·단편적·지역적인 특수사건을 단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EEI: 각 정보부서에 맡고 있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반적·포괄적 정보로 단기적이고 일시적으로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④ PNIO: 국가안전보장이나 정책에 관련되는 국가정보목표의 우선순위로서, 정부에서 기획된 연간 기본정책에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목표로 하여 선정하는 경우

27. 다음 <보기> 중 실황조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실황조사서는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의해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범죄현장 기타 범죄 관련 장소, 물건, 신체 등에 대해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실험, 경험, 인식한 사실을 명확히 하는 수사활동의 결과를 서면에 작성한 것이다.
 - ㉡ 실황조사서 작성 시 모두의 피의자 성명과 피의사건명은 사건발생시를 표준으로 한다.
 - ㉢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판례에 의함)
 - ㉣ 실황조사서의 내용 및 법률상의 효과는 검증조서와 다름이 없으며 검증조서와 마찬가지로 강제절차이다.
 - ㉤ 작성자의 기명날인·서명은 직접 실황조사를 한 수사관이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8. 다음 중 종적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행적수사 ② 장물수사
- ③ 미행·잠복 ④ 감별수사

29. 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입자의 전기통신 일시
- ②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 로그인 기록
- ③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 가입자 번호
- ④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0. 다음 중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의 종류와 그에 대한 설명이 가장 옳게 연결된 것은?

- ① 오렌지수배서 - 새로운 특이 범죄수법을 분석하여 각 회원국에 배포 목적
- ② 흑색수배서 - 상습 국제범죄자의 동향파악 및 범죄예방 목적
- ③ 녹색수배서 - 수배자의 신원·전과 및 소재확인 목적
- ④ 황색수배서 -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 상실자의 신원확인 목적

31. 다음 <보기> 중 정보생산자와 정보사용자의 관계에 있어 정보사용자의 장애요인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편향적 분석의 문제
 - ㉡ 다른 정보 매체와 경쟁
 - ㉢ 적시성의 문제
 - ㉣ 판단의 불명확성
 - ㉤ 적합성의 문제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2. 다음 중 변사자 검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체를 인수할 사람이 없거나 변사자의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현존하는 지역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도해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변사자에 대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에는 사체를 소지품 등과 함께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한다.
- ④ 변사자의 유족이 부검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부검이 가능하다.

33. 다음 <보기> 중 우리나라 여권과 사증(VIS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 관광통과(B-2)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30일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받아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
 - ㉢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되, 그 여행증명서의 발급 목적을 이루면 그 효력을 잃는다.
 - ㉣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4. 다음 중 「출입국관리법」상 범죄를 범한 내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할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1개월 이내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 ②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 ③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35. 다음 <보기> 중 ‘적극적’ 방첩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대상인물 감시
 - ㉡ 양동간계시위
 - ㉢ 역용공작
 - ㉣ 허위정보유포
 - ㉤ 첩보수집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8. 다음 보기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조난된 선박 등의 예인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 수난구호민간단체에 소속된 선박이 구조본부의 장의 요청을 받고 예인하는 경우
- ㉡ 수난구호민간단체에 소속된 선박이 소방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고 예인하는 경우
- ㉢ 민간에 소속된 선박이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예인하는 경우
- ㉣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피 예인선의 선장이나 소유자에게 조난선박 예인에 따른 책임에 대해 사전 고지 없이 예인하는 경우
- ㉤ 국가기관에 소속된 선박이 조난된 선박 등을 긴급히 구난하기 위하여 예인하는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다음 중 ‘VHF-DS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설치된 모든 선박은 조난신호 수신시 VHF에 위치 표시가 없을 경우 VHF에 표시된 AIS번호를 통해 V-PASS 또는 C-VMS시스템에서 위치를 조회할 수 있다.
- ② 조난신호 접수처는 KT 서울무선센터, 수협중앙회 수협안전조업 상황실, 동·서해 어업관리단 상황실, 국제조난안전통신센터, 경비함정, 상선 등에서 수신이 가능하다.
- ③ 조난신호 수신시 VHF-DSC에는 Relay 기능이 있어 조난신호를 수신한 선박들이 Relay 버튼을 누를 경우 때로는 VHF-DSC 통달거리(약 100해리) 밖의 조난신호 수신이 가능하다.
- ④ 어선안전조업국은 VHF-DSC를 이용해 출항 선박의 위치를 추출하므로 어선의 경우, 선박 관할 어선안전조업국에 위치 확인 요청이 가능하다.

10. 다음 중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상 자연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해양경찰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합동으로 실시하는 연안해역 안전점검을 무엇이라 하는가?

- ① 특별점검 ② 합동점검
③ 긴급점검 ④ 수시점검

11. 다음 중 「통합방위법」상 용어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 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 ②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 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 ③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합대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없는 사태를 말한다.
- ④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이, 공항·항만·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12. 다음 중 「선박구명설비 기준(해양수산부 고시)」상 발염식자기점화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물 위에 투하하는 경우 2분 이내 자동적으로 발광되고 풍랑 중에서도 똑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
- ② 180도 일정한 방향으로 2칸델라 이상의 흰색의 빛을 2시간 이상 연속하여 발할 수 있을 것
- ③ 18미터(제1종선 또는 제3종선에 비치하는 자기점화등에 있어서는 30미터)의 높이(최소항해할 수선으로부터의 높이가 18미터를 넘는 장소에 적재되어 있는 자기점화등에 대하여는 그 적재장소의 높이)에서 물위에 투하하는 경우 그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할 것
- ④ 점화시 위험이 없고, 구명부환에 연결할 수 없으며, 폭발성이 없어 불시에 발화하지 아니할 것

13. 다음 보기 중 「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내비상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 선장은 구명정훈련시에 구명정을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2월에 한번씩 구명정을 바다에 띄어 놓고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여객선의 선장은 안내방송 또는 동영상 방영 등의 방법으로 선박의 출항 후 1시간(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경우에는 4시간) 이내에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 안내방송 또는 동영상의 내용은 승·하선 질서의 유지 등 여객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여객선의 구명설비·소화기 등의 사용법, 비상시 여객 행동요령, 항해시간·기상정보 및 입출항 예정 시간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선장은 당해선박의 해원 4분의 1 이상이 교체된 때에는 출항 후 24시간 이내에 선내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 비상 신호의 방법은 기적 또는 싸이렌에 의한 연속 7회의 단음과 계속 1회의 장음으로 한다.
- ㉥ 소방훈련·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은 매월 1회 선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실시하되, 여객선의 경우에는 10일(국내항과 외국항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7일)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4. 다음 중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상 가장 옳은 것은?

- ① 사전감사 질의서를 접수한 해당 부서(기관)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② 감사 연기가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감사 예정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IMO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세부 수감 일정에 따라 소속 직원이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감사에 참석하고 대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④ 담당 부서(기관)장은 효율적인 수감을 위하여 정부기관 및 대행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5. 다음 중 침몰 시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침몰 시신이 떠오르는 시기는 물과 침몰한 시신의 비중에 의하여 결정되며, 부패 가스 형성(해수는 담수에 비해 부패 진행이 빠르다)이 중요하다.
- ② 인체 비중은 0.967~1.057정도, 옷이나 부착물 등에 의하여 비중이 크게 달라지며 사고 후 바로 부상하는 경우는 20~30 %이며 대개 부패로 체내에 가스가 발생하면서 부상한다.
- ③ 해수 온도가 여름철 25℃인 경우에 침몰 시신의 부상 시기로 근접한 것은 발생일로부터 약 2~5일 사이이다.
- ④ 30~40 m 수심은 수온이 4~5℃로 낮아지므로 부패의 진행이 없거나 부패 가스가 발생해도 수압으로 압축되어 체적이 증대되지 않아 부상하지 않는다.

16. 다음 보기 중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소재지는 네덜란드 헤이그(Hague)이며 재판관의 임기는 9년, 정원은 21인이다.
- ㉡ 재판관은 동일 국적자가 2인 이상 될 수 없으며 전자투표에 의해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된다.
- ㉢ 관할권은 모든 당사국에 개방되며 제11부(심해저)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건의 경우이거나, 모든 당사자가 수락한 관할권을 재판소에 부여하는 다른 협정에 따라서 회부된 사건의 경우 당사국 이외의 주체에게도 개방된다.
- ㉣ 관할권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된 모든 분쟁과 신청 및 재판소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다른 모든 협정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미친다.
- ㉤ 의사정족수는 11인, 의결정족수는 출석 과반수이며 재판장의 결정투표권이 인정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다음 중 「낙시관리 및 육성법」 상 낙시통제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낙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낙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 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낙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③ 낙시통제구역의 지정 시 안내판의 규격·내용 및 설치 장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해제·변경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④ 해양경찰서장은 낙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낙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낙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8.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수상레저기구 안에서 술을 판매·제공하거나 수상레저기구 사업자가 수상레저기구 안으로 이를 반입하도록 하는 행위
- ②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행위
- ③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는 행위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을 이용자가 타고 있는 수상레저기구로 반입·운송하는 행위

19. 다음 중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상 낙시어선 영업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낙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낙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내측한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접한 시·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한다.
- ② 영해의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는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동의하에 영해 바깥쪽 해역을 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낙시어선업자가 낙시인을 낙시어선에 승선시켜 낙시터로 안내할 뿐 그 어선에서 낙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낙시인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1개 지점이 그 낙시어선의 출항지가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있을 때에는 해당 낙시어선업의 영업은 낙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20. 「해상교통안전법」 상 선박 소유자는 선박의 안전 운항 등을 위해 적용대상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음 중 적용대상 선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 ②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기선(機船)과 밀착된 상태로 결합된 부선(桴船)을 포함한다]
- ③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획물 운반선과 이동식 해상구조물
- ④ 수면비행선박

21. 다음 중 공조수사의 자료유형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계자료 : 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장물 수사자료
 - ② 수사교훈참고자료 : 중요사건발생검거카드, 우범자 관찰카드
 - ③ 개인식별자료 : 수범자료, 지문자료, 수배자료
 - ④ 구증자료 : 현장사진기록

22. 다음 <보기>의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외사계 경찰관의 사건처리 요령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보기 > ————

주한 S대사관 참사관인 A는 목포-제주 간 여객선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내국인 B와 시비 끝에 술병으로 B의 이마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 ① A의 의사에 반하여 체포·구금할 수 없다.
- ② A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출석하도록 하였다.
- ③ A가 외교 특권을 가진 사람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속히 수사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 ④ A가 외교관으로 확인된 경우 수사권이 면제되기 때문에 입건 전 조사 종결처리 한다.

23. 다음 중 우리나라의 ‘조약과 국내법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② 조약은 국가 간에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로, 구속력은 없다
 - ③ 국내법과 조약의 내용이 충돌할 때에는 “일반 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 ④ 국내법과 조약의 내용이 충돌할 때에는 “후에 발효한 법률이 효력면에서 우선한다.”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24. 다음 중 「법화학감정규정」 상 감정물 채취요령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마약류 감정물은 깨끗한 용기에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채취하고 운송 중 파손, 오손,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 ② 마약류 감정을 위한 모발감정에 필요한 모발은 정수리 부위의 모발을 손으로 당겨 뽑거나 두피에 가장 가까운 부분을 가위로 잘라야 한다.
 - ③ 마약류 감정을 위한 생체감정물은 부패 방지를 위해 저온상태(냉장보관 4℃ 이하)로 보관하고 가능한 한 신속한 방법으로 송부한다.
 - ④ 화학물질 및 독극물 감정시에는 위장 내용물, 혈액, 뇨 등 각 장기 조직 등을 각각 세척된 용기에 50 g 이상 채취, 밀봉하여 4℃ 이하 냉장 상태로 신속히 송부한다.

25. 다음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내용이다. 아래 () 안의 숫자의 합은 얼마인가?

- < 보기 > ————
- ㉠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2항에 따라 긴급체포 후 ()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제외)
 - ㉡ 사법경찰관은 「해양경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비수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 긴급체포 후 ()시간 이내에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시간마다 ()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 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① 48 ② 50 ③ 58 ④ 60

26. 다음 중 정보요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SRI : 정세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책상 수정이 요구되거나 이를 위한 자료가 절실히 요구되는 경우
- ② OIR : 어떤 수시적 돌발상황의 해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임시적·단편적·지역적인 특수사건을 단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EEI : 각 정보부서에 맡고 있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반적·포괄적 정보로 단기적이고 일시적으로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④ PNIO : 국가안전보장이나 정책에 관련되는 국가정보목표의 우선순위로서, 정부에서 기획된 연간 기본정책에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목표로 하여 선정하는 경우

27. 다음 <보기> 중 실황조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실황조사서는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의해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범죄현장 기타 범죄 관련 장소, 물건, 신체 등에 대해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실험, 경험, 인식한 사실을 명확히 하는 수사활동의 결과를 서면에 작성한 것이다.
 - ㉡ 실황조사서 작성 시 모두의 피의자 성명과 피의사건명은 사건발생시를 표준으로 한다.
 - ㉢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판례에 의함)
 - ㉣ 실황조사서의 내용 및 법률상의 효과는 검증조서와 다름이 없으며 검증조서와 마찬가지로 강제절차이다.
 - ㉤ 작성자의 기명날인·서명은 직접 실황조사를 한 수사관이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8. 다음 중 종적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행적수사 ② 장물수사
- ③ 미행·잠복 ④ 감별수사

29. 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입자의 전기통신 일시
- ②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 로그인 기록
- ③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 가입자 번호
- ④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0. 다음 중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의 종류와 그에 대한 설명이 가장 옳게 연결된 것은?

- ① 오렌지수배서 - 새로운 특이 범죄수법을 분석하여 각 회원국에 배포 목적
- ② 흑색수배서 - 상습 국제범죄자의 동향파악 및 범죄예방 목적
- ③ 녹색수배서 - 수배자의 신원·전과 및 소재확인 목적
- ④ 황색수배서 -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 상실자의 신원확인 목적

31. 다음 <보기> 중 정보생산자와 정보사용자의 관계에 있어 정보사용자의 장애요인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편향적 분석의 문제
 - ㉡ 다른 정보 매체와 경쟁
 - ㉢ 적시성의 문제
 - ㉣ 판단의 불명확성
 - ㉤ 적합성의 문제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2. 다음 중 변사자 검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체를 인수할 사람이 없거나 변사자의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현존하는 지역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도해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변사자에 대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에는 사체를 소지품 등과 함께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한다.
- ④ 변사자의 유족이 부검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부검이 가능하다.

33. 다음 <보기> 중 우리나라 여권과 사증(VIS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 관광통과(B-2)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30일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받아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
 - ㉢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되, 그 여행증명서의 발급 목적을 이루면 그 효력을 잃는다.
 - ㉣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4. 다음 중 「출입국관리법」상 범죄를 범한 내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할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1개월 이내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 ②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 ③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35. 다음 <보기> 중 ‘적극적’ 방첩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대상인물 감시
 - ㉡ 양동간계시위
 - ㉢ 역용공작
 - ㉣ 허위정보유포
 - ㉤ 첩보수집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6. 다음 중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이나 범인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 ② 신분비공개수사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리는 비공개 수사만으로 부족한 경우 수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분위장 수사를 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24시간 이내에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37. 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신제한조치 허가는 사건별로 신청한다.
- ② 국가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라도 통지를 유예할 수 있을 뿐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③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 ④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등의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38. 다음 <보기> 중 「수사긴급배치규칙」상 을호배치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3,000만원 이상의 다액 절도사건
 - ㉡ 약취유인사건
 - ㉢ 구인 또는 구속피의자 도주사건
 - ㉣ 해양경찰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긴급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9. 다음 중 우리나라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군함의 무해통항에 관한 제한요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사전통고

② 사전허가

③ 사전승인

④ 사후통고

40. 한국에 밀입국한 중국국적의 외국인 A는 도주할 염려가 있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보호 아래 있다. 다음 중 A를 보호시설에 둘 수 있는 최장 기간으로 가장 옳은 것은?(연장기간 포함)

① 10일

② 15일

③ 20일

④ 40일

항공법규

1.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주의공역’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 ② 항공사격·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 ③ 항공기의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 ④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 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2. 다음 <보기>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비행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 보기 >
- ㉠ 항공기의 식별부호
 - ㉡ 무게로 표시한 연료 탑재량
 - ㉢ 출발비행장 및 출발 예정시간
 - ㉣ 항공기의 대수·형식 및 최대이륙중량 등급
 - ㉤ 탑승 총 인원(조종사에 해당하는 인원은 제외)

- ① ㉠, ㉢, ㉣
- ② ㉡, ㉢, ㉣, ㉤
- ③ ㉢, ㉣, ㉤
- ④ ㉠, ㉡, ㉢, ㉣

3. 다음 <보기> 중 「공항시설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항행안전무선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 < 보기 >
- ㉠ DME
 - ㉡ 레이더시설
 - ㉢ GPWS
 - ㉣ ILS
 - ㉤ ACAS
 - ㉥ GNSS Monitoring System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4.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항공기 등록원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공기의 제작자
- ② 항공기의 형식
- ③ 항공기의 제작 연월일
- ④ 항공기의 정치장

5. 다음 <보기>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을 하는 항공운송 사업용 비행기에서 갖추어야 하는 항공계기를 모두 고르시오.

- < 보기 >
- ㉠ 나침반(MAGNETIC COMPASS)
 - ㉡ 시계(시, 분, 초의 표시)
 - ㉢ 정밀기압고도계(SENSITIVE PRESSURE ALTIMETER)
 - ㉣ 기압고도계(PRESSURE ALTIMETER)
 - ㉤ 경사지시계(SLIP INDICATOR)
 - ㉥ 인공수평자세지시계(ATTITUDE INDICATOR)

- ① ㉠, ㉡, ㉢, ㉤
- ② ㉠, ㉡, ㉣, ㉤, ㉥
- ③ ㉠, ㉡, ㉢, ㉥
- ④ ㉠, ㉡, ㉢, ㉣, ㉥

6. 다음 중 「공항시설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항행안전무선시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 ② 자동종속감시시설(ADS)
- ③ 무지향표지시설(NDB)
- ④ 위성항법시설(GNSS)

7.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감항증명을 할 때 지정하여야 할 ‘항공기의 운용 한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속도에 관한 사항
- ② 발동기 운용성능에 관한 사항
- ③ 중량 및 무게중심에 관한 사항
- ④ 비상절차에 관한 사항

8.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야간비행 중인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는 항공기의 등화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착륙등, 우현등, 좌현등
- ② 착륙등, 우현등, 좌현등, 미등
- ③ 충돌방지등, 우현등, 좌현등, 미등
- ④ 충돌방지등, 착륙등, 우현등, 좌현등

9. 다음 중 「공항시설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항행 중인 항공기에 비행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비행장 또는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비행장식별등대
- ② 비행장유도등
- ③ 목표지점등
- ④ 비행장등대

10. 「공항시설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TACAN은 (㉠)을 기준으로 하는 방위각 정보와 지상의 기준점으로부터 항공기까지의 (㉡)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 중 괄호 안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 - 진북, ㉡ - 경사거리
- ② ㉠ - 자북, ㉡ - 경사거리
- ③ ㉠ - 자북, ㉡ - 수평거리
- ④ ㉠ - 진북, ㉡ - 수평거리

11.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감항증명 신청 시 비행교범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공기의 종류에 관한 사항
- ② 항공기의 제원에 관한 사항
- ③ 항공기 조작방법에 관한 사항
- ④ 항공기의 필수장비목록에 관한 사항

12.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비행장 또는 주변에서의 비행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이륙항공기는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450미터의 고도까지 가능한 한 신속히 상승할 것
- ② 이륙하려는 항공기는 안전고도 미만의 고도 또는 안전속도 미만의 속도에서 선회하지 말 것
- ③ 해당 비행장을 관할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과 무선통신을 유지할 것
- ④ 착륙하는 다른 항공기 다음에 이륙하려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가 착륙하여 계류장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륙하기 위한 활주를 시작하지 말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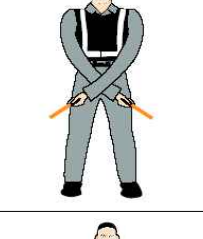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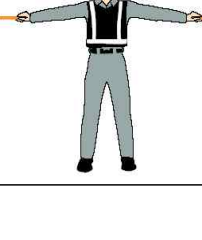
13.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항공기가 착륙허가를 받고도 착륙 예정시간으로부터 (㉠)분 이내에 착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항공기와의 무선교신이 되지 아니할 경우를 (㉡)상황이라고 한다. 다음 중 괄호 안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 - 3분, ㉡ - 경보
- ② ㉠ - 5분, ㉡ - 경보
- ③ ㉠ - 5분, ㉡ - 조난
- ④ ㉠ - 3분, ㉡ - 조난

14.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기장이 항공기 출발 전 “해당 항공기와 그 장비품의 정비 및 정비 결과”와 관련하여 점검하여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공일지에 관한 기록의 점검
- ② 정비에 관한 기록의 점검
- ③ 항공기의 외부 점검
- ④ 계류장 안전 점검

15.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엔진 정지’를 의미하는 신호로 가장 옳은 것은?

구분	신호	설명
①		유도봉을 쥔 팔을 어깨 높이로 들어 올려 왼쪽 어깨 위로 위치시킨 뒤 유도봉을 오른쪽·왼쪽 어깨로 목을 가로질러 움직인다.
②		유도봉을 쥔 양쪽 팔을 몸 쪽 측면에서 직각으로 뻗은 뒤 천천히 두 유도봉이 교차할 때 까지 머리위로 움직인다.
③		몸의 앞쪽에서 유도봉을 쥔 양팔을 아래쪽으로 교차시킨다.
④		유도봉을 든 팔을 90° 측면으로 편다.

16. 해양경찰청 김포항공대 B701(첼린저)호기는 서해상 경도 124도 이서(以西) 중국 비행정정보구역 내에서 수색 임무 중 중국 공군기에 요격을 당하여 “당신은 요격을 당하고 있으니 나를 따라오라.”는 신호를 받았다.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알았다. 지시를 따르겠다.”라는 B701 호기의 응신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날개를 흔들고, 항행등을 불규칙적으로 점멸시킨 후 요격항공기의 뒤를 따라간다.
- ② 바퀴다리를 내리고, 고정착륙등을 켜 상태로 요격항공기의 뒤를 따라간다.
- ③ 항공기의 보조익 또는 방향타를 움직이고, 요격항공기의 뒤를 따라간다.
- ④ 날개를 흔들고, 요격항공기의 뒤를 따라간다.

17.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긴급항공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업무에 항공기를 사용하려는 소유자등은 그 항공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② 긴급항공기가 「항공안전법」 제68조제1호에서 금지하는 “최저비행고도(最低飛行高度) 아래에서의 비행”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긴급항공기가 「항공안전법」 제68조제2호에서 금지하는 “비행 중 물건의 투하(投下) 또는 살포”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④ 긴급항공기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8. 다음 중 「공항시설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카테고리 I’ 접근에서 요구되는 항공등화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진입등시스템 ② 유도로등
③ 활주로시단등 ④ 활주로중심선등

19.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전이고도 이하의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 기압고도계의 수정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1,013.2헥토파스칼로 수정할 것
- ② 비행로를 따라 100해리 이내에 있는 항공교통 관제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QNE로 수정할 것
- ③ 비행로를 따라 185해리 이내에 있는 비행정보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QNH로 수정할 것
- ④ 비행로를 따라 18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항공 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QNH로 수정할 것

20.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경보업무의 수행절차’에서 ‘불확실상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항공기로부터 연락이 있어야 할 시간 또는 그 항공기와의 첫 번째 교신시도에 실패한 시간 중 더 이른 시간부터 30분 이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
- ② 항공기가 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경우
- ③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었으나 불시착할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 ④ 항공기가 마지막으로 통보한 도착 예정시간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예상한 도착 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부터 30분 이내에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항공기 및 탑승객의 안전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 포함)

21. 다음 중 「항공안전법」 상 ‘관제구’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에 표시한 공간의 길
- ② 항공교통량이 복잡한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역
- ③ 비행장 및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역
- ④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 m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한 공역

22. 다음 <보기>는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관제탑에서 통신두절된 항공기에 보내는 빛총신호의 종류에 대한 의미를 연결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 보기 >
- ㉠ 비행 중인 항공기에 보내는 연속되는 붉은색 -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고 계속 선회할 것
 - ㉡ 비행 중인 항공기에 보내는 깜박이는 녹색 - 착륙하여 계류장으로 갈 것
 - ㉢ 지상에 있는 항공기에 보내는 깜박이는 녹색 - 이륙을 허가함
 - ㉣ 지상에 있는 항공기에 보내는 깜박이는 흰색 - 비행장 안의 출발지점으로 돌아갈 것

- ① ㉠, ㉢ ② ㉠, ㉣ ③ ㉡, ㉢ ④ ㉡, ㉣

23. 다음 <보기>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7조 상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는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 ㉡ 화재의 진화
 - ㉢ 화재의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
 - ㉣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臟器) 이송
 - ㉤ 자연재해 발생 시의 긴급복구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4. 다음 중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보기 >
- 「항공안전법」 제3조(군용항공기등의 적용 특례) 제2항 세관업무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와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 충돌 등 항공기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을(를) 적용한다.
- ① 제51조(무선설비의 설치·운용 의무)
 - ② 제69조(긴급항공기의 지정 등)
 - ③ 제79조(항공기의 비행제한 등)
 - ④ 제84조(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 제1항

25. 다음 중 <보기>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항공안전법」 제61조(항공안전 자율보고) 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사람이 그 발생일로부터 (㉠)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 법 및 (㉡)에 따른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 ㉡ |
|---|-----|---------|
| ① | 10일 | 「공항시설법」 |
| ② | 20일 | 「공항시설법」 |
| ③ | 10일 | 「항공사업법」 |
| ④ | 20일 | 「항공사업법」 |

26. 다음 <보기> 중 「항공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공기취급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항공기급여업
 - ㉡ 항공기하역업
 - ㉢ 지상조업사업
 - ㉣ 항공기대여업
 -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7. 다음 <보기>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9조(비행속도의 유지 등) 제2항 C 또는 D등급 구역에서는 공항으로부터 반지름 7.4 km (4해리) 내의 지표면으로부터 750미터 (2,500피트)의 고도 이하에서는 ()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① 진대기속도 200노트
- ② 지시대기속도 200노트
- ③ 진대기속도 230노트
- ④ 지시대기속도 230노트

28. 다음 중 <보기>의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보기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조종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법 제55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조종사는 해당 항공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 까지의 사이에 조종하려는 항공기와 같은 (㉡)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륙 및 착륙을 각각 (㉢) 이상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 | | | | |
|---|-----|----|----|
| | ㉠ | ㉡ | ㉢ |
| ① | 60일 | 형식 | 6회 |
| ② | 90일 | 종류 | 6회 |
| ③ | 90일 | 형식 | 3회 |
| ④ | 90일 | 종류 | 3회 |

29. 다음 <보기>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상 감항 증명 시 검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형식증명에 관한 사항
㉡ 항공기의 설계에 대한 사항
㉢ 항공기의 제작과정에 대한 사항
㉣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 여부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0. 다음 중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보기 > —

「항공안전법」 제152조(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계기비행 자격없이 계기비행을 한 자는 ()의 벌금에 처한다.

- | | |
|--------------|--------------|
| ① 500만원 이하 | ② 1,000만원 이하 |
| ③ 2,000만원 이하 | ④ 3,000만원 이하 |

31.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항공기에 설치·운용하여야 하는 무선설비 중 비상 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신호는 121.5 MHz 및 406 MHz로 송신되어야 한다.
- ②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 중 승객의 좌석 수가 19석을 초과하는 비행기는 2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2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2대 중 1대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여야 한다.
- ④ 1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구명보트에 설치하여야 한다.

32.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응급구조 및 환자 이송을 하는 헬리콥터 제외)에 종사하는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승무시간과 최대비행근무시간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운항승무원 편성	최대 승무시간	최대비행근무시간
①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8시간	12시간
②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12시간	16시간
③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12시간	17시간
④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13시간	20시간

33. 다음 중 「공항시설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장애물 제한표면’에서 ‘전이표면’의 경사도로 가장 옳은 것은?

- | | |
|---------|---------|
| ① 2분의 1 | ② 4분의 1 |
| ③ 6분의 1 | ④ 7분의 1 |

2025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 경 사 (1교시) >

- 형법(06), 해사법규(08) -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응시자 유의사항

- 본인의 응시계급, 교시, 과목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신속히 페이지를 넘겨 인쇄 상태 등 파본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문제지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교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교체를 요구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성 명 :

응 시 번 호 :

해 양 경 찰 청

형 법

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조세범처벌법령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③ 인터넷 신문 또는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 해당한다.
 - ④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등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경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의 이용에 해당한다.
2. 다음 중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적법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불가능하다.
 - ③ 甲이 그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A가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보고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A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 ④ 공직선거후보자가 연설 중에 한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이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될 수 없다.

3. 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②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없는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주처로부터 공사완성의 대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법인 인수 과정에서 법인 등록 요건 중 인력요건을 외형상 갖추기 위해 관련 자격증 소지자들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실을 발주처에 숨기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기망행위와 공사대금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다음 중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심신장애자로 볼 수 없다.
 - ② 소아기호증이 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③ 우울증 기타 정신병이 있는 피고인이 특히 생리도벽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의심이 들 경우에 법원은 전문가의 감정을 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 ④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다음 <보기> 중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 고의 또는 범의는 자기 행위로 인하여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 ㉡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아울러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하여야 한다.
- ㉢ 장물취득죄에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점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할 필요는 없다.
- ㉣ 대상자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타인의 건강진단결과서만을 확인한 채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업주에게는 적어도 청소년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이 인정된다.
- ㉤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 무고죄의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 외에도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의사를 필요로 한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6. 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떠한 물건에 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라도 위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한다.
- ②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③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④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흥기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7. 다음 중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②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의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끈 것이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주었다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8. 다음 중 공모관계 이탈 및 공범관계 이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 ② 甲이 A투자금융회사에 입사하여 다른 공범들과 특정 회사 주식을 허위매수 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내기로 공모하고 시세조종 행위의 일부를 실행한 후 A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甲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공범들이 행한 나머지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③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공범들이 그 청소년에게 계속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 구속 이후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실질적인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처(妻)가 구속된 남편을 대행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면서 「조세범 처벌법」상의 조세포탈행위를 하다가 협의이혼한 후 처(妻) 혼자 회사를 경영하였더라도 이혼 전 남편의 영향력이 제거되지 않아 조세포탈행위가 계속 되었다면 남편은 협의이혼 후에도 여전히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9. 다음 중 해상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해상강도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그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② 공해상에서 외국인이 국내 선박을 대상으로 범한 해상강도죄에 대해 「형법」 제340조 제1항(해상강도죄)이 적용될 수 있다.
 - ③ 「형법」 제340조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으나, 상습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 ④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10. 다음 중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
 - ② 수사처리의 관례상 일부 상치된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참고인 진술조서를 찢어 버리고 진술인의 진술도 듣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일치시킨 새로운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③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④ 민사소송법 기타 공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압류물의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착오하였거나 또는 봉인 등을 손상 또는 효력을 해할 권리가 있다고 오신한 경우는 형벌법규의 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다음 중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경우에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지만,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가중범보다 중한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②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만이 고의 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 다른 집단원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 ③ 결과적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를 같이 발생시킬 의사가 없었더라도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고 중한 결과가 예견가능한 것이었다면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④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12. 다음 중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② 로렉스 손목시계를 몰래 반입하려는 의사로 출국 당시부터 휴대했던 것처럼, 위 시계를 손목에 찬 채 다른 물품이 들어 있는 가방을 세관 검사대에 올려 놓았다면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③ 무면허로 물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일본국 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부산항에 반입되어 보세 창고에 장치되게 한 경우에는 관세포탈죄의 예비에 불과하다.
 - ④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13. 다음 중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뿐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② 업무자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단순 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 ③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무면허 의료 행위에 의사가 간호사와 함께 공모하여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면 의사도 무면허 의료 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 ④ 「형법」 제33조 소정의 신분이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 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한다.

14. 다음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작위에 의한 교사와 방조 모두 불가능하다.
 - ②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부진정 부작위범이다.
 - ③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 ④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로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부정된다.
15. 다음 중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에 포함될 수 있다.
 - ③ 상습적으로 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 처벌한다.
 - ④ 난소를 이미 제거하여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6. 다음 중 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 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 한다.
 - ③ 「형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는 필요적 감면사유이다.
 - ④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

17. 다음 중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으로서 저장매체를 매개로 존재하는 물건이므로 몰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전자기록을 몰수할 수 있다.
- ② 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닌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의 감경을 하는 방식 등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③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④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당해 법조가 정하고 있는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에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18. 다음 중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 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동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감속 등 조치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 ② 과실일수죄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으나 과실 교통방해죄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다.
- ③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 ④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9. 다음 <보기> 중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 甲이 乙에게 A의 자동차를 강취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이 A의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 ㉡ 실패한 교사는 교사자만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 ㉢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 ㉤ 甲이 乙에게 A의 주거에 침입할 것을 교사했는데 乙이 A의 승낙을 얻어 정당하게 주거에 들어간 경우 공범종속성설 중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甲은 주거침입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 「형법」은 ‘교사’를 실패한 교사와 효과없는 교사로 나누고 전자의 경우에만 처벌한다.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0. 다음 중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범죄 실행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한다.
- ② 접속범은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수개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불가분하게 접속하여 행하여지는 범행 형태로, 같은 기회에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면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 ③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를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 ④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21. 다음 중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② 강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③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 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경우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죄 외에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
- ④ 운행정지명령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와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위반죄는 자동차의 운행이라는 행위로 중첩되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2. 다음 중 협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甲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 ②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 ③ 甲은 乙女에게 “자동차에 타라. 타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乙女를 자동차 뒷자석에 강제로 밀어 넣고 20여 분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감금죄 외에 협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 ④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23. 다음 중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명령은 위법하다.
- ② 주형과 부가형이 있는 경우 주형을 선고유예하면서 부가형도 선고유예할 수 있으나, 주형을 선고유예하지 않으면서 부가형만을 선고유예할 수는 없다.
- ③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 중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자유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허용된다.
- ④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므로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24. 다음 중 횡령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부동산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② 판공비에 대해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 ③ 근로자가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되 운송회사는 근로자가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는데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④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甲이 맡긴 금을 시세에 따라 사고파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매달 일정한 이익금을 지급하는 한편, 甲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관 중인 금과 현금을 반환하기로 甲과 약정하였는데 그 후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25. 다음 중 체포와 감금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체포죄에서 체포의 수단과 방법은 불문하며,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체포죄의 기수가 된다.
- ②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③ 운전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하여 가자 집에 질린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감금죄 및 감금치상죄가 성립한다.
- ④ 강도계획 후에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뒤에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감금행위가 중단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26. 다음 중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살인죄에 있어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또는 인식이 불확정적이라면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지급을 약속한 행위만으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살인예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③ 직계존비속관계는 법률상의 관계를 의미하므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더라도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27. 다음 중 사기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양도증서 등 특허 관련 명의변경 서류를 위조하여 일본국 특허청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특허의 출원자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② 예고등기로 인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경매가격 하락 등을 목적으로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며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토지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당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출금·수령한 것에 불과하다면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실재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허위의 권원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28. 다음 중 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대표이사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장물범과 피해자 간에 동거하지 않는 4촌일 경우에는 친고죄이다.
- ③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은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 ④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 전에 체포되었다면 장물알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9. 다음 중 방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현존하지도 않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불태웠으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방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② 甲이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A를 살해할 의사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A가 사망한 경우 甲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 ③ 甲이 A를 살해할 의사로 A가 혼자 있는 건조물에 방화하였으나 A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현존 건조물방화치사미수죄를 구성한다.
- ④ 공용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후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른 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30. 다음 중 도박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 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 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하여졌음을 묻지 않는다.
- ③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내국인의 도박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폐광지역 카지노출입을 허용하는 국내법을 유추적용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가 성립한다.

31. 다음 중 직무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것이다.
- ② ‘직무를 유기한 때’란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 ③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④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32. 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에 한하고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하여야 하므로 공무원이 오랫동안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던 부동산을 개발이 예상되는 다른 토지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뇌물약속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 하여도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이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 ③ 뇌물을 공여한 사람과 뇌물을 수수한 사람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총칙상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 ④ 부대장이 수뢰한 금품의 용도를 개인의 용도에 사용하였건 부대의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였건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3. 다음 <보기> 중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 ㉡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 ㉢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4. 다음 중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변호사 乙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甲에 대하여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 ② 甲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후 나중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③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무고자의 행위는 자기무고의 교사·방조에 불과하므로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④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다.

35. 다음 <보기> 중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 경비원이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유인물의 배부행위는 설사 계속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
- ㉡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甲에게 양도하면서 미수외상대금채권의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외상채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외상대금을 수령한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6. 다음 중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강제집행면탈죄는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성립하므로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면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
- ② 이혼을 요구하는 처(妻)로부터 재산분할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④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자신이 수탁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신탁자에게 돌려준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에 해당한다.

37. 다음 중 선박매몰죄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파괴’란 다른 구성요건 행위인 전복·매몰·추락 등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만큼 교통기관으로의 기능·용법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한다.

②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더라도, 매몰의 결과 발생 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면 선박매몰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③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 위협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④ 도선사가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으로 인하여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결국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과 선박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8. 다음 중 통화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강제통용력을 가지지는 아니하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졌다고 오인할 수 있다면 「형법」 제207조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포함된다.

② 통화의 위조는 통화발행권이 없는 자가 외견상 진정한 통화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는 행위로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

③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일본국의 500엔짜리 주화처럼 사용하기 위해 한국은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무게를 약간 줄였다면 통화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9. 다음 중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로부터 필로폰 투약사범으로 지명수배된 자를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오히려 범인에게 1,300만원을 받고 휴대전화를 제공해 도피를 권유하여 범인을 도피케 한 경우,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③ 범죄의 혐의를 받고 수사의 대상이 되어있는 乙을 甲이 은닉했는데 후에 乙이 무혐의로 석방되었다면 甲에 대하여는 범인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중이던 甲이 친구에게 그런 사실을 설명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 친구에게 요청하여 속칭 ‘대포폰’을 개설하여 받고, 위 친구를 전화로 불러 그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내를 이동하여 다닌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0. 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선박건조자재운반용으로 도크에 고정되어 82 m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장치에 10평 가량 규모의 방실 등이 있고 평소 그 운전을 위해 1,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면, 건조물침입죄의 건조물에 해당한다.

③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④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해 사 법 규

1. 다음 중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기관에 출어등록을 하여야 하며, 출어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1년으로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특정해역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 및 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선단을 편성하여 출항하고 조업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장비의 고장, 인명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단 편성 조업에서 이탈할 수 있다.
- ④ 국방부장관 또는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일정한 해역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2. 다음 중 「어촌·어항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어항개발사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항정비사업 ② 어항시설사업
③ 어항환경개선사업 ④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

3. 다음 <보기> 중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 ㉠ 선박관리업 ㉡ 선박대여업
㉢ 항만용역업 ㉣ 컨테이너수리업

- ① ㉠, ㉡ ② ㉡, ㉣
③ ㉢, ㉣ ④ ㉡, ㉢, ㉣

4. 다음 <보기> 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낚시어선업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선체, 기관 및 설비 등에 대하여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 낚시어선업자는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3개월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은 「어선법」에 따른 어선 검사증서에 적힌 어선원 및 어선원 외의 사람 각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 ㉣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고 장소가 내수면인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해수면인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영업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① 3개 ② 2개 ③ 1개 ④ 없음

5. 다음 <보기> 는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 ㉠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가)를 받아야 한다.
- ㉡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나)를(을) 받아야 한다.
- ㉢ 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 등에게 (다) 그 효력이 발생한다.

- | | (가) | (나) | (다) |
|---|-----|-----|----------------|
| ① | 허가 | 승인 | 알린 때부터 |
| ② | 동의 | 승인 | 알린 때부터 3일 경과 후 |
| ③ | 허가 | 동의 | 알린 때부터 |
| ④ | 허가 | 동의 | 알린 때부터 3일 경과 후 |

6.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수상레저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10년 미만으로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기간을 등록 유효기간으로 한다.
 - ② 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해양경찰서장은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수상레저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④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7.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다음 <보기> 중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안전한 속력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해상교통량의 밀도
 - ㉡ 선박의 흘수와 수심과의 관계
 - ㉢ 선박교통관제의 지시
 - ㉣ 시계의 상태
 - ㉤ 목적지까지의 도달일수
 - ㉥ 선박이 운항한 거리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심판원은 해양사고가 해기사나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재결로써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다음 중 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면허의 취소, 면허의 정지, 견책
 - ② 면허의 취소, 업무정지, 견책
 - ③ 면허의 취소, 면허의 정지, 업무정지
 - ④ 면허의 정지, 업무정지, 견책

9. 다음 <보기> 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사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 보기 > —
- [사례] 컨테이너선이 인천 연안을 항해하던 중에 수중 암초에 좌초되어 선원과 선박의 안전이 위협에 처한 상태이고, 컨테이너 3개가 해수면으로 떨어져 떠 있다.
- ㉠ 컨테이너선은 (가)를 당한 상태이다.
 - ㉡ 해수면에 떠 있는 컨테이너 3개는 (나)에 해당한다.
 - ㉢ 컨테이너선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다)(이)라고 말한다.

- | | (가) | (나) | (다) |
|---|------|-----|-----|
| ① | 해양사고 | 표류물 | 구난 |
| ② | 조난사고 | 표류물 | 구난 |
| ③ | 해양사고 | 난파물 | 구조 |
| ④ | 조난사고 | 난파물 | 구조 |

10.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의 구조·설비·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음 <보기> 중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 ㉡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
 - ㉢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 ㉣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 ㉤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 협약
 - ㉥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협약
 - ㉦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1.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긴급피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긴급피난을 하려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구조본부의 장에게 긴급피난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긴급피난 허가를 받으려는 조난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구조본부의 장이 요청하는 선적항 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긴급피난의 허가신청을 받은 구조본부의 장은 12시간 이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허가를 하는 경우 구조본부의 장은 조난된 선박이 초래할 수 있는 인명이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조건을 붙여 허가를 할 수 있다.
12. 다음 중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유·도선사업자가 유·도선에 승선하는 선원 및 그 밖의 종사자(「선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월 실시하는 비상상황 대비훈련이 아닌 것은?
- ① 선내숙지 훈련
 - ② 퇴선 훈련
 - ③ 인명구조, 추락 및 충돌·좌초사고대응 훈련
 - ④ 기름유출대응, 소화훈련
13.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출입·이동하는 경우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대상 선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
 - ②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 외의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
 - ③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여객선
 - ④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컨테이너선

14.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의 선박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장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위험물운송선박 제외)의 기관실, 연료탱크,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내 위험구역에서 수리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윤활유 탱크, 페인트 창고, 축전지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내 위험구역에 해당한다.
 - ③ 선장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위험물운송선박 제외)을 위험구역 밖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관리청’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청으로 국가관리무역항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관리무역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다.
15. 다음은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형선박의 기준이다. 가장 옳은 것은?
- 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폐기물·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에 전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
 - ② 「선박안전법」상 선박길이가 12미터 이하인 선박
 - ③ 「선박직원법 시행령」상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
 - ④ 「선박법」상 총톤수 25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16. 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검사증서와 국제협약검사증서 중 여객선안전검사증서의 원칙적인 유효기간을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① 선박검사증서 : 5년, 여객선안전검사증서 : 1년
 - ② 선박검사증서 : 5년, 여객선안전검사증서 : 5년
 - ③ 선박검사증서 : 5년, 여객선안전검사증서 : 10년
 - ④ 선박검사증서 : 10년, 여객선안전검사증서 : 5년

17. 다음 중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건조·개조등의 허가가 면제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 ②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면허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려는 경우
- ③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려는 경우
- ④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기 위하여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려는 경우

18. 다음 <보기> 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 보기 > ————
안전검사의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 사업에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 마다, 그 밖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 | |
|-------|----|
| ㉠ | ㉡ |
| ① 6개월 | 1년 |
| ② 6개월 | 5년 |
| ③ 1년 | 5년 |
| ④ 1년 | 7년 |

19.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
- 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③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④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20. 다음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 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어업의 종류, 어선의 규모, 승선인원, 부속선의 선박수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해저와 하층토의 광물, 그 밖의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의 개발을 위한 주권적 권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이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증을 허가받은 선박의 조타실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부속선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부속선의 조타실에 허가증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21. 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 포함)」상 외국 선박의 통항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외국의 군함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 통항 3일 전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당해 선박의 선명·종류 및 번호, 무장의 종류, 통항목적, 통항항로 및 일정을 외교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보건·위생에 관한 법규에 위반되는 물품이나 통화의 양하·적하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보나, 관계 당국의 허가·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외국의 군함이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의 시정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22.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구조된 사람·선박등·물건의 인계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에 대하여는 그 신원을 확인하고 보호자 또는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유족에게 인계할 수 있으며, 구조된 선박등이나 물건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②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인계받을 보호자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 및 구조된 선박등이나 물건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된 사람, 사망자, 구조된 선박등 및 물건을 관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인계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건의 소유자 또는 선장등에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고 물건을 인수하게 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매한다는 뜻을 미리 알려야 한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류물 등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습득자에게 지체없이 보상금액, 수령기한(통지를 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을 통지하여야 한다.

23. 다음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 (가)(이)란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 ㉡ 예인선은 한꺼번에 최대 (나)척의 피예인선을 끌 수 있다.
- ㉢ 총톤수 (다)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 구역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나)	(다)
①	정류	2	20
②	정박	2	20
③	정류	3	20
④	정박	3	100

24. 다음 <보기> 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이 법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신청자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소유자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5. 다음 중 「해사안전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법은 해사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해사 사이버안전’이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선박 운항시스템을 보호함으로써 선박운항시스템과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등 안정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증진을 위한 국가 해사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④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6. 다음 <보기>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양사고(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보기 >
- ㉠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육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 선박이 멸실·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 선박이 충돌·좌초·전복·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 ① ㉠, ㉢

② ㉠, ㉣

③ ㉡, ㉢, ㉣

④ ㉠, ㉡, ㉢, ㉣

27. 다음 <보기> 중 「수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시장·군수·구청장이 면허어업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 보기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 어업권자가 「수산업법」 제32조(임대차의 금지)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 ① ㉠

② ㉠, ㉣

③ ㉠, ㉡, ㉣

④ ㉡, ㉢, ㉣

28. 다음 중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장 및 수사부서의 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을 수사부서의 장으로 해양경찰청 외부에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0년 이상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치안감 이상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④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내부를 대상으로 임명하는 경우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9.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오염물질기록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박의 선장은 그 선박에서 사용하거나 운반·처리하는 폐기물·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에 대한 기록부, 즉 선박오염물질기록부를 그 선박 안에 비치하고 그 사용량·운반량 및 처리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선박오염물질기록부 중 기름기록부의 경우 모든 선박은 그 사용량·운반량·처리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피예인선의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가 그 선박에서 사용하거나 운반·처리하는 폐기물·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에 대한 기록부, 즉 선박오염물질기록부를 선박의 소유자의 사무실 안에 비치하고 그 사용량·운반량 및 처리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30. 다음 중 「항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무역항은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구분한다.

③ 항만은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한다.

④ 항만의 관제·정보통신·홍보·보안에 관련된 시설은 기능시설에 해당한다.

31. 다음 <보기> 중 「도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도선사의 결격사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보기 >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선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두 번 이상 업무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① ㉠, ㉡

② ㉠, ㉣

③ ㉠, ㉡, ㉣

④ ㉡, ㉢, ㉣

32. 다음 중 「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 운항관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운항관리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여객선등의 운항 횟수를 늘리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 ③ 여객선등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④ 운항관리자의 직무범위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3. 다음 <보기>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 해양경찰관은 임해 중요시설 경계 바깥쪽으로부터 1해리 이내 경비수역에서 선박등이 무리를 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행 또는 점거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하는 선박등의 선장에 대하여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 해양경찰관은 대량파괴무기나 그 밖의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의 선장에 대하여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경고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 해양경찰관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선박의 화재로 선박이 침몰 위험에 처하여 중대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또는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그 선박등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피난 명령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는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4. 다음 중 「수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입어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수산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③ ‘어업자’란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 ④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35. 다음 중 「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원의 복무·근로 및 임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선장은 당해선박의 해원 4분의 1 이상이 교체된 때에는 출항 후 12시간 이내에 선내 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19세 미만인 소년선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못 한다.
- ③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의 사망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통상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36.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관제대상선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천항과 중국 단둥항 사이를 운항하는 화물선(총톤수 300톤)
- ② 대산항과 인천항 사이를 운항하는 석유제품 운반선(총톤수 500톤)
- ③ 대산항과 인천항 사이를 운항하는 위험화물 운반선(총톤수 300톤)
- ④ 대산항과 인천항 사이를 운항하는 내항어선(총톤수 500톤)

37. 다음 <보기> 중 「선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순톤수’란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 ㉡ 흘수의 치수는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 측면에 선저로부터 최대흘수선 이상에 이르기까지 20센티미터마다 10센티미터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 ㉢ 재화중량톤수란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선박의 여객 및 화물 등의 최대적 재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 ㉣ 한국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8. 다음은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할 숫자의 총 합계는 얼마인가?

-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원부에 등록한 총톤수 ()톤 이상인 어선에 대하여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일 이내에 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 만재흘수선을 표시해야 하는 어선의 길이는 ()미터이다(임시항행검사를 받고 그 표시를 생략한 어선 등은 제외).

- ① 39 ② 51 ③ 58 ④ 74

39.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연안체험활동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연안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연안해역에 해상교통량이 많은 경우로서 연안 체험활동 참가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안체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안순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연안순찰대원은 100톤 이상의 함정으로서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 ㉣ 수중형 체험활동의 안전장비 중 구명줄은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을 1개 이상 갖추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5명 당 구명줄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40. 다음 <보기> 중 「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기사 면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위반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기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 해양경찰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영해 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정한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거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 ㉣ 이 법에서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여 선박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선박차용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한다.

-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2025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 경 사 (2교시) >

- 실무A형[관리운영](13)
- 실무B형[경비안전](14)
- 실무C형[정보수사](15)
- 항공법규(05)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응시자 유의사항

- 본인의 응시계급, 교시, 과목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신속히 페이지를 넘겨 인쇄 상태 등 파본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문제지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교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교체를 요구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성 명 :

응 시 번 호 :

해 양 경 찰 청

실무 A형 (관리운영)

1. 다음 중 「국유재산법(시행령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운용총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 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매회 100분의 2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2. 다음 중 관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서 규정한다.
 - ② 파출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지방해양경찰청과 소속 해양경찰서 사무분장 규칙」에서 규정한다.
 - ③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의 명칭 및 위치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한다.
 - ④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지방해양경찰청과 소속 해양경찰서 사무분장 규칙」에서 규정한다.
3. 다음 중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 상 기안문에 예외적으로 발의자와 보고자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토나 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
 - ② 각종 증명발급, 회의록 그 밖의 단순사실을 기록한 문서
 - ③ 이전에 검토가 되었거나 반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문서
 - ④ 일상적·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서

4. 다음 중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징계위원회의 심문과 진술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진술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심의대상자는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④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5. 다음 <보기> 중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상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에서 해야 할 문서의 전자적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분류	㉡ 편철	㉢ 공고
㉣ 배부	㉤ 활용	㉥ 등록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6. 다음 <보기> 중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경고 및 시정조치		
㉡ 과태료 부과		
㉢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7. 다음 <보기> 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 ㉡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4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 ㉢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 ㉣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10일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8. 다음 중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상 디지털 선택 호출장치 및 전용수신기의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신을 수신하는 경우에 수신된 내용을 2줄 이상으로 최소 160자 이상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 ② 수신한 메시지는 정보를 읽기 전까지 저장되고, 수신 후 최소 48시간까지 저장할 수 있을 것
- ③ 조난통신에 대한 응답을 자동으로 할 수 있을 것
- ④ 조난의 경우에는 조난경보를 자동으로 5회 반복하여 송신할 것. 이 경우 경보의 간격은 3.5분에서 4.5분 이내일 것

9. 다음 중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인 ‘부의’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는 경우
- ② 소관 상임위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가 끝난 경우
- ③ 심사기간이 지정되고 위원회가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 ④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

10. 다음 중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본문의 마지막에 작성하는 ‘끝’자 표시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본문의 내용(본문에 붙임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을 말한다)의 마지막 글자에서 두 글자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 ② 본문의 내용이나 붙임에 적은 사항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경우에는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두 글자를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 ③ 본문의 내용이 표 형식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표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면 표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두 글자를 띄운 후 ‘끝’ 표시를 한다.
- ④ 표의 중간까지만 작성된 경우에는 ‘끝’ 표시를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작성된 칸의 다음 칸에 ‘이하 빈칸’으로 표시한다.

11. 다음 중 「국유재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 승인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자
- ② 사용목적
- ③ 사용료
- ④ 건축물 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12. 다음 <보기>는 언론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보 기 >
- (㉠) : 공식적인 브리핑이 끝난 이후에 비공식적으로 이어지는 브리핑
 - (㉡) : 근거없는 각종 루머들이 IT기사나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사회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현상으로 정보와 전염병의 합성어
 - (㉢) : 초상사용권 또는 인격표지권과 같이 사람이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 ① ㉠ 엠바고 ㉡ 메서네퍼드 ㉢ 퍼블리시티권
- ② ㉠ 백 브리핑 ㉡ 인포데믹 ㉢ 퍼블리시티권
- ③ ㉠ 엠바고 ㉡ 인포에퍼드 ㉢ 리퍼블릭권
- ④ ㉠ 백 브리핑 ㉡ 인포데믹 ㉢ 리퍼블릭권

13. 다음 중 「국회법」상 국회의안 상정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부개정법률안 : 15일
 - ② 제정법률안 : 20일
 - ③ 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 회부된 법률안 : 5일
 - ④ 법률안 이외의 의안 : 15일

14. 다음 중 「국고금 관리법(시행령 포함)」에 따라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조금·부담금 및 교부금
 - ② 감염병 예방 및 검역비
 - ③ 국제연합기구에 지급하는 경비
 - ④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15. 다음 <보기> 중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상 관서운영경비출납 회계관서의 검사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함정 : 근무시간 중에는 담당 부서장(부장, 기관장, 통신장 등)
 - ㉡ 파출소 : 근무자 중 선임공무원
 - ㉢ 사무실 : 사업부서 담당계장급
 - ㉣ 사무실 : 계장급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일 경우에는 계원 중 선임공무원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다음 <보기> 중 「국가공무원법」상 ‘직권휴직’ 사유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 ㉢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등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 ㉣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7. 다음 <보기> 중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상 ‘무기·탄약류 관리책임자’로 잘못 짝지어진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보 기 >
- ㉠ 해양경찰교육원 : 운영지원과장
 - ㉡ 지방해양경찰청 : 기획운영과장
 - ㉢ 해양경찰청 : 장비관리과장
 - ㉣ 해양경찰정비창 : 장비관리과장
 - ㉤ 파출소·출장소 : 파출소장

- ① ㉠, ㉢, ㉤ ② ㉡, ㉢, ㉣
③ ㉡, ㉣ ④ ㉢, ㉣

18. 다음 중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상 안전교육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권총은 경감이하 소속 경찰관 분기 1회, 외근 요원 반기 1회 교육 실시
- ② 소총은 경감이하 소속 경찰관 부서 발령시 1회, 운용요원은 반기 1회 교육 실시
- ③ 기관총 및 함포는 운용요원 및 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서 발령시 1회, 운용요원은 분기 1회 교육 실시
- ④ 기관총 및 함포는 운용요원 및 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서 발령시 1회, 운용요원은 반기 2회 교육 실시

19. 다음 중 재물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기재물조사는 매년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시행한다.
- ② 재물품 조사방법은 개창식과 폐창식이 있으며, 폐창식 방법이 원칙이나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창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수시재물조사는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된 때 시행한다.
- ④ 특별재물조사는 특정품에 대한 불시 확인이 필요할 때 시행한다.

20. 다음 <보기>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상 제4조의2(직제 시행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 과의 설치와 그 분장업무
㉡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 행정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
㉥ 직위에 부여되는 계급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1. 다음 <보기> 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연가와 관련된 괄호 안의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 ㉠ 1년 이상 2년 미만 : () 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 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 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 ㉔ 1년 이상 2년 미만 : () 일
- ㉕ 3년 이상 4년 미만 : () 일

- ① 56 ② 58 ③ 60 ④ 62

22. 다음 중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공문서 작성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그 항목을 순서(항목 구분이 숫자인 경우에는 오름차순, 한글인 경우에는 가나다순을 말한다)대로 표시한다.
- ② 상위 항목부터 하위 항목까지 1., 가., 1), 가), (1), (가), ①, ㉠의 형태로 표시한다.
- ③ 필요한 경우에는 □,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 ④ 문서의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한글로 먼저 적고, 다음에 괄호를 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적어야 한다.

23. 다음 중 「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 ① 해양경찰청 : 정보통신과장
- ② 지방해양경찰청 : 기획운영과장
- ③ 해양경찰서 : 정보통신업무 담당부서의 장
- ④ 서해5도특별경비단 : 정보통신업무 담당부서의 장

24. 다음 <보기> 중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의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 ㉢ 형사 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 ㉣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위해 출석통보를 받은 자

- ①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ㄷ, ㄹ

25. 다음 중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상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1년간의 적극행정 관련 업무실적을 심의하여 연 1회 선발한다.
- ②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이 대상이다.
- ③ 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을 부여할 수 있다.
- ④ 우수공무원에게 특별승급과 포상휴가를 동시에 부여할 수 있다.

26. 다음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 ④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27. 다음 <보기> 중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상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보 기 >
- ㉠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하여야 한다.
 - ㉡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 업무 일부의 경우에는 위임할 수 있다.
 - ㉢ 규정상 대리할 수 있는 직위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

28. 다음 중 정보 보안을 위협하는 여러 기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스니핑(Sniffing) : 검증된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보낸 것처럼 데이터를 변조하여 접속을 시도한다.
- ② 피싱(Phishing) : 적절한 사용자 동의 없이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생활을 침해한다.
- ③ 스푸핑(Spoofing) : 실제로는 악성 코드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악성 코드인 것처럼 가장한다.
- ④ 키로거(Key Logger) : 키 입력 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빼낸다.

29. 다음 <보기> 중 「물품관리법(시행령 포함)」 상 ‘준용물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등기우편물
 - ㉡ 정기간행물
 - ㉢ 법령에 따라 수사 등을 하기 위해 증거물로서 보관된 동산
 - ㉣ 도서, 박물관 보존물품, 과학관 전시물품
 - ㉤ 수표(비 유가증권)
 - ㉥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취득한 물품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30. 다음 중 「공무원보수규정」 상 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유학으로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 ③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한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 ④ 공무상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31. 다음 <보기> 중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상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보 기 >
- ㉠ 주거용 일반재산은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주거용 일반재산이 대부수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무원 외에도 사용할 수 있다.
 - ㉢ 대부기간은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 직원숙소를 인계인수 시 직원숙소 관리담당자 참여가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계인수서 제출을 통해 인계인수를 갈음할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32. 다음 중 해양경찰 조직연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2005년 7월 22일 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이 치안정감에서 치안총감으로 격상되었다.
- ② 2006년 11월 9일 지역 지방해양경찰본부를 동·서·남·제주 4개 지방해양경찰청 체제로 재편하였다.
- ③ 2014년 11월 19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이 신설되기 전까지 인천해양경찰서는 본청 직할서로 관리되었다.
- ④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양경찰 조직은 국민안전처에서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하게 되었다.

33. 다음 중 「국가재정법(시행령 포함)」상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 ②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③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 ④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경비

34. 다음 <보기> 중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상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 ㉠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소장 접수의 사실을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상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상소제기 여부를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 ㉣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35. 다음 <보기> 중 「해양경찰 예절 규칙」상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 제복을 입고 모자를 벗고 있는 경우에는 모자를 착용 후 거수경례하여야 한다.
- ㉡ 사복을 입고 있는 경우에는 모자를 쓰고 목례하여도 무방하다.
- ㉢ 2명 이상의 상급자가 동시에 있는 경우 경례를 생략할 수 있다.
- ㉣ 동급자 간에는 경례를 생략할 수 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36. 다음은 우리나라 현행 법률 개정 절차에 대한 사례이다. <보기> 밑줄 친 ㉠~㉣ 중 「헌법」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국회의원 총 수는 300인으로 한다.)

< 보 기 >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 개정안을 ㉠ 국회의원 16명이 발의하였다. 이에 국회의장은 제안된 법률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후 상임위 심사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및 형식과 자구를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여, 법률 개정안은 ㉡ 국회의원 148인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그 이후 대통령에게 이송되었으나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 ‘환부거부’ 의사를 표하며 ㉢ 재의를 요구하였다. 이에 국회의장은 개정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였고, ㉣ 260인의 국회의원이 출석하고, 178인의 찬성으로 법률로서 확정되었다.

- ① ㉠
- ② ㉡
- ③ ㉢
- ④ ㉣

37. 다음 중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관리규칙」상 업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업무협약 관리기관장은 개선을 권고한 후에도 6개월 동안 업무협약에 따른 교류가 없거나 저조한 경우 체결부서의 장에게 협약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 ② 업무협약서에는 유효기간을 명시한다.
- ③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업무협약의 경우 체결부서의 장은 상대기관에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의사표시가 가능한 기간의 만료 20일 전까지 사전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 ④ 기관 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경우에는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배제한다.

38. 다음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 배상금
- ④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39. 경찰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음 <보기>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상 전보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전보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 보 기 >
- ㉠ 전문직위로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보직하는 경우

㉣ 징계의결 중인 경우

- ① ㉠, ㉡

② ㉡, ㉣

③ ㉠, ㉣

④ ㉠, ㉢

40. 다음 <보기> 중 「정비편람」상 정기수리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보 기 >
- ㉠ 입창 6개월 전에는 수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각 장비별 성능상태를 수시 관찰하여 수리에 대비한다.

㉡ 입창 3개월 전에는 수리해야 할 항목 명세서를 준비하여 1차적으로 수리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비창장에게 제출한다.

㉢ 입창 1개월 전에는 함정 자체수리계획, 훈련 계획, 휴가계획을 수립한다.

㉣ 입창 2주 전에는 부서장에 한해 정기수리 목적 및 수리사항을 주지시키고, 수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실무 B형 (경비안전)

1. 다음 중 「해양경비법」 상 영해와 내수는 어느 수역에 포함되는가?
- ① 원해수역 ② 광역수역
③ 근해수역 ④ 연안수역
2.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해상항행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한다.
②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경우 [경고→이동·해산·피난실행→이동·해산·피난명령] 의 순서에 따라 조치한다.
③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이동·해산·피난명령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다음 중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칙」 상 종합상황실 시스템 및 통신망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황실은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 상황보고서를 접수하고 전파할 수 있는 통신망 및 시스템을 기관의 규모, 상황 및 지역적 실정에 맞게 구성해야 한다.
②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통신망과 시스템에 대하여 각 팀별 운용자를 지정하여 매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해야 한다.
③ 상황실에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려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상황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운용자는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해당 통신망·시스템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다음은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수상레저활동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운항규칙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 보기 >

다이빙대·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위험구역에서는 ()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해야 하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운항지침을 따라야 한다.

① 10미터, 10노트 ② 10미터, 20노트
③ 20미터, 10노트 ④ 20미터, 20노트
5. 다음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상 도선사업의 정의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 보기 >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① 내수면, 해수면
② 해수면, 바다목
③ 내수면, 바다목
④ 바다의 수류, 수면
6.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아닌 것은?
- ① 국방부
② 해양경찰청
③ 교육부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다음 중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상 안전관리 실태 점검의 종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점검 ② 일상점검
③ 수시점검 ④ 정기점검

8.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상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업무에 가장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수색구조·구난기술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와 개발
- ② 해상수난구조업무에 필요한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③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 ④ 수색구조·구난업무 지원

9. 다음 중 파출소 음주측정기 1-2-3차 관리책임자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담당자-파출소장-해양안전과장
- ② 담당자-파출소장-해상교통계장
- ③ 순찰구조팀장-파출소장-해양안전과장
- ④ 수사전담경찰관-순찰구조팀장-파출소장

10. 다음 보기 중 「해양경비법」 상 해양경비활동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 ㉡ 해양오염 방제 및 해양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조치
 - ㉢ 해상경호, 대(對)테러 및 대간첩작전 수행
 - ㉣ 해양시설의 보호에 관한 조치
 - ㉤ 해양에서 조난된 사람에 대한 구조 활동
 - ㉥ 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조치
 - ㉦ 그 밖에 경비수역에서 해양경비를 위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11. 다음 중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칙」 상 상황총괄팀(구 상황기획팀)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황실 관련 법규 및 매뉴얼 제정·개정
- ② 상황근무자의 교육·훈련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
- ③ 국외 해양상황 등의 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 ④ 상황관리시스템 개발·구축·유지보수 등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2. 다음은 「수상레저안전법」 상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바른 말은?

— < 보기 >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에게 관계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일정 구역의 수상레저활동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해양경찰서장
- ② 지방해양경찰청장
- ③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 ④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13. 다음 중 「유선 및 도선 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선 또는 도선 : 합성수지선 20년 이하
- ②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선 또는 도선 : 강선 20년 이하
- ③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선 또는 도선 : 목선 15년 이하
- ④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유선 또는 도선 : 20년 이하

14. 다음 중 「수색구조수당 지급 규칙」 상 수색구조 참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수색구조수당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색구조수당 지급내용에 따라 수색구조수당을 지급한다.
- ②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수색구조수당 신청내용을 받아 예산을 배정한다.
- ③ 해양경찰서장은 수색·구조 등 완료 후 수색구조수당 신청 시 지출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색구조수당 지급내용을 파악하여 매 분기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

15. 다음은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칙」상 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 보기 > —
상황근무자는 ()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출근 또는 지정된 시간이 되면 상황실에서 업무를 정확하게 인계·인수하며 () 간 합동근무를 해야 한다.

- ① 3교대, 30분
- ② 3교대, 20분
- ③ 4교대, 30분
- ④ 4교대, 20분

16.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위반 100만원
- ②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100만원
- ③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위반 100만원
- ④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100만원

17. 다음 보기 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상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존재 여부가 6개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출하는 경우
 - ㉣ 수상레저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유·도선사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선박의 일부를 운항 중단하려면 관할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유·도선 사업의 휴업기간에 대하여 가장 옳은 것은?

- ① 도선은 계속하여 6개월, 유선은 계속하여 1년을 넘을 수 없다.
- ② 유선은 계속하여 6개월, 도선은 계속하여 1년을 넘을 수 없다.
- ③ 도선은 계속하여 3개월, 유선은 계속하여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 ④ 유·도선 모두 계속하여 1년을 넘을 수 없다.

19.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상 위반 행위 중 과태료 부과기준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 ①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 ②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대상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③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④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 다음은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칙」상 상황지원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중요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련부서의 전문적 의견 및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지원팀을 소집할 수 있다.
- ② 야간 및 휴일에는 상황관리팀·계장 또는 해양경찰서 상황실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③ 상황지원팀이 소집된 경우에는 1시간내 응소해야 하며, 응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업무대행자가 응소하도록 해야 한다.
- ④ 상황지원팀은 상황실 지원임무를 수행하며, 상황담당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는다.

21. 다음 중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상 유선 승객의 금지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② 유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
- ③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 ④ 인명구조용 장비나 그 밖의 유선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

22. 다음 중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상 선박패스 시스템으로 수집된 어선운항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선의 안전운항 관리
- ② 수산자원의 조사
- ③ 기상 등 안전정보 제공
- ④ 양식장 관리에 관한 사항

23.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개인화기 외 공용 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 명령을 받고도 계속 항거하는 경우
- ② 선박 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하려는 경우
- ③ 선박 등이 3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협을 끼치는 경우
- ④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24.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상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 ② 연안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안사고 예방방안에 관한 사항
- ③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④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경비 및 구난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5. 다음 중 해양 선박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상 위기경보 수준의 판단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심(BLUE): 위기징후 감시를 통해 통계적 시기 도래, 기상요인 등에 의한 징후 관련 현상은 없으나, 재난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을 때
- ② 주의(YELLOW): 선박의 충돌, 화재, 폭발, 좌초, 전복, 침몰, 적재화물의 유실·유출, 기타 선체 손상 등 해양 선박사고로 인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향이 나타날 때
- ③ 경계(ORANGE): 선박의 충돌, 화재, 폭발, 좌초, 전복, 침몰, 적재화물의 유실·유출, 기타 선체 손상 등 해양 선박사고로 인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 ④ 심각(RED): 선박의 충돌, 화재, 폭발, 좌초, 전복, 침몰, 적재화물의 유실·유출, 기타 선체 손상 등 해양 선박사고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26. 다음 보기 중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경찰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경찰장구	㉡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 항공기	㉣ 살수차
㉤ 해안 감시기구	㉥ 선박
㉦ 통신기기	㉧ 감식기구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7. 다음 중 「한·중 어업협정」 상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임무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타방 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에게 허용하는 어획가능어종·어획할당량 기타 구체적 조업 조건에 관한 사항
- ② 조업질서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③ 어획자원탐색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④ 제3국과 어업협력에 관한 사항

28. 다음 중 「해양경찰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상 가장 옳은 것은?

- ① 경비세력의 운용인력 및 파출소, 출장소, 특공대, 구조대 인력 등 현장 집행이 필요한 인원은 필수 요원으로 지정 할 수 있다.
- ② 필수요원에 대해서는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행 근무인력으로 상황대비 또는 조치가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여 소집을 명할 수 있다.
- ③ 새로 임용되거나 소속 및 부서를 이동한 공무원(전·출입)은 부임 또는 이동한 다음날에, 비상연락 전화번호 및 주소가 변경된 공무원의 경우 변경된 날에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주무계로 제출하고 주무계는 취합하여 비상업무 주무부서에 제출한다.
- ④ 당직업무 주무부서는 전체 비상연락망을 취합하여 종합상황실에 비치하고 비상업무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각 과, 함정, 파출소·출장소, 항공대, 특공대, 구조대 등은 자체 비상연락망을 적절한 장소를 지정하여 비치한다.

29. 다음 중 「테러방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테러’에 해당하는 행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 ②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에 실려 있는 화물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③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 ④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하거나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일으키는 행위

30. 다음 보기 중 「계선부표 관리규칙」 상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 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를 설치하거나 정기 교체(사고복구를 포함한다)를 할 경우에는 소속 함정을 이용하며, 평상시 점검용으로는 해양수산부 소속 부표 정비선을 이용한다.
-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국유 재산으로 관리전환 받은 계선부표(예비용 계선부표를 제외한다)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한다.
- ㉢ ‘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는 계선부표의 국유 재산 등재·멸실·폐기 등 재산권 변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 ‘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는 계선부표의 설치·위치조정·현황변경, 계선부표 유실 시 수색·관계기관 통보 등 설치·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 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의 지속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여수·부산·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의 지원을 받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계선부표(표체, 사슬, 침추 등 일체)교체 작업을 실시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1. 다음 보기 중 「테러방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전담조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 항만 테러대책협의회 ㉡ 대테러수사지원본부
- ㉢ 해양테러대응반 ㉣ 테러사건대책본부
- ㉤ 현장지휘본부 ㉥ 테러정보통합센터
- ㉦ 공항 테러대책협의회 ㉧ 대테러센터
- ㉨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2. 다음 보기 중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상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 관할권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된 모든 분쟁과 신청 및 재판소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다른 모든 협정에 특별히 규정된 모든 사항 외에 미친다.
- ㉡ 재판관은 동일 국적자가 2인 이상 될 수 없으며 비밀투표에 의해 당사국의 2분의1 이상 찬성으로 선출된다.
- ㉢ 관할권은 모든 당사국에 개방되며 제11부(심해저)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건의 경우이거나, 당사국 3분의2 이상이 수락한 관할권을 재판소에 부여하는 다른 협정에 따라서 회부된 사건의 경우 당사국 이외의 주체에게도 개방된다.
-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소재지는 독일 함부르크이며 재판관의 임기는 9년, 정원은 21인이다.
- ㉤ 의사정족수는 11인, 의결정족수는 출석 과반수이며 재판장의 결정투표권이 인정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3. 다음 중 「해양경찰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상 경비 비상 중 ‘갑호’발령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 ② 적의 국지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긴장이 고조된 경우
- ③ 대규모 집단사태·테러 등의 발생으로 사회가 극도로 혼란하게 되었거나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
- ④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 해상경비수요가 증가하여 가용 경력을 100%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34. 다음 중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상 용어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따른 비행장치를 말한다.
- ② ‘관리부서’란 무인비행장치가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무인비행장치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생성·관리·활용·공유하는 부서를 말한다.
- ③ ‘운용부서’란 무인장치를 직접 관리·운용하면서 운용에 대한 정책, 제도 및 행정지원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④ ‘조종자’란 지상통제장비(원격조종장치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과 이를 보조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5. 다음 보기 중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상 사건·사고 처리 및 수사에 대한 처리요령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 범죄현장의 보존, 증거의 수집, 피해현황과 범죄 실황조사 등 범죄 현장을 중심으로 필요한 초동조치와 수사를 한다.
- ㉡ 해양경찰서 수사관이 현장에 도착하면 상황을 인계하고 사건 조사에 협조한다.
- ㉢ 사건·사고 신고 및 인지 시 파출소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동시에 현장으로 출동하여 인명과 재산피해의 확대 방지와 필요한 초동조치를 한다.
- ㉣ 경미한 사건·사고는 순찰구조팀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사 또는 처리 사항을 파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변사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사체의 발견 일시, 장소, 신고자 인적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6. 다음 보기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 14세 미만인 사람(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술에 취한 사람,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거나 이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행위
- ㉡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태우는 행위
- ㉢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신고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는 행위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을 이용자가 타고 있는 수상레저기구로 반입·운송하는 행위
- ㉤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
- ㉥ 비상구조선을 그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7. 다음 중 ‘EPIRB(Emergency Position Indication Radio Beac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설치된 선박의 조난신호에는 선명, MMSI 번호, 일시, 조난의 종류, 위치(경위도) 등을 수신할 수 있다
- ② 모든 선박의 조난신호 중 조난의 종류는 충돌·화재 등 10종의 조난 유형 지정이 가능하나 미지정 시 Undefined로 수신된다.
- ③ 침몰·전복 시 수면 하 4 m에서 자동 탈착되며, 레이더 신호를 통해 연안국 RCC로 조난신호가 자동 발신된다
- ④ COSPAS-SARSAT EPIRB는 406 MHz 주파수의 조난신호를 발신한다.

38. 다음 중 「구조본부 비상가동 운영기준」 상 대응 3단계 비상가동 운영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태풍, 지진해일 관련 주의보가 발령되어 자연 재난 발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 ② 수습, 복구활동이 요구되는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 ③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④ 대규모 유·도선 사고

39. 다음 중 ‘잠수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폐쇄식 잠수는 100% 산소를 호흡하며, 사용된 산소는 정화제를 통해 질소를 제거한 후 장비 내에서 재순환하므로 개방식과 달리 수중에 기포가 발생하지 않아 수중침투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 ② 스쿠버(SCUBA)잠수는 구조대원이 직접 호흡용 장비를 휴대하고 실시하는 잠수로서 보통 개방식 공기 스쿠버 잠수를 의미한다.
- ③ 표면공급식 잠수(SSDS)는 함정이나 바지(BARGE)에 탑재된 호흡기체 공급장치를 통해 표면에서 구조대원에게 호흡기체를 공급하는 잠수 방식이다.
- ④ 반폐쇄식 잠수는 개방식 잠수방식과 폐쇄식 잠수방식을 결합한 잠수방식으로 산소·질소 또는 산소·헬륨 혼합기체를 호흡기체로 사용하며, 이산화탄소 정화통을 통해서 기체를 재순환시켜 이산화탄소를 걸러내고, 다량의 혼합기체에 소량의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체의 흐름은 신체의 산소 요구량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정량으로 재순환하는 혼합기체 중 초과 공급된 혼합기체를 장비 밖으로 배출하면서 조절되는 방식으로 소량의 기포가 발생한다.

40. 다음 중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 상 안전관리 시설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지정된 연안해역 위험구역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시설물’ 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서장은 위험구역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시설물 설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해양경찰서장은 국민들이 위험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전에 대비하도록 안전관리시설물의 표준화 및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④ 해양경찰서장은 안전관리시설물이 훼손·망실 또는 사용 불가능함을 발견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실무 C형 [정보수사]

1. 다음 중 「출입국관리법」상 규정된 상륙허가 기간이 잘못 연결된 것은?(단, 기간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① 관광상륙 - 30일 이내

② 승무원상륙 - 15일 이내

③ 재난상륙 - 30일 이내

④ 난민임시상륙 - 90일 이내
2. 우리나라 영해를 통과하던 프랑스 국적 선박 내에서 범죄가 발생하였다. 다음 중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우리나라의 형사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경우는?
- ① 외국 선원 간 폭행사건이 발생한 경우

② 범죄의 결과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경우

③ 마약의 불법거래를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범죄가 우리나라의 평화와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종류인 경우
3. 다음 중 「출입국관리법」상 범죄를 범한 내국인에 대한 출국금지조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 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③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는 1개월 이내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④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4. 중국 국적의 甲은 밀입국 알선조직에 한화 500만원을 주고 중국 어선에 승선하여 공해상에서 우리 어선에 환승, 평택항으로 밀입국하였다. 다음 중 甲의 밀입국 기수 시기는?
- ① 중국어선이 공해상에 진입하였을 경우

②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EEZ에 진입하였을 경우

③ 공해상에서 우리어선에 환승하였을 경우

④ 우리어선에 환승하여 대한민국 영해에 진입하였을 경우
5. 해양경찰 경비함정은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음 <보기> 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조업수역·기간·어구·어업위반 선박

㉡ 무허가 조업 선박

㉢ 망목규제 위반 등 어구·어획물의 압수가 필요한 선박

㉣ 어획물운반선 불법어획물 전적

㉤ 조업일지 허위기재 선박

㉥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나포된 선박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6. 다음 중 정보사범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반국가적 범죄이다.

②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에서 정보사범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③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침해하는 결과 발생을 필요로 한다.

④ 정보사범은 스스로를 애국자, 혁명가, 선구자라고 믿는 경우가 많다.
7. 다음 보기 중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피의자 신문 ㉡ 감정유치

㉢ 압수·수색·검증 ㉣ 참고인 조사

㉤ 실황조사 ㉥ 출석요구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8. 2004년 아시아 지역 해상에서의 해적·해상테러 등 국제성 범죄의 공동대응 및 국제공조 증진방안 논의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회의는?

- ① 세계해양치안기관회의(CGGS)
- ② 북태평양해양치안기관회의(NPCGF)
- ③ 아세안지역포럼(ARF)
- ④ 아시아해양치안기관장회의(HACGAM)

9. 다음 중 범죄수사의 제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란 수사관의 상식적인 검토나 경험적인 판단에 그치지 말고 과학적 지식 또는 시설을 유용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② ‘신속착수의 원칙’이란 범죄수사는 죄증이 인멸 되기 전에 신속히 착수하여 수사를 수행하고 종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③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란 수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에 대해서도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④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이란 수사의 제1법칙은 기초수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대소의 자료를 완전히 수집한다는 것이다.

10. 다음 <보기>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불심검문 시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 보기 >
- ㉠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 ㉡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 ㉢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될 때
 - ㉣ 수상한 거동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1. 다음 중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가능하다.
- ②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체포자의 소속, 관직, 성명, 체포의 이유,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며, 현행범인을 인수받은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한다.
- ④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12. 다음 중 사람이 죽은 후 시체에 나타나는 변화과정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혈액침하 → 시체냉각 → 자가용해 → 시체굳음 → 부패
- ② 혈액침하 → 시체냉각 → 시체굳음 → 자가용해 → 부패
- ③ 시체냉각 → 혈액침하 → 자가용해 → 시체굳음 → 부패
- ④ 시체냉각 → 혈액침하 → 시체굳음 → 자가용해 → 부패

13. 다음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제하는 마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모르핀
 - ㉡ 아편
 - ㉢ 메트암페타민
 - ㉣ 코카인
 - ㉤ 러미나
 - ㉥ 펜타닐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14. 다음 <보기> 중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상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E-1(교수)

㉡ E-2(회화지도)

㉢ E-9(선원취업)

㉣ E-10(비전문취업)

㉤ B-2(관광·통과)

㉥ C-4(단기취업)

㉦ F-4(재외동포)

㉧ H-1(방문취업)

㉨ H-2(관광취업)

- ① 4개

② 5개

③ 7개

④ 9개

15. 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청구 또는 신청의 주체가 된다.

②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기간은 4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4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국가정보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 다음 중 ‘피해통보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수범범죄의 신고를 받았거나 범인을 검거한 경우 작성한다.

② 피해통보표는 피작성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삭제한다.

③ 피해통보표는 피의자가 검거되었거나 사망하였을 때 삭제한다.

④ 피해통보표는 장물조회, 여죄파악, 재범시 검거를 목적으로 이용된다.

17.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구속의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증거인멸의 염려

② 범죄의 중대성

③ 재범의 위험성

④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18. 다음 중 시체얼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시체얼룩은 주위의 온도가 낮을수록 빨리 생긴다.

② 대체로 체위의 하반부에 발현됨

③ 침윤성 시체얼룩 전에는 퇴색 및 자리바꿈이 불가능함

④ 조직 간에 혈액이 굳어 있어 절개 시 굳은 피가 닦아지지 않는다.

19. 다음 중 중독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산가리 중독사일 경우 코와 입에서 특유의 냄새가 난다.

② 일산화탄소 중독사일 경우 시체얼룩은 녹갈색을 띤다.

③ 사이안산 중독사일 경우 코와 입에서 특유의 냄새가 나며, 시체얼룩은 선홍색(붉은색)이 나타난다.

④ 일산화탄소 중독 시 가장 좋은 시료는 혈액이다.

20. 다음 중 화인조사의 ‘예비조사’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화재의 발생시간과 발견상황, 발견동기를 조사한다.

② 화원부에 대한 조사를 최우선으로 실시한다.

③ 건물의 구조와 용도, 사용자를 조사한다.

④ 이해관계자의 보험과 부채관계를 조사한다.

21. 다음 <보기> 중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상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보기 >
- 경찰관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보호 실태의 지도·감독·조치 등을 위해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에 (㉠)을 두고, 해양경찰청에 (㉡)을 둔다.

- ① ㉠ 인권담당관

㉡ 인권보호관

② ㉠ 인권보호관

㉡ 인권담당관

③ ㉠ 인권주무관

㉡ 인권담당관

④ ㉠ 인권보호관

㉡ 인권주무관

22. 다음 <보기> 중 마약류에 대한 증거물 채취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 양귀비는 줄기부위가 가장 함량이 높으므로 줄기 전체를 채취한다.
- ㉡ LSD는 마취범죄와 관련된 주스캔, 요구르트병 등을 채취하여 적은 양이라도 손실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투명한 유리용기에 밀폐하여 보관해야 한다.
- ㉢ 대마초는 대마엽, 대마씨앗, 대마전초 등은 물론 흡입하기 위해 준비해 둔 담배필터, 파이프, 음료수캔, 요구르트병을 채취한다.
- ㉣ 필로폰은 소변감정 의뢰시 오염되지 않은 소변을 약 20 ml 가량 채취하여야 하며 소변채취 전 이뇨작용이 있는 음료수의 섭취를 금하여야 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3. 다음 중 헤로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헤로인은 모르핀보다 의존성이 훨씬 강하며, 독성은 모르핀보다 10배 이상 강하고 금단증상도 매우 강하다.
- ② 헤로인은 백색 분말형태로 된 것이 순도가 높고 효과도 뛰어나 고가로 밀거래되며, 물에 쉽게 용해되지 않아 주로 정제형태로 사용된다.
- ③ 헤로인의 주생산지는 이란, 파키스탄, 터키, 중국이다.
- ④ Speed Ball은 강력한 흥분효과를 내기 위해 코카인과 혼합하여 정제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다.

24. 다음 간첩의 임무(사명) 유형 중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간첩 - 기밀탐지·수집 등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간첩
- ② 보급간첩 - 간첩을 침투시키거나 이미 침투한 간첩에게 필요한 활동 자재를 보급·지원하는 간첩
- ③ 동원간첩 - 이미 구성된 간첩망의 보강을 위해 파견되는 간첩, 또는 간첩으로 이용할 양민 등의 납치 월북 등을 주된 임무로 하는 간첩
- ④ 무장간첩 - 요인암살, 남파간첩의 호송, 월북 안내, 연락 및 남파루트 개척

25. 다음 중 국가정보학에서 정보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이익이나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현상을 제대로 예측하거나 판단하지 못해 국가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 ② 정보실패는 정보적 실패와 정보외적 실패로 구분된다.
- ③ 정책실패는 정보적 실패에 해당한다.
- ④ 정책실패란 정책결정자의 무지와 오판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26. 다음 <보기> 중 정보생산단계의 ‘소순환과정’ 순서로 가장 올바른 것은?

< 보기 >

- ㉠ 수집된 첩보 중 불필요한 첩보를 골라내고 긴급성, 유효성 등을 기준으로 필요한 것들을 걸러내는 초기적 평가 과정이다. 정보의 생산과정에서 수집된 첩보 중 즉각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된 첩보를 기록 관리한다.
- ㉡ 첩보의 출처 및 내용에 관해 신뢰성과 사실성, 타당성을 판정하는 과정이다.
- ㉢ 평가단계에서 정선된 첩보를 가지고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들을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 ㉣ 부여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동종의 것끼리 분류된 사실을 하나의 통일체로 결합하는 과정이다.
- ㉤ 평가, 분석, 종합된 정보에 대하여 그 의미와 중요성을 결정하여 건전한 결론도출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다.

- ①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② ㄴ → ㄷ → ㄹ → ㅁ → ㅂ → ㄱ
 ③ ㄷ → ㄹ → ㅁ → ㅂ → ㄱ → ㄴ
 ④ ㄹ → ㅁ → ㅂ → ㄱ → ㄴ → ㄷ

27. 다음 중 외국인의 일반적 지위에 관한 국제법상 원칙에서 자국에 있는 외국인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정도의 권리·의무를 인정하는 주의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평등주의 ② 상호주의
③ 제한주의 ④ 대응주의

28. 다음 중 「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의 강제퇴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제퇴거란 체류국 정부가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체류국 영역 밖으로 퇴거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 ② 유효한 여권과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강제 퇴거 대상이다.
 - ③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다.
 - ④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

29. 다음 중 「국가보안법」 상 수사절차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 ② 검사의 구속기간은 3차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 ③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때는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2차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30. 다음 중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교관의 개인주택도 불가침이다.
 - ② 특권과 면제는 본인과 파견국 정부에 의해서만 포기될 수 있다.
 - ③ 접수국에서 살인을 하여도 그를 처벌하지 못한다.
 - ④ 특권과 면제는 그의 가족에게도 인정된다.

31. 다음 중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의 통지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이 대상인 경우
 - ②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2. 다음 중 「범죄인 인도법」 상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치범 불인도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② 자국민의 경우에는 필요적 인도거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③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 ④ 상호주의에 의하면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33. 다음 <보기> 중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의 종류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게 짝지어진 것은?

- < 보기 >
- ㉠ 폭발물 등 위험물에 대한 경고 목적으로 발행
 - ㉡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발행
 - ㉢ 주로 수배자의 신원·전과 및 소재확인을 위해 발행
 - ㉣ 새로운 특이 범죄수법을 분석하여 각 회원국에 배포할 목적으로 발행

- | | |
|------------|----------|
| ① ㉠ 오렌지수배서 | ㉡ 황색수배서 |
| ㉢ 적색수배서 | ㉣ 자주색수배서 |
| ② ㉠ 오렌지수배서 | ㉡ 자주색수배서 |
| ㉢ 청색수배서 | ㉣ 장물수배서 |
| ③ ㉠ 오렌지수배서 | ㉡ 황색수배서 |
| ㉢ 청색수배서 | ㉣ 자주색수배서 |
| ④ ㉠ 오렌지수배서 | ㉡ 황색수배서 |
| ㉢ 적색수배서 | ㉣ 장물수배서 |

34. 다음 중 실체적 진실발견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른 중요한 이익과의 충돌로 인한 한계 - 군사, 공무, 업무상비밀에 관한 사항의 압수·수색 제한
- ②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가해지는 절차상의 한계 - 진술거부권
- ③ 적정절차의 요구에 의한 한계 - 위법수집증거 능력의 제한
- ④ 재판의 신속에 의한 한계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35. 다음 중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를 의미한다.
- ② 수사의 상당성은 비례의 원칙, 신의칙과 관련한 조건이다.
-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 ④ 수사의 상당성은 특히 강제수사의 경우에 강조된다.

36. 다음 중 수사자료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식자료’는 수사를 과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적 감식기술, 장비 등을 이용하여 범인발견, 범죄증명에 활용되는 자료를 말하며 지문, 혈액형 등이 있다.
- ② ‘기초자료’는 구체적인 범죄사건 수사와 관계없이 평소의 수사활동을 통하여 범죄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 제공하기 위하여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우범자 동향 등이 있다.
- ③ ‘사건자료’는 구체적인 범죄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그 사건의 수사방침 수립과 범인 및 범죄사실 발견을 위하여 수집되는 자료로서 유형의 자료로는 유류품, 무형의 자료로는 수법, 냄새 등이 있다.
- ④ ‘참고자료’는 사후의 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 피해통보표, 수법원지 등이 있다.

37. 다음 <보기> 중 「해양경찰수사규칙」 상 불입건 결정 통지를 해야 하는 대상자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탄원인
 - ㉡ 진정한
 - ㉢ 피혐의자(입건전조사 종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 ㉣ 피해자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8. 다음 <보기> 중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상 수사촉탁 처리기한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보기 >
- ㉠ 피의자 조사 : ()일
 - ㉡ 고소인·고발인·참고인 조사 : ()일
 - ㉢ 소재수사 : ()일
 - ㉣ 사건기록 사본 송부 : ()일

- ① 40 ② 50 ③ 55 ④ 60

39. 다음 중 지문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문 중심부에 상부곡선과 하부곡선을 형성하고 등글게 돌아갔으며 좌측 또는 우측에 삼각도가 있는 지문(삼각도 1개 이상)을 와상문이라 한다.
- ② 제상문은 말발굽모양의 제상선이 모여서 형성된 지문으로 용선이 흐르는 반대쪽에 삼각도가 1개 있는 문형으로 갑종제상문과 을종제상문이 있다.
- ③ 을종제상문은 좌수의 지문을 찍었을 때 삼각도가 우측에 형성되어 있거나 우수의 지문을 찍었을 때 삼각도가 좌측에 형성되어 있는 지문을 말한다.
- ④ 궁상문, 제상문, 와상문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문형으로 점과 단선 기타 구불구불하게 특이한 용선으로 형성된 지문은 변태문이라 한다 (육손가락과 합지의 경우도 포함).

40. 다음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제하는 마약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외마약이란 일반약품에 마약성분을 미세하게 혼합한 약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감기약 등으로 판매되는 합법 의약품으로서 코데인, 코데솔, 코데잘 등이 있다.
- ② LSD는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합성시켜 만든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하며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
- ③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에서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류는 각성제에 해당한다.
- ④ GHB는 무색, 무취의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특히 미국,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도 불린다.

항공법규

1. 다음 중 <보기>의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항공안전법」 제6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은 (㉠)
및 (㉡)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는 (㉢)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 | ㉠ | ㉡ | ㉢ |
|---|----|----|----|
| ① | 지식 | 기량 | 기량 |
| ② | 지식 | 기량 | 지식 |
| ③ | 지식 | 경험 | 지식 |
| ④ | 지식 | 경험 | 경험 |

2. 다음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1조(계기비행 방식 등에 의한 비행·접근·착륙 및 이륙) 상 조종사가 계기비행방식으로 착륙하기 위하여 접근 시 활주로 시각참조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활주로지단표시(threshold marking)
- ② 진입각지시등(VASI 또는 PAPI)
- ③ 접지구역표시(touchdown zone marking)
- ④ 활주로중심선등(runway centerline light)

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0조(통신) 상 “계기비행 기상상태에서 통신이 두절되었을 경우, 접근 예정 시간과 도착 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으로부터 () 이내에 착륙해야 한다.” 다음 중 괄호 안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10분 ② 20분 ③ 30분 ④ 60분

4. 다음 <보기>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위험물 운송허가등) 상 “폭발성이나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가소성 물질류	㉡ 산화성 물질류
㉢ 부식성 물질류	㉣ 가스류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6조제3항 상 “항공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 외의 비행기를 계기비행 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면 1개 이상의 목적지 교체 비행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음 중 목적지 교체 비행장의 기상상태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최소 1개의 목적지 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도착 예정시간에 해당 비행장 운영 최저치 이상일 경우에 비행을 시작하여야 한다.
- ② 최소 1개의 목적지 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가 이륙 예정시간에 해당 비행장 운영 최저치 이상일 경우에 비행을 시작하여야 한다.
- ③ 목적지 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도착 예정시간 1시간 전부터 1시간 후까지 해당 비행장 운영 최저치 이상일 경우에 비행을 시작하여야 한다.
- ④ 목적지 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도착 예정시간 1시간 전부터 도착 예정시간까지 해당 비행장 운영 최저치 이상일 경우에 비행을 시작하여야 한다.

6. 다음 중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장애물 제한 표면의 기준) 상 계기접근과 비계기접근에 있어서 진입구역의 길이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계기접근 : 10,000 m ,
비계기접근(육상비행장) : 3,000 m
- ② 계기접근 : 15,000 m ,
비계기접근(육상비행장) : 4,000 m
- ③ 계기접근 : 15,000 m ,
비계기접근(육상비행장) : 5,000 m
- ④ 헬기장 진입구역의 길이 : 1,000 m

7. 다음 <보기> 중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의 기본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 항행안전시설
- ㉡ 기상관측시설
- ㉢ 항공기 급유시설 및 유류 저장시설
- ㉣ 공항 이용객에 대한 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 ㉤ 항공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비행중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할 수 있는 초단파(VHF) 또는 극초단파(UHF) 무선전화 송수신기에 필요한 성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행장 또는 헬기장에서 관제를 목적으로 한 양방향통신이 가능할 것
- ② 무선전화 송수신기 2대를 설치할 경우 그 중 1대는 구명보트에 설치해야 한다.
- ③ 비행 중 계속하여 기상정보를 수신할 수 있을 것
- ④ 항공비상주파수(121.5 MHz 또는 243.0 MHz)를 사용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과 통신이 가능할 것

9. 다음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0조 상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하고자 할 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항공청장
- ② 해양수산부장관
- ③ 국방부장관
- ④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10. 다음 중 <보기>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보기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8조(긴급항공기의 운항절차) 제2항

긴급항공기를 운항한 자는 운항이 끝난 후 (㉠)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긴급항공기 운항결과 보고서를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① | 12시간 | 지방항공청장 |
| ② | 12시간 | 국토교통부장관 |
| ③ | 24시간 | 지방항공청장 |
| ④ | 24시간 | 국토교통부장관 |

11. 다음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 상 자격증명을 한정하는 항공기의 종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행선 ② 활공기
- ③ 항공우주선 ④ 초경량비행장치

12. 다음은 「항공안전법」상 각 공역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제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
- ② 비관제공역 :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비행에 관한 조언·비행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
- ③ 통제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 ④ 주의공역 :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기타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13.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 시 최저비행고도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표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의 고도
- ② 지표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200미터의 고도
- ③ 지표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250미터의 고도
- ④ 지표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300미터의 고도

14.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이양의 적용 특례를 적용받는 항공기
- ② 국내에서 수리·개조 또는 제작한 후 수출할 항공기
- ③ 항공기의 제작정비 또는 수리·개조 후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 ④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감항증명을 신청한 항공기

15.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 및 유효기간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공기관사 - 제2종 - 12개월
 - ② 항공교통관제사 - 제2종 - 24개월(40세 이상 50세 미만인 경우)
 - ③ 자가용 조종사 - 제2종 - 24개월(40세 이상 50세 미만인 경우)
 - ④ 사업용 조종사 - 제1종 - 6개월(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

16. 다음 중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보기 > —

「공항시설법」 제56조(금지 행위) 제1항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허가 없이 ()에
출입해서는 아니된다.

- ① 계류장
 - ② 격납고
 - ③ 항행안전시설이 설치된 지역
 - ④ 급유시설
17. 다음 중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보기 > —

「공항시설법」 제36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제2항
장애물 제한표면 밖의 지역에서 지표면이나 수면
으로부터 높이가 () 이상 되는 구조물을 설치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
장애주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① 45미터 ② 60미터
 - ③ 90미터 ④ 120미터
18.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항공종사자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1차 위반 시 효력정지 기간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7일 ② 10일 ③ 20일 ④ 30일

19. 다음 중 「항공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상업서류송달업
 - ② 항공기대여업
 - ③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④ 항공레저스포츠사업

20. 다음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 상 항공 정비사의 자격증명을 한정하는 정비분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기체(機體) 관련 분야
 - ② 왕복발동기 관련 분야
 - ③ 프로펠러 관련 분야
 - ④ 전자·전기·계기 관련 분야

21.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지상 접근경고장치(GPWS)’는 조종사에게 경고를 제공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다음 중 그 성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도한 강하율이 발생하는 경우
 - ② 지형지물에 대한 과도한 접근율이 발생하는 경우
 - ③ 이륙 또는 복행 후 과도한 고도의 손실이 있는 경우
 - ④ 계기활공로 방위각을 벗어나 과도한 이탈이 이루어진 경우

22.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운항관리사가 자가용 조종사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제되는 과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 보기 > —

㉠ 공중항법	㉡ 항공기상
㉢ 항공법규	㉣ 항공교통, 통신, 정보업무

- ① ㉠, ㉡ ② ㉠, ㉢
- ③ ㉢, ㉣ ④ ㉡, ㉣

23.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항공기등의 검사관 자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③ 항공기술 관련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항공기의 설계, 제작, 정비 또는 품질보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④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설계, 제작, 정비 또는 품질 보증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4. 다음 <보기>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항공기 소유자에게 발급되는 운용한계 지정서에 포함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보기 >

㉠ 항공기의 모델

㉡ 항공기의 종류 및 등급

㉢ 항공기의 국적

㉣ 항공기의 수입국

㉤ 항공기의 제작일련번호

㉥ 감항증명번호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25.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탑재용 항공일지에 적어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공기 등록부호 및 등록 연월일
 - ② 구급용구의 탑재위치 및 수량
 - ③ 항공기의 제작자·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 ④ 비행에 관한 기록
26.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가 시계비행을 할 경우 추가 하여야 할 연료의 양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순항속도로 30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 ② 순항속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 ③ 순항속도로 60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 ④ 순항속도로 90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27. 다음 중 「공항시설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착륙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이수(離水) 포함]과 착륙[착수(着水) 포함]을 위하여 상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
 - ② 비행장에 설치된 항공기의 이륙·착륙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 ③ 비행장 외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이수(離水) 포함] 또는 착륙[착수(着水) 포함]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
 - ④ 활주로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
28.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항공기준사고’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운항 중 엔진 덮개가 풀리거나 이탈한 경우
 - ②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되는 근접비행(다른 항공기와의 거리가 500피트 미만으로 근접하였던 경우를 말한다)이 발생한 경우
 - ③ 운항 중 발동기 화재가 발생한 경우
 - ④ 조종사가 연료량으로 인해 비상선언을 한 경우
29. 다음 중 「공항시설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불빛, 색채 또는 형상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항공등화 중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진입로를 알려주기 위해 진입구역에 설치하는 등화”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비행장등대(Aerodrome Beacon)
 - ② 진입등시스템(Approach Lighting System)
 - ③ 진입각지시등(Precision Approach Path Indicator)
 - ④ 진입구역등(Final Approach & Take-off Area Lights)

30. 다음 중 「공항시설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계기접근이 아닌 접근(비계기접근)’에 사용되는 활주로나 설치되는 비행장에 적용되는 장애물 제한 표면의 종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추표면
- ② 수평표면
- ③ 전이표면
- ④ 착륙복행표면

31.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등록기호표’와 관련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공기 등록기호표의 부착시기는 항공기 등록 후이다.
- ② 항공기 소유자등이 항공기 등록기호표를 부착한다.
- ③ 등록기호표는 세로 5센티미터, 가로 7센티미터의 내화금속으로 만든다.
- ④ 항공기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 항공기 등록기호표는 주(主)출입구 윗부분 바깥쪽에 부착한다.

32. 다음 <보기>는 「공항시설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공등화 관리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안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 항공등화의 관리자는 항공등화에 관한 업무 일지를 갖춰 두고 (가)년 이상 보존할 것

㉡ 공항·비행장의 등화는 항공기가 착륙하는 경우에는 해당 착륙 예정시각 (나)시간 전에 점등 준비를 하고 그 착륙 예정시각보다 최소한 (다)분 전에 점등할 것

㉢ 공항·비행장의 등화는 항공기가 이륙하는 경우에는 이륙한 후 최소한 (라)분간 점등을 계속할 것


	가	나	다	라
①	2	1	10	5
②	2	2	5	10
③	1	1	10	5
④	1	2	5	10

33. 다음 중 「공항시설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계기착륙시설(ILS)의 구성장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방위각제공시설(LLZ)
- ② 활공각제공시설(GP)
- ③ 마커장비
- ④ 마이크로파착륙시설

34.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보기>의 ‘항공기 유도원 수신호’의 의미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오른손의 유도봉을 위쪽을 향하게 한 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왼손의 유도봉을 아래로 향하게 하면서 몸쪽으로 붙인다.

- ① 출입문의 확인
- ② 좌회전(조종사 기준)
- ③ 항공기 안내(Wingwalker)
- ④ 엔진 정지

35. 해양경찰청 무안항공대 B705(CN-235)호기가 서해상 경도 124도 이서(以西) 중국 비행정정보구역 내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추격 중 중국 공군기에 요격을 당하였다. 요격 항공기가 B705호기의 진로를 가로지르지 않고 90°로 상승선회를 하며 급속히 이탈할 때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알았다. 지시를 따르겠다.”는 피요격 항공기의 행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랜딩기어를 내린다.
- ② 날개를 흔든다.
- ③ 항행등을 규칙적으로 깜박인다.
- ④ 항행등을 불규칙적으로 깜박인다.

36.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가 시계비행 시 갖추어야 할 항공계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사지시계
- ② 시계
- ③ 속도계
- ④ 정밀기압고도계

37.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비 훈련 프로그램
 - ② 정비사의 직무능력 평가
 - ③ 항공기등, 장비품 및 부품의 정비방법 및 절차
 - ④ 기술관리
38.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다른 항공기의 후방 좌·우 70도 미만의 각도에서 그 항공기를 앞지르기하려는 항공기의 항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앞지르기당하는 항공기의 위쪽을 통과해야 한다.
 - ② 앞지르기당하는 항공기의 아래쪽을 통과해야 한다.
 - ③ 앞지르기당하는 항공기의 오른쪽을 통과해야 한다.
 - ④ 앞지르기당하는 항공기의 왼쪽을 통과해야 한다.
39.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공기의 등록원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공기의 등급 ② 항공기의 제작자
 - ③ 등록기호 ④ 항공기의 등록 연월일
40. 다음 중 「항공안전법」 제1조(목적)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안전한 항행을 위한 방법 규정
 - ②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 규정
 - ③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④ 국가, 항공사업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규정

2025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 경 장 (1교시) >

- 형사소송법(07), 해사법규(08) -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응시자 유의사항

- 본인의 응시계급, 교시, 과목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신속히 페이지를 넘겨 인쇄 상태 등 파본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문제지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교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교체를 요구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성 명 :

응 시 번 호 :

해 양 경 찰 청

형사소송법

1. 다음 <보기> 중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 보기 >

-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2. 다음 중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직근 상급 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 법원이 된다.
- ②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 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유지된다.
- ④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고 이 경우 심판을 하지 않는 단독판사는 공소기각결정으로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

3. 다음 중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 ②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③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 ④ 국내에서 범죄를 범한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다가 그곳에서 징역형을 받아 복역한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4. 다음 중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다.
- ②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경우에도 불법 체포·감금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③ 제1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는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④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라도 재심 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5. 다음 중 직권주의적 요소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공소장 변경요구제도
- ② 공소장일본주의
- ③ 증거보전청구권
- ④ 증인에 대한 교호신문제도

6. 다음 중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1심 관할사건이라면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은 물론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해서도 간이공판절차를 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
- ④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7. 다음 중 체포와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마주하자마자 도망가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먼저 폭력을 행사하며 대항한 바 없는 등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②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③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고 또는 준항고를 할 수 없다.
- ④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에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지방검찰청은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영장심의위원회를 둔다.

8. 다음 중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② 피고인이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 ③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 ④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으나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검사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9. 다음 중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 ②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비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외에 설치되어야 한다.
- ③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유죄의 선고뿐만 아니라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수 있다.
- ④ 즉결심판에 있어서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10. 다음 중 재정신청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정신청은 협의의 불기소처분에는 허용되나 기소유예의 처분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③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④ 재정신청에서 재정신청인에 대한 비용부담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1. 다음 중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무효이며,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더라도 유효하게 될 수 없다.
- ②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는 무효이며, 공소장 기재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심리 및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공소장부분 송달 등의 절차 없이 검사가 공판 기일에 공소장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로 공소장을 갈음한다고 구두 진술한 것만으로는 유효한 공소제기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 ④ 포괄일죄와 같이 공소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개괄적인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있다.

12. 다음 <보기> 중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 범죄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된다.
- ㉡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는 없다.
- ㉢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 ㉣ 피해자의 친족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다음 중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 법원 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는 이에 대하여 항고하여 다룰 수 없다.
- ㉢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 ㉣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에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 ㉤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면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① ㄅ, ㄌ ② ㄅ, ㄘ
- ③ ㄌ, ㄘ ④ ㄘ, ㄘ, ㄙ

14. 다음 중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공판정에서 구술로 할 수 있는바, 그 경우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금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보호장비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거부한 조치는 준항고의 대상인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한다.
- ③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여 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단기형이 되어야 한다.
- ④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검사의 상소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상소한 경우에는 적용된다.

15. 다음 중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법원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상업일지와 금전출납부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한 바 없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 ㉢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 ㉣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 ㉤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후 검사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는데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면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다음 중 <보기>의 내용에 대한 괄호 안의 종국재판이 옳바른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의 일부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후에 나머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면소판결)
- ㉡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면소판결)
- ㉢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에서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공소기각판결)
- ㉣ 공소취소를 이유로 한 재판이 확정된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없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기각판결)

① ㉠, ㉢ ② ㉡, ㉢ ③ ㉠, ㉢ ④ ㉡, ㉢

17. 다음 중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인의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이 적정한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 ②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구성요건이 조각된다.
- ③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때 인도시점이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일 필요는 없다.
- ④ 사법경찰관이나 일반 사인이 현행범인 체포 규정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를 하는 경우 영장없이 타인 주거에 들어갈 수 있다.

18. 다음 중 점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이 피의자를 점견할 때 국가정보원 직원이 승낙 없이 사진촬영을 한 것은 점견교통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비변호인과의 점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연히 임의성이 부정된다.
- ③ 변호인의 점견교통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도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점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 ④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점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점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 가능한 것은 아니다.

19. 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통신기관 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 ③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
 - ④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주체가 제3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대화의 녹음·청취’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집행을 위탁하거나 그로부터 협조를 받아 ‘대화의 녹음·청취’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통신기관 등이 아닌 일반 사인에게는 당해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 또는 협조일시 및 대상을 기재한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할 의무가 있다.
20.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와 제221조의2(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허용되는 것이나, 재심청구사건에서도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증거보전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②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나, 증인신문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 ③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을 위하여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

21. 다음 중 과학적 증거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 ②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 ③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④ 전문 감정인이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한 후 법원에 제출한 과학적 증거는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었다면,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22. 다음 중 배상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 ② 배상명령은 유·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면소·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23. 다음 중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③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도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는 가능하지만, 신분위장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4. 다음 중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 ②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③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과 구별된다.
- ④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피해자로서 신문하였는데, 그 중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도 이를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

25. 다음 중 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② 수사기관에의 자발적 신고 내용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 후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면 새롭게 자수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 ③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경우라도 자수가 인정된다.
- ④ 범인이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것일지라도 자수는 성립한다.

26. 다음 중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 ③ 피의자의 변호인이 인정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사에게 피의자의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검사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변호인을 퇴실시키는 것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경우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

27. 다음 중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려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그 진술을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 ④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28. 다음 <보기> 중 자유심증주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 자백에 임의성이 있어 그 증거능력이 부여되는 경우에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 조서의 내용에 대한 증명력은 전체적으로 고찰되어야 하므로, 진술조서의 기재 중 일부분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아니한다면 곧바로 부당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 ㉢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도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다.
- ㉣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9.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 ② 부검의(剖檢醫)가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후 어떤 것을 유력한 사망원인으로 지시한다고 하여 그 밖의 다른 사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가볍게 배제하여서는 아니되고 특히 형사재판에서 부검의의 소견에 주로 의지하여 유죄의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능한 사망원인을 모두 배제하기 위한 치밀한 논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 된다.
- ③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 ④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0. 다음 중 변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사자라 함은 부자연한 사망으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그 사인이 명백한 경우는 변사자라 할 수 없다.
- ②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 ③ 변사자는 수사의 단서로서 발견 즉시 수사가 개시된다.
- ④ 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31. 다음 <보기> 중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으로써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 ㉡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에서 말하는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의 범위에는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도 포함된다.
- ㉢ 긴급체포된 자로부터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고, 압수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긴급체포할 수 없다. 그러나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경우 체포가 가능하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2. 다음 중 재판확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습범의 범죄사실들 사이에 동일한 습벽에 의한 상습범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 범행은 일죄성이 분단되므로 검사는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 사실로 추가할 수 없고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②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다.
- ③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항소기각 결정시이다.
- ④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쳤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

33. 다음 중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②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던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자백의 약속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③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조에서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는 원칙적으로 예시사유로 보아야 한다.
- ④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더라도 법정에서의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 이라고 볼 수 없다.

34. 다음 중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국가기관의 기본권 침해와 위법한 수사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원칙이므로 사인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항상 적용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 ③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대가를 지급 하고 취득한 업무일지는 그것이 제3자에 의해 절취된 것이라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공익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도 사기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제3자가 대화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통화내용은 다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5. 다음 중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드에 입력하거나 업주가 고용한 다른 여직원이 그 내용을 입력한 사안에서, 위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
- ② 휴대전화로 협박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전송된 문자 정보를 휴대전화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에 대해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이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 ③ 공범으로서 별도로 공소제기된 다른 사건의 피고인 甲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피의자인 甲과 그 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
- ④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36. 다음 <보기> 중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 ㉡ 고소인과 고발인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7. 다음 중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경우라도 항소심에 출석하여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하는 의사 표시를 한다면 그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 ② 피고인은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의사 표시를 하였더라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 ③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한다고 진술한 것은 조서내용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
- ④ 피고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원은 증거공통의 원칙상 피고인의 증거동의 등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8. 수사단계에서 甲이 乙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고 이를 오인한 검사가 乙을 피고인으로 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乙에 대해 약식명령을 하자, 이를 송달받은 乙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정식재판절차에서 甲의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장에 乙이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甲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甲이 피고인이 되고 공소의 효력도 甲에게 미친다.
- ②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지 않으면 공소제기 방식이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③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甲으로 정정하고 법원이 약식명령의 피고인 표시를 甲으로 정정하여 경정 결정과 약식명령정본을 甲에게 송달한 경우, 甲이 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된다.
- ④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라도 피모용자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39. 다음 중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영장에 의하여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언제나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이 허용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④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40. 다음 중 공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판정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위법하다.

②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거조사가 종료되자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재판장이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불허하고 변호인에게 주장할 내용을 변론요지서로 제출할 것을 명령하면서 변론을 종결한 것은 위법하다.

③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다.

④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공소장부분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해 사 법 규

1.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해양경비 활동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② 해양오염 방지 및 해양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조치
③ 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조치
④ 해상경호, 대(對)테러 및 대간첩작전 수행
2.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하는 운항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 또는 선박과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과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해야 한다.
② 다른 수상레저기구 또는 선박과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운항 해서는 안 된다.
③ 다른 수상레저기구 또는 선박과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수신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 쪽으로 진로를 피해야 한다.
④ 다른 수상레저기구 또는 선박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수상 레저기구 또는 선박을 오른쪽에 두고 있는 수상 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해야 한다.

3. 다음은 「해사안전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가장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은 해사안전 증진을 위한 국가해사안전기본 계획을 (㉡)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항행환경개선에 관한 계획은 (㉢)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	㉡	㉢
①	해양수산부장관	5	10
②	해양경찰청장	5	10
③	해양수산부장관	10	5
④	해양경찰청장	10	5

4. 다음 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등록증 또는 등록 번호판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③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검사대행자(해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신고 하고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④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안전검사필증을 등록번호판의 왼쪽에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 구조의 특성상 등록 번호판의 왼쪽에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등록 번호판의 오른쪽이나 등록번호판이 없는 다른 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수 있다.
5. 다음 <보기>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양사고(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에 대한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보 기 >
- ㉠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상시설(육상시설은 제외한다)이 손상된 사고
㉢ 선박이 멸실·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 선박이 충돌·좌초·전복·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 할 수 없게 된 사고

- ① ㉠, ㉡
② ㉠, ㉢, ㉣
③ ㉡, ㉢, ㉣
④ ㉠, ㉡, ㉢, ㉣

6. 다음 <보기> 중 「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 해기사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 해기사가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 ㉢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해양환경보전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 ㉣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다음 중 「선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적항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다. 다만,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해양사고 또는 포획을 피하려는 경우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선적항으로 할 시·읍·면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곳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 ③ 선적항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정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선박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려는 경우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시·읍·면에 정할 수 있다.
- ④ 선박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 또는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에서 한다.

8. 다음은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기름기록부 및 폐기물기록부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가장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기름기록부는 (㉠) 기재를 한 날부터 (㉡)년 동안 보존하며, 폐기물기록부는 (㉢) 기재를 한 날부터 (㉣)년 동안 보존한다.

	㉠	㉡	㉢
①	최초	3	3
②	최초	3	5
③	최종	3	3
④	최종	5	5

9. 다음 <보기> 중 「항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만을 구분할 때,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 추자항 ㉡ 후포항
- ㉢ 상왕등도항 ㉣ 완도항
- ㉤ 국도항 ㉥ 격렬비열도항
- ㉦ 용기포항

- ① 3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10. 다음 <보기> 중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 ㉠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을 ‘검수’라 한다.
- ㉡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은 제외한다)에 관련된 증명·조사·감정을 하는 일을 ‘감정’이라 한다.
- ㉢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인수를 증명하는 일을 ‘검량’이라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11. 다음 중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호수역에 입역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이 그 해양 시설의 보호수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 ②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상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하는 경우
- ④ 유실물 수색 및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 하는 경우

12. 다음 중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관할관청이 유·도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유·도선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개선명령 (법령상 명시된 것을 전제로 한다)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원의 자격 유지·관리에 대한 개선명령
- ② 시설기준 등의 유지·관리
- ③ 영업시간 또는 운항횟수의 제한
- ④ 보험 등에의 가입

13. 다음 <보기>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적용범위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보기 > —
- ㉠ 「해양경비법」과 「통합방위법」, 「해양경비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 하고 있다.
 - ㉡ 경비수역을 제외한 수역에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 경비수역에 있는 해양시설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 해양경비와 관련하여 「통합방위법」에 규정 되어 있더라도 「해양경비법」에 정한 것을 우선 적용한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

14. 다음 중 「선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대한 민국 선박이 선박의 뒷부분에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 하여야 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총톤수 50톤 미만이거나 최대속력이 25노트 이상인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 ① 대한민국의 해안망루(海岸望樓)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 ② 외국항을 출입하는 경우
- ③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 ④ 해양경찰청 소속의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15. 다음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관할에 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심판에 부칠 사건의 관할권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속한다. 다만, 해양사고 발생 지점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심판원에 속한다.
- ②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을 심판하는 지방심판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으로 또는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나 심판변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심판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 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 에서 심판한다.
- ④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중앙 심판원이 병합하여 심판한다.

16. 다음 <보기>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포함)」상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양호한 해역 중 해양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광양만

㉡ 함평만

㉢ 시화호

㉣ 인천 연안

㉤ 가막만

㉥ 마산만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7. 다음 <보기> 중 「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원’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실습선원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위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 「도선법」에 따른 도선사

㉣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원

㉤ 「선박직원법」에 따른 전자기관사

㉥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기술자 및 작업원

㉦ 선장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8. 다음 중 「해양경찰법(시행령 포함)」상 해양경찰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소관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관리계획 등의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이 재의를 요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19.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교통관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박교통관제’란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선박의 동정을 관찰하며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 및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국가의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 자기가 소유·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도록 운항자에 대하여 국내 선박교통관제 운영 현황을 포함하는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면 관할구역에서의 해상교통량, 선박 이동경로, 해양사고 현황 및 선박교통관제 시행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항행 중인 모든 선박의 선장은 항로상의 장애물이나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선박교통의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20. 다음 중 「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운항 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승선하여야 할 승무원의 승선 여부 확인

②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하역작업자에 대한 업무지도

③ 선장의 선내 비상훈련 실시 여부 확인

④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및 복원성 등 감항성 유지 여부에 대한 확인

21. 다음 중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어선의 등기와 등록, 선적항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이 등록한 경우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을 포함한다)이 등록한 경우 선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선적항의 명칭은 항·포구의 명칭이나 어선 또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시·군·구·읍·면의 명칭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22. 다음 <보기> 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낚시어선업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선체, 기관 및 설비 등에 대하여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 낚시어선업자는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1개월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은 「어선법」에 따른 어선 검사증서에 적힌 어선원 및 어선원 외의 사람 각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 ㉣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충돌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 사고 장소가 내수면인 경우에는 사고발생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수면인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 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23. 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 포함)」상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 ②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다.
 - ③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 ④ 외국의 군함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항 3일 전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국방부장관에게 통항 목적 등을 통고하여야 한다.
24.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단을 편성하여 선단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증을 허가받은 선박의 조타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④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할 수 없다. 다만,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선박 또는 인명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5.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근해수역의 중점 경비사항은 해양 관계 국내법령을 위반한 선박등의 단속 등 민생치안 확보 및 임해 중요시설의 보호 경비이다.
- ② 해양경찰관은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지장을 주는 선박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해양경찰관은 임해 중요시설 경계 바깥쪽으로부터 1해리 이내 경비수역에서 선박등이 무리를 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행 또는 점거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하는 선박등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해산 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연안수역과 근해수역에서 실시한다.

26. 다음 중 「수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허가어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④ 건간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은 구획어업의 종류이다.

27. 「도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은 강제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음 중 강제 도선구가 아닌 것은?

- ① 군산항 도선구
- ② 동해항 도선구
- ③ 여수항 도선구
- ④ 통영항 도선구

28. 다음 중 「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면허의 자격요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 ②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수산업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
- ③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면허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을 할 수 있다.

29. 다음 중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교통안전특정해역 등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량이 아주 많은 해역으로서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을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 ②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는 여수·포항·부산·인천·울산구역으로 구분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교통안전 특정해역에서 어업면허, 양식업 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작업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나 작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항로표지 설치, 수로 측량 등 해사안전에 관한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 다음 <보기>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의 검사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건조검사 ㉡ 정기검사 ㉢ 중간검사
㉣ 임시검사 ㉤ 임시항해검사 ㉥ 국제협약검사

- ① 6개 ② 5개 ③ 4개 ④ 3개

31.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및 연안 사고예방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중앙연안사고예방 협의회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연안사고 예방협의회를, 해양경찰서에 지역연안사고예방 협의회를 둔다.
④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양 경찰청장이 된다.

32. 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선박이 건조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
② 선박이 등기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
③ 선박이 진수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
④ 선박이 등록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

33.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해수면’이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바다, 바닷가 및 인공적으로 해수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을 말한다.
② ‘구조’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③ ‘수난구조’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 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④ ‘수색’이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 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4. 다음 중 「항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만 시설의 기능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② 대기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③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④ 선박을 위한 연료공급시설과 급수시설, 얼음 생산 및 공급 시설 등 선박보급시설

35. 다음 <보기> 는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형 선박의 기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합 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보기 >
- ㉠ 「선박직원법 시행령」상 총톤수 ()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 「선박안전법」상 선박길이가 ()미터 미만인 선박을 말한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폐기물·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에 전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 「선박법」상 총톤수 ()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을 말한다.

- ① 157 ② 169 ③ 357 ④ 369

36. 「유선 및 도선 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유·도선사업자는 유·도선에 승선하는 선원 및 그 밖의 종사자(「선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 중 매월 실시하는 훈련과 6개월마다 실시하는 훈련으로 가장 옳게 구분한 것은?

	매월	6개월
①	선내숙지 훈련	기름유출대응, 소화훈련
②	퇴선 훈련	침수 및 추진기관 사고대응 훈련
③	선내숙지 훈련	퇴선 훈련
④	퇴선 훈련	기름유출대응, 소화훈련

3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에 출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음 중 출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무역항을 출항한 선박이 피난, 수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항 후 12시간 이내에 출항한 무역항으로 귀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선선, 예선 등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선박은 출·입항 1시간 전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중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는 출·입항 24시간 전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외국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에 기항한 후 2년이 지나서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 경우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38.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 <보기> 중 제1종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받아야 하는 선박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준설토 운반부선 ㉡ 잠수선 ㉢ 여객선
- ㉣ 부유식 해상구조물 ㉤ 원자력선
- ㉥ 여객용 수면비행선박

- ① 6개 ② 5개 ③ 4개 ④ 3개

39. 다음 중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가 아닌 사람은?

①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소유자

②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선장

③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운항자

④ 항행장애물이 발생한 해역을 관리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40. 다음 중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과학조사법」에서 정의한 ‘기초자료’란 현장에서 얻은 자료 중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와 그 자료를 해석·평가하는 데에 필수적인 관련 정보를 말한다.

② 국방부장관이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외국인등이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서를 교부받은 외국인등은 항상 조사선박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관계 기관의 장은 외국인등이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선·검색·나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2025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 경 장 (2교시) >

- 해경실무 (16), 항공법규 (05) -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응시자 유의사항

- 본인의 응시계급, 교시, 과목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신속히 페이지를 넘겨 인쇄 상태 등 파본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문제지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교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교체를 요구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성 명 :

응 시 번 호 :

해 양 경 찰 청

해 경 실 무

1.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따른 징계와 관련한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 ③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징계시효는 10년이다.

2. 다음 중 공무원의 보수수준 결정시 고려해야 할 요인 중 ‘경제적 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간의 임금수준 ② 국민 담세 능력
- ③ 생계비 지급 의무 ④ 정부의 지불 능력

3. 다음 <보기>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게 연결된 것은?

< 보기 >

- ㉠ 언론등에 의하여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 부터 ()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 ㉡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접수 후 ()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

- ① 그 사실을 안 날, 3개월 3개월
- ② 그 사실을 안 날, 3개월 1개월
- ③ 그 사실을 안 다음날, 3개월 3개월
- ④ 그 사실을 안 다음날, 3개월 1개월

4. 다음 중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게 연결된 것은?

< 보기 >

「국가공무원법」상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 의견에 차례로 (㉣)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

㉢

㉣

㉤

- ① 3분의 2 3분의 2 유리한 불리한 유리한
- ② 과반수 과반수 불리한 유리한 유리한
- ③ 3분의 2 과반수 불리한 유리한 유리한
- ④ 과반수 3분의 2 유리한 불리한 불리한

5. 다음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행정기관의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②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민원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③ 민원이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 ④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연장 사유와 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6. 다음 중 「경찰공무원징계령」상 해양경찰청 소속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을 집행하는 자로서 가장 옳은 것은?

- ① 해양수산부장관
- ② 대통령
- ③ 국무총리
- ④ 해양경찰청장

7. 다음 <보기>는 「해양경찰 예절 규칙」 상 상급자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게 연결된 것은?

- < 보기 >
- ㉠ 상급자를 수행할 때는 상급자의 한걸음 () 또는 한걸음 ()의 위치에서 따른다.

㉡ 전동차를 탈 때에는 ()가 먼저 타고, 내릴 때에는 ()가 먼저 내린다.

- ① ㉠ 뒤쪽, 왼쪽 ㉡ 상급자, 상급자

② ㉠ 앞쪽, 오른쪽 ㉡ 하급자, 상급자

③ ㉠ 뒤쪽, 왼쪽 ㉡ 하급자, 상급자

④ ㉠ 뒤쪽, 오른쪽 ㉡ 상급자, 하급자

8. 다음 <보기> 중 「해양경찰 예절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단정에 탈 때는 상급자가 나중에 타고 내릴 때는 상급자가 먼저 내리며, 단정내 우현은 최고 상급자의 좌석으로서 하급자의 착석은 금지한다.

㉡ 함정에서 국기는 함(정)미 깃대에 게양하며, 관서기는 항행 중일 때는 마스트(MAST)에 게양하고 정박 중일 때는 함(정)수 깃대에 게양한다.

㉢ 국기를 길이로 세워 붙일 때는 패의 건이 왼쪽 위로 오게 하고, 태극의 진홍색(양)이 위로 향하도록 한다.

㉣ 함정에서 국기는 기상과 관계없이 연중 24시간 게양해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다음 중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상 행정기관의 장이 해야 할 문서의 전자적 처리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활용 ② 등재 ③ 보존 ④ 분류

10. 다음 중 「보안업무규정」 상 비밀의 복제·복사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나 암호자재에 대해서는 모사·타자 등 그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I 급 비밀의 경우 해당 부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인쇄·조각 등 그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비밀의 경우 해당 비밀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녹음·촬영 등 그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II급 비밀의 경우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화·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1. 다음 중 「(해양경찰청)범죄수사규칙」 상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에서 전과의 유무

② 국내 입·출국 경력

③ 가족의 유무와 그 주거

④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시기

12. 다음 중 「해양경찰청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상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원의 종류에는 고충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법정민원, 기타민원이 포함된다.

② 고충민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③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은 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에 있는 자는 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하루에 2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② 하루 25회 이상 10 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③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 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④ 하루에 10회 이상 25 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4. 다음 중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에 따라 언론사가 정정보도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피해자가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 ② 청구된 정정보도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 ③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적법한 내용인 경우
 - ④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법원의 비공개재판 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15. 다음 <보기> 중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상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 ㉡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 연도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 ㉣ “변동복지점수”는 연도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다음 중 「해양경찰 예절 규칙」상 경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훈련 등 임무수행으로 부득이한 때
 - ② 상급자와 대화 중 그보다 하위 상급자를 만날 때
 - ③ 형사 등 사복을 입고 특수근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양경찰관서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때
 - ④ 작업 또는 휴식 중일 때
17. 다음 <보기>는 디젤기관의 연료분사조건에 관한 설명이다. 무화(atomization)가 잘되기 위한 조건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노즐(nozzle)의 배압을 크게 해야 한다.
 - ㉡ 연료분사(fuel injection) 압력을 낮게 해야 한다.
 - ㉢ 공기의 온도가 낮아야 한다.
 - ㉣ 연료유의 점도(viscosity)가 높을수록 유립은 작게 된다.
 - ㉤ 노즐(nozzle)의 직경을 크게 해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다음 중 조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조(Stand of tide)는 고조에서 저조로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해면의 승강이 중지된다고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② 바다 표면의 주기적인 상승과 하강 및 그에 따르는 해수의 흐름은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생긴다.
 - ③ 대조(Spring tide)는 상현과 하현이 지난 뒤 1~2일 만에 조차가 극대로 되었을 때를 말한다.
 - ④ 우리나라에서의 조석 주기는 약 12시간 25분이다.

19. 다음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민원인이 민원사항을 접수할 때 신청인에게 안내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 ② 소청제기 기간
 - ③ 처리 기준과 절차
 - ④ 예상 처리소요기간

20. 다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공공기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국회
- ② 한국방송공사
- ③ 한국증권업협회
-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21. 다음 <보기> 중 「해양경찰수사규칙」상 공람 후 종결 조치를 내리는 경우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 ㉡ 이름을 적지 않거나 또는 거짓 이름으로 접수된 경우
 - ㉢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 ㉣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어 1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신고와 같은 내용인 경우
 - ㉤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2. 다음 중 「(해양경찰청)범죄수사규칙」상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의뢰할 때 파악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조회 결과, 범죄사실 개요, 공범, 신체특징
- ② 범행 장소, 수배번호, 죄명코드, 피해자, 방언
- ③ 수배종별이 지명수배 또는 통보자의 경우 영장 명칭·번호
- ④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머리카락, 체격, 활동지

23. 다음 중 해도의 기준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약최저저조면 - 노출암
- ② 평균수면 - 간출암
- ③ 기본수준면 - 수심, 평균수면의 높이
- ④ 약최고고조면 - 등대 높이

24. 다음 <보기>는 「(해양경찰청)범죄수사규칙」상 중요지명피의자의 종합 공개수배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보기 > —
- ㉠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명수배를 한 후, ()개월이 경과해도 검거하지 못한 강력범 및 부정부패 사범 등의 중요지명수배피의자를 매년 ()월과 ()월 연 2회 선정하여 수사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 수사국장은 공개수배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년 ()월과 ()월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수배 할 수 있다.
 - ㉢ 공개수배위원회를 두는 경우 위원장은 형사과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명을 포함하여 ()명 이상 ()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① 55 ② 57 ③ 59 ④ 61

25. 다음 중 수사의 종결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기소중지’는 혐의의 불기소처분으로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않아 잠정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다.
- ② ‘혐의없음’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책임조각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 ③ ‘죄가안됨’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 ④ ‘공소권없음’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나 형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26. 다음 중 「(해양경찰청)범죄수사규칙」상 변사자를 검시할 때 면밀히 조사해야 할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발견일시와 발견자
- ② 발견자의 인상, 특징, 착의
- ③ 사망의 추정연월일
- ④ 사인의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

27. 다음 <보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조사의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보기 >
- ㉠ 사법경찰관은 조사,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에 대해 오후 ()시부터 오전 ()시까지 사이에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 ㉡ 피의자를 체포한 후 ()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조서에 명시하고 심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시간을 초과하지않도록 해야 한다.
 - ㉣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 ㉤ 검사는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에게 조사도중에 최소한 ()시간마다 ()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 ① 87 ② 89 ③ 91 ④ 93

28. 다음 중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의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 ④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9. 다음 중 「(해양경찰청)범죄수사규칙」상 장물수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해양경찰청장은 범죄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물과 관련 있는 영업주에 대하여 장물수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녹색의 장물수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보통 장물수배서의 경우 청색으로 구분하여 발급해야 한다.
- ④ 해양경찰관이 장물수배를 할 때에는 발견해야 할 장물의 명칭, 모양, 상표, 품질 그 밖의 특징 등을 명백히 하고 사진, 도면, 동일한 견본·조각을 첨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0. 다음 중 「(해양경찰청)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상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기능 간 협의 등 관련 활동
- ②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 ③ 피해자 지원 전문기관·단체 및 지역사회 지원 체계로의 연계
- ④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 총괄과 그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31. 다음 <보기> 중 「(해양경찰청)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상 위원회와 이를 설치할 수 있는 관서에 대한 설명이 가장 옳게 연결된 것은?

< 보기 >

구분	신변보호 심사위원회	피해자보호 추진위원회
㉠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 ① ㉠ ② ㉡ ③ ㉢ ④ ㉣

32. 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상 검사의 재수사 요청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검사는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 그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이 재수사를 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한다.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아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데 오류가 있는 경우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33. 다음 <보기> 중 「경범죄처벌법(시행령 포함)」 상 범칙금액이 5만원인 범칙행위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경우
 - ㉡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
 - ㉢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의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경우
 - ㉣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경우
 - ㉤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경우
 - ㉥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경우

34. 다음 중 추진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출류의 측압작용 효과에 있어 가변피치에서는 외선식보다 내선식이 유리하다.
 - ② 쌍추진 함정에서 어느 한쪽 주기만 후진하는 경우 양현을 모두 후진으로 놓고 타를 쓰는 경우와 반대 방향으로 후진 선회한다.
 - ③ 쌍추진 함정은 고정피치와 가변피치에 관계없이 내선식과 외선식으로 구분되며, 해양경찰 경비함정은 모두 외선식을 채택하고 있다.
 - ④ 해양경찰 경비함정에서 사용되는 SRB(Single Reverse Bucket) 방식의 경우 후진 시 ‘키 오른편’을 하게 되면 함미가 우회두하려는 특성이 있다.
35. 다음 중 선박의 복원성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수량의 변화 없이 선내 중량을 선수미선 방향으로 이동시켜 약간의 트림(Trim)이 생겼을 때, 새로운 수선면과 과거의 수선면이 반드시 통과하는 점을 부면심(F)이라 한다.
 - ② 선박이 똑바로 떠 있을 때 부력의 작용선과 경사된 때 부력의 작용선이 만나는 점을 메타센터(M)라 한다.
 - ③ 선체의 전체 중량이 한 점에 모여있다고 생각되는 점을 무게중심(G)이라 한다.
 - ④ 메타센터(M)가 무게중심(G)보다 위쪽에 위치하면 선박은 불안정 평형 상태가 된다.
36. 다음 중 선박자동식별장치(AI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흘수 및 도착예정시간(ETA)에 관한 정보는 매 6분마다 또는 요구에 따라 전송이 이루어진다.
 - ② UTC로 표시하는 시간, 대지침로 및 선회율 등은 동적 정보에 해당된다.
 - ③ 적재 화물 및 안테나 위치 등은 정적 정보에 해당된다.
 - ④ 항해 중의 대지속력 및 선수방위에 관한 정보는 매 3분마다 자동으로 전송된다.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37. 다음 중 전류와 전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플레밍의 왼손법칙에서는 왼손의 검지를 자기장의 방향으로, 중지를 전류의 방향으로 했을 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이 된다.
 - ② 주파수가 120 Hz 이고 극수가 10인 경우 회전수는 1,200 rpm 이다.
 - ③ 전압계는 측정하고자 하는 부하에 직렬로 연결해야 하며, 전류계는 부하에 병렬로 연결해야 한다.
 - ④ 교류발전기를 병렬운전하는 경우 선로의 길이에 따라 전압변동이 커질 수 있다.

38. 다음 <보기> 중 투색총 발사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피 예선에서는 레이더 스캐너(안테나) 회전을 정지시킨다.
 - ㉡ 투색총 발사 시 반드시 장성 2발을 연속적으로 시행하여 피 예선 승조원들이 충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며, 피 예선측에서 장성 1발을 회신한 후에 발사한다.
 - ㉢ 투색총의 최대사정거리는 320미터 정도이며, 황천시에는 현장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약 45도의 각도로 발사한다.
 - ㉣ 발사 시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발사자를 제외한 전 승조원은 안전구역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 ㉤ 경비함정 간 피 예선 훈련 상황의 경우에는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피 예선 측 함미 약 10미터 해상방향으로 발사한다.

39. 다음 중 냉동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팽창밸브는 저압의 액체냉매를 팽창시켜 높은 압력과 낮은 온도를 유지시켜 증발기의 저온에서도 열을 흡수할 수 있도록 포화온도를 낮추어 준다.
 - ② 수액기 및 응축기 내부에 냉매가 부족한 경우 응축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 ③ 압축기에서 나온 고온 고압의 가스는 응축기에서 응축되어 고온 저압의 액체로 수액기에 모이게 되고 팽창밸브를 거쳐 감압된 저온 저압의 가스는 증발관에서 증발한다.
 - ④ 장치를 순환하는 냉매가 부족할 경우에는 액체 냉매의 유동상태를 알 수 있도록 팽창밸브 직전에 설치된 유리관에서 냉매의 기포가 보일 수 있다.

40. 다음 중 레이더(R/D) 화면의 지시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North-up방식은 자함의 선수방위가 변하더라도 화면이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레이더에 의한 선위 측정, 해역 감시 등에 적합하다.
 - ② Course-up방식은 변침 시 선수선(H/L)이 선회되므로 변침 중에도 안정된 주변 영상을 얻을 수 있다.
 - ③ Head-up방식은 물표를 함교에서 바라보는 상태 그대로 자함 선수선(H/L)이 좌우로 표시되기 때문에 물표의 시각 확인이 용이하다.
 - ④ 상대운동 지시방식(Relative Motion display)에서는 자함 이동 시 육지 등 고정물표가 화면상에 고정되어 있고, 움직이는 자선 또는 타선이 화면상을 이동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항공법규

1. 다음 중 <보기>의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보기 —

「항공안전법」 제6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은 (㉠)
및 (㉡)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는 (㉢)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 | ㉠ | ㉡ | ㉢ |
|---|----|----|----|
| ① | 지식 | 기량 | 기량 |
| ② | 지식 | 기량 | 지식 |
| ③ | 지식 | 경험 | 지식 |
| ④ | 지식 | 경험 | 경험 |

2. 다음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1조(계기비행 방식 등에 의한 비행·접근·착륙 및 이륙) 상 조종사가 계기비행방식으로 착륙하기 위하여 접근 시 활주로 시각참조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활주로지단표시(threshold marking)
② 진입각지시등(VASI 또는 PAPI)
③ 접지구역표시(touchdown zone marking)
④ 활주로중심선등(runway centerline light)

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0조(통신) 상 “계기비행 기상상태에서 통신이 두절되었을 경우, 접근 예정 시간과 도착 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으로부터 () 이내에 착륙해야 한다.” 다음 중 괄호 안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10분 ② 20분 ③ 30분 ④ 60분

4. 다음 <보기>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위험물 운송허가등) 상 “폭발성이나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
|-----------|-----------|
| ㉠ 가소성 물질류 | ㉡ 산화성 물질류 |
| ㉢ 부식성 물질류 | ㉣ 가스류 |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6조제3항 상 “항공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 외의 비행기를 계기비행 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면 1개 이상의 목적지 교체 비행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음 중 목적지 교체 비행장의 기상상태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최소 1개의 목적지 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도착 예정시간에 해당 비행장 운영 최저치 이상일 경우에 비행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최소 1개의 목적지 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가 이륙 예정시간에 해당 비행장 운영 최저치 이상일 경우에 비행을 시작하여야 한다.
③ 목적지 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도착 예정시간 1시간 전부터 1시간 후까지 해당 비행장 운영 최저치 이상일 경우에 비행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목적지 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도착 예정시간 1시간 전부터 도착 예정시간까지 해당 비행장 운영 최저치 이상일 경우에 비행을 시작하여야 한다.

6. 다음 중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장애물 제한 표면의 기준) 상 계기접근과 비계기접근에 있어서 진입구역의 길이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계기접근 : 10,000 m ,
비계기접근(육상비행장) : 3,000 m
② 계기접근 : 15,000 m ,
비계기접근(육상비행장) : 4,000 m
③ 계기접근 : 15,000 m ,
비계기접근(육상비행장) : 5,000 m
④ 헬기장 진입구역의 길이 : 1,000 m

7. 다음 <보기> 중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의 기본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항행안전시설
㉡ 기상관측시설
㉢ 항공기 급유시설 및 유류 저장시설
㉣ 공항 이용객에 대한 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 항공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비행중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할 수 있는 초단파(VHF) 또는 극초단파(UHF) 무선전화 송수신기에 필요한 성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행장 또는 헬기장에서 관제를 목적으로 한 양방향통신이 가능할 것
- ② 무선전화 송수신기 2대를 설치할 경우 그 중 1대는 구명보트에 설치해야 한다.
- ③ 비행 중 계속하여 기상정보를 수신할 수 있을 것
- ④ 항공비상주파수(121.5 MHz 또는 243.0 MHz)를 사용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과 통신이 가능할 것

9. 다음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0조 상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하고자 할 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항공청장
- ② 해양수산부장관
- ③ 국방부장관
- ④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10. 다음 중 <보기>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 보기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8조(긴급항공기의 운항절차) 제2항
긴급항공기를 운항한 자는 운항이 끝난 후 (㉠)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긴급항공기 운항결과 보고서를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① | 12시간 | 지방항공청장 |
| ② | 12시간 | 국토교통부장관 |
| ③ | 24시간 | 지방항공청장 |
| ④ | 24시간 | 국토교통부장관 |

11. 다음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 상 자격증명을 한정하는 항공기의 종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행선 ② 활공기
- ③ 항공우주선 ④ 초경량비행장치

12. 다음은 「항공안전법」상 각 공역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제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
- ② 비관제공역 :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비행에 관한 조언·비행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
- ③ 통제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 ④ 주의공역 :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기타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13.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 시 최저비행고도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표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의 고도
- ② 지표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200미터의 고도
- ③ 지표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250미터의 고도
- ④ 지표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300미터의 고도

14.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이양의 적용 특례를 적용받는 항공기
- ② 국내에서 수리·개조 또는 제작한 후 수출할 항공기
- ③ 항공기의 제작정비 또는 수리·개조 후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 ④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감항증명을 신청한 항공기

15.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 및 유효기간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공기관사 - 제2종 - 12개월
 - ② 항공교통관제사 - 제2종 - 24개월(40세 이상 50세 미만인 경우)
 - ③ 자가용 조종사 - 제2종 - 24개월(40세 이상 50세 미만인 경우)
 - ④ 사업용 조종사 - 제1종 - 6개월(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

16. 다음 중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

「공항시설법」 제56조(금지 행위) 제1항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허가 없이 ()에
출입해서는 아니된다.

- ① 계류장
- ② 격납고
- ③ 항행안전시설이 설치된 지역
- ④ 급유시설

17. 다음 중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공항시설법」 제36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제2항
장애물 제한표면 밖의 지역에서 지표면이나 수면
으로부터 높이가 () 이상 되는 구조물을 설치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
장애주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① 45미터 ② 60미터
- ③ 90미터 ④ 120미터

18.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공종사자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1차 위반 시 효력정지 기간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7일 ② 10일 ③ 20일 ④ 30일

19. 다음 중 「항공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상업서류송달업
 - ② 항공기대여업
 - ③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④ 항공레저스포츠사업

20. 다음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 상 항공 정비사의 자격증명을 한정하는 정비분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기체(機體) 관련 분야
 - ② 왕복발동기 관련 분야
 - ③ 프로펠러 관련 분야
 - ④ 전자·전기·계기 관련 분야

21.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지상 접근경고장치(GPWS)’는 조종사에게 경고를 제공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다음 중 그 성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도한 강하율이 발생하는 경우
 - ② 지형지물에 대한 과도한 접근율이 발생하는 경우
 - ③ 이륙 또는 복행 후 과도한 고도의 손실이 있는 경우
 - ④ 계기활공로 방위각을 벗어나 과도한 이탈이 이루어진 경우

22.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운항관리사가 자가용 조종사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제되는 과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보기 >

㉠ 공중항법 ㉡ 항공기상

㉢ 항공법규 ㉣ 항공교통, 통신, 정보업무

- ① ㉠, ㉡ ② ㉠, ㉢
- ③ ㉢, ㉣ ④ ㉡, ㉣

23.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항공기등의 검사관 자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③ 항공기술 관련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항공기의 설계, 제작, 정비 또는 품질보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④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설계, 제작, 정비 또는 품질 보증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4. 다음 <보기>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항공기 소유자에게 발급되는 운용한계 지정서에 포함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보기 >

㉠ 항공기의 모델

㉡ 항공기의 종류 및 등급

㉢ 항공기의 국적

㉣ 항공기의 수입국

㉤ 항공기의 제작일련번호

㉥ 감항증명번호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25.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탑재용 항공일지에 적어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공기 등록부호 및 등록 연월일
 - ② 구급용구의 탑재위치 및 수량
 - ③ 항공기의 제작자·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 ④ 비행에 관한 기록
26.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가 시계비행을 할 경우 추가 하여야 할 연료의 양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순항속도로 30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 ② 순항속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 ③ 순항속도로 60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 ④ 순항속도로 90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27. 다음 중 「공항시설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착륙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이수(離水) 포함]과 착륙[착수(着水) 포함]을 위하여 상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
 - ② 비행장에 설치된 항공기의 이륙·착륙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 ③ 비행장 외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이수(離水) 포함] 또는 착륙[착수(着水) 포함]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
 - ④ 활주로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
28.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항공기준사고’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운항 중 엔진 덮개가 풀리거나 이탈한 경우
 - ②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되는 근접비행(다른 항공기와의 거리가 500피트 미만으로 근접하였던 경우를 말한다)이 발생한 경우
 - ③ 운항 중 발동기 화재가 발생한 경우
 - ④ 조종사가 연료량으로 인해 비상선언을 한 경우
29. 다음 중 「공항시설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불빛, 색채 또는 형상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항공등화 중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진입로를 알려주기 위해 진입구역에 설치하는 등화”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비행장등대(Aerodrome Beacon)
 - ② 진입등시스템(Approach Lighting System)
 - ③ 진입각지시등(Precision Approach Path Indicator)
 - ④ 진입구역등(Final Approach & Take-off Area Lights)

30. 다음 중 「공항시설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계기접근이 아닌 접근(비계기접근)’에 사용되는 활주로가 설치되는 비행장에 적용되는 장애물 제한 표면의 종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추표면
- ② 수평표면
- ③ 전이표면
- ④ 착륙복행표면

31.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등록기호표’와 관련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공기 등록기호표의 부착시기는 항공기 등록 후이다.
- ② 항공기 소유자등이 항공기 등록기호표를 부착한다.
- ③ 등록기호표는 세로 5센티미터, 가로 7센티미터의 내화금속으로 만든다.
- ④ 항공기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 항공기 등록기호표는 주(主)출입구 윗부분 바깥쪽에 부착한다.

32. 다음 <보기>는 「공항시설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항공등화 관리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 항공등화의 관리자는 항공등화에 관한 업무 일지를 갖춰 두고 (가)년 이상 보존할 것

㉡ 공항·비행장의 등화는 항공기가 착륙하는 경우에는 해당 착륙 예정시각 (나)시간 전에 점등 준비를 하고 그 착륙 예정시각보다 최소한 (다)분 전에 점등할 것

㉢ 공항·비행장의 등화는 항공기가 이륙하는 경우에는 이륙한 후 최소한 (라)분간 점등을 계속할 것


	가	나	다	라
①	2	1	10	5
②	2	2	5	10
③	1	1	10	5
④	1	2	5	10

33. 다음 중 「공항시설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계기착륙시설(ILS)의 구성장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방위각제공시설(LLZ)
- ② 활공각제공시설(GP)
- ③ 마커장비
- ④ 마이크로파착륙시설

34.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보기>의 ‘항공기 유도원 수신호’의 의미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오른손의 유도봉을 위쪽을 향하게 한 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왼손의 유도봉을 아래로 향하게 하면서 몸쪽으로 붙인다.

- ① 출입문의 확인
- ② 좌회전(조종사 기준)
- ③ 항공기 안내(Wingwalker)
- ④ 엔진 정지

35. 해양경찰청 무안항공대 B705(CN-235)호기가 서해상 경도 124도 이서(以西) 중국 비행정정보구역 내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추격 중 중국 공군기에 요격을 당하였다. 요격 항공기가 B705호기의 진로를 가로지르지 않고 90°로 상승선회를 하며 급속히 이탈할 때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알았다. 지시를 따르겠다.”는 피요격 항공기의 행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랜딩기어를 내린다.
- ② 날개를 흔든다.
- ③ 항행등을 규칙적으로 깜박인다.
- ④ 항행등을 불규칙적으로 깜박인다.

36.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가 시계비행 시 갖추어야 할 항공계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사지시계
- ② 시계
- ③ 속도계
- ④ 정밀기압고도계

37.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비 훈련 프로그램
 - ② 정비사의 직무능력 평가
 - ③ 항공기등, 장비품 및 부품의 정비방법 및 절차
 - ④ 기술관리
38.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다른 항공기의 후방 좌·우 70도 미만의 각도에서 그 항공기를 앞지르기하려는 항공기의 항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앞지르기당하는 항공기의 위쪽을 통과해야 한다.
 - ② 앞지르기당하는 항공기의 아래쪽을 통과해야 한다.
 - ③ 앞지르기당하는 항공기의 오른쪽을 통과해야 한다.
 - ④ 앞지르기당하는 항공기의 왼쪽을 통과해야 한다.
39. 다음 중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공기의 등록원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공기의 등급 ② 항공기의 제작자
 - ③ 등록기호 ④ 항공기의 등록 연월일
40. 다음 중 「항공안전법」 제1조(목적)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안전한 항행을 위한 방법 규정
 - ②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 규정
 - ③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④ 국가, 항공사업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규정